

정책보고서 2012-

해외 주요국의 복지현황 조사

고경환 · 장영식 · 김미곤 · 신윤정 · 신화연 · 이윤경
김성희 · 박수지 · 이수옥 · 김창환 · 문유경 · 강지원 · 김태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회서비스의 발달 등 복지제도 전반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소득 2만불 시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못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 복지의 확대 사이에서 야기된 갈등은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의 논쟁을 촉발시키며, 향후 ‘한국적인 복지국가’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 2만달러와 5천만 인구 시대를 연 우리나라의 복지위상을 구축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독일과 일본, 미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설계를 답습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사민주의형 국가(스웨덴, 핀란드), 국가주도형 복지체계를 구축한 국가(독일, 프랑스), 잔여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한 자유주의형 국가(미국, 영국)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레짐을 대표하는 국가들에 대한 복지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국가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유교형 국가인 일본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 본 연구는 인구, 복지투자 등의 개괄과 함께 국민연금, 보육, 교육, 보건 의료 등 생애주기와 관련된 영역,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여성 등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과 함께 조사대

상국 주재 대사관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국제기구들이 이들 국가를 포함하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복지 현황과 그 속에 담긴 시사점까지 폭넓게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부문과 사회복지지출, 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계와 현황에 기초한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두 번째 의의는 이러한 폭넓은 복지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제도와 통계를 기초로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복지전반에 대한 현황과 제도를 소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보건의료부문의 장영식 선임연구위원, 저소득 및 기초생활보장부문의 김미곤 연구위원, 보육 및 아동부문의 신윤정 연구위원, 국민연금부문의 신화연 부연구위원, 노인부문의 이윤경 부연구위원, 장애인 부문의 김성희 연구위원과 박수지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이수옥 박사가 주택부문을,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박사가 교육부문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박사가 여성부문의 집필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기까지 본원의 강지원 연구원과 김태은 연구원의 노력이 있었다.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동안 조언과 협력을 해주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미래사회전략과 임형철 과장과, 연구 진행과 원고 검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미래사회전략과 이양현 사무관, 해외 주요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관계자께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제1장 인구구조	1
1. 총인구	1
2. 인구증가율(전년도 대비)	3
3. 부양비	6
4. 합계출산율의 변화	10
5. 기대수명	12
6.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15
7.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16
 제2장 복지투자 일반	19
1. OECD SOCX 담당자	19
2.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중	19
3. 저소득층의 기준과 규모	23
4. 베이비부머의 기준과 규모	28
5.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31
6.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비중	35
 제3장 국민연금	39
1. 국민연금 체계 개요	39
2. 공적연금 제도개요	40
3. 공적연금 적용현황 및 운영기관	47
4. 공적연금 수급현황	50
5. 공적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52
6.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3
7. 최근 개혁동향 및 시사점	56

제4장 보육	61
1. 출산 지원 정책	61
2. 보육 시설 현황	64
3. 직장 보육 시설 현황	66
4. 만5세 이하 아동의 보육 형태별 이용 비율	68
5.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	71
6. 방과후 보육	73
7. 아동 수당	75
제5장 교육	79
1. 무상교육	79
2. 사교육	83
3. 학교 급식	85
4. 문해율	91
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92
6. 교사 1인당 학생수	94
7. 고등교육 이수율	95
8. 대학 등록금 수준	96
제6장 보건·의료	99
1. 영아사망률	99
2. 자살에 의한 사망률	101
3. 암에 의한 사망률	102
4. 병원 병상 수	104
5. 인구대비 의사 수	106

6. 전문분야별 의사의 분포	107
7. 병원 수	110
8.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111
9. 국민 1인당 의료비	113
10. 의료비의 공공지출 및 가계지출 비중	115
11.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	117
12. 제왕절개	118
제7장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121
1. 부양의무자	122
2. 기초보장 급여수준	126
3.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128
4. 기초보장제도 재정	130
5. 기초보장제도의 정책방향	132
제8장 장애인	135
1. 장애출현율	135
2. 장애인 고용률	137
3. 장애인 빈곤율	139
4. 장애급여 수급율	142
5. 재활 및 고용프로그램	144
제9장 노인	149
1. 노인의 기준연령	149
2.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법	150

3. 노인복지관련 정부부처	151
4. 노인인구 비율	153
5. 노인 경제활동 비율	155
6. 노인 빈곤율	157
7. 노인부양비율	158
8. 노인 경제활동 지원 제도	160
9. 평균 은퇴 연령	162
10. 장기요양 자원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 규모	164

제10장 아동·여성

1. 아동빈곤율	167
2. 아동 복지 시설	170
3. 여성과 남성의 65세 연령의 기대여명	173
4. 여성 고용률	176
5. 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178
6. 아동 돌봄 소요시간	180
7. 남녀임금격차	182
8. 산전후휴가제도	184
9. 육아휴직제도	187

제11장 주택

1. 1·2인 가구 비중	189
2. 평균 가구원수	191
3. 주택 재고수	193
4. 공가율	194

5. 1천명당 주택수	196
6. 자가점유율	198
7. 자가소유율	200
8. 멸실주택수	201
9. 주택건설호수	203
10. 주택가격지수	205
11. 임대료지수	207
12. PIR(Price to Income Ratio)	209
13. 평균주택면적	210
14. 1인당 주거면적	211
15.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213
16. 임대료보조 가구 비율	214
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216
제12장 자발적 민간사회복지부문	219
1.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219
2.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222
참고문헌	227
부록 (해외 주요국의 복지현황 조사표)	231
표 목 차	
〈표 1-1〉 최근 30년간 인구규모의 변화	3

〈표 1-2〉 최근 30년간 인구증가율의 변화	5
〈표 1-3〉 각국의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현황	8
〈표 1-4〉 부양비의 추이(1980~2009)	9
〈표 1-5〉 최근 30년간 합계출산율의 변화(연평균증가율)	12
〈표 1-6〉 최근 30년간 기대수명의 변화(연평균증가율)	14
〈표 1-7〉 국가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2010)	15
〈표 1-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18
〈표 2-1〉 핀란드의 복지지출	20
〈표 2-2〉 영국의 복지지출	20
〈표 2-3〉 독일의 복지지출	21
〈표 2-4〉 일본의 복지지출	21
〈표 2-5〉 정부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추이	22
〈표 2-6〉 독일의 조사자료별 빈곤위험률과 빈곤위험선	24
〈표 2-7〉 주요국가의 상대빈곤율	27
〈표 2-8〉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GDP 대비)	34
〈표 2-9〉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지출 현황	36
〈표 3-1〉 연금체계 개요	39
〈표 3-2〉 공적연금제도 적용현황	47
〈표 3-3〉 공적연금제도 운영기관 및 도입시기	48
〈표 3-4〉 공적연금 수급현황	50
〈표 3-5〉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	51
〈표 3-6〉 정부의 공적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52
〈표 3-7〉 사업주의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52
〈표 3-8〉 연금의 소득대체율	54
〈표 4-1〉 OECD 국가의 출산 지원 정책 유형	62
〈표 4-2〉 국가별 출산 지원 정책	62

〈표 4-3〉 국가별 보육시설수	64
〈표 4-4〉 국가별 직장 보육시설 현황과 인센티브 제도	67
〈표 4-5〉 국가별 1~5세 아동의 주된 보육시설 이용 방법	69
〈표 4-6〉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2008)	72
〈표 4-7〉 방과후보육 현황	74
〈표 4-8〉 주요 국가의 아동 수당제도	76
〈표 5-1〉 무상 교육 종료 단계	80
〈표 5-2〉 국가간 의무교육 비교	80
〈표 5-3〉 국가간 무상교육 비교	80
〈표 5-4〉 무상교육 지원 금액의 범위	81
〈표 5-5〉 무상교육 지원 방식	82
〈표 5-6〉 국가별 GDP 대비 공·사부담 공교육비 비율	84
〈표 5-7〉 국가간 사부담 공교육비 비교	84
〈표 5-8〉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	85
〈표 5-9〉 국가별 1끼당 급식비	86
〈표 5-10〉 국가간 1끼당 급식비 비교	86
〈표 5-11〉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	87
〈표 5-12〉 국가간 무상급식 제공 학생 비율 비교	87
〈표 5-13〉 주요국의 무상급식 제공 기준	88
〈표 5-14〉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급	89
〈표 5-15〉 무상 급식 지원 방식	89
〈표 5-16〉 국가별 급식경비 부과 체계	90
〈표 5-17〉 국가별 문해율	92
〈표 5-18〉 국가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93
〈표 5-19〉 국가별 교사 1인당 학생수	94
〈표 5-20〉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율(2009)	95

〈표 5-21〉 국가별 대학 등록금 수준	97
〈표 6-1〉 영아사망률(2009)	100
〈표 6-2〉 자살의 연령별표준화 사망률(2009)	101
〈표 6-3〉 전체 암의 연령표준화 사망률(2009)	103
〈표 6-4〉 병원 병상 수(2009)	105
〈표 6-5〉 인구대비 의사 수 분포(2009)	106
〈표 6-6〉 의사 분포	108
〈표 6-7〉 병원 수	110
〈표 6-8〉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112
〈표 6-9〉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113
〈표 6-10〉 공공지출 및 가계지출 비율	116
〈표 6-11〉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	117
〈표 6-12〉 출생아 천명당 제왕절개 건수(2009)	119
〈표 7-1〉 사회보장제도 분류	122
〈표 7-2〉 각국의 부양의무자 기준	123
〈표 7-3〉 APW 대비 최저소득보장의 최대현금급여 비율(2002년)	127
〈표 7-4〉 기초보장제도 운영주체 및 현금급여 지급방식	129
〈표 7-5〉 주요국의 GDP대비 공공부조 지출의 비중 (2003)	130
〈표 8-1〉 2000년대 중반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 장애출현율	136
〈표 8-2〉 OECD 국가의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137
〈표 8-3〉 장애인가구 빈곤율 및 상대 빈곤율	140
〈표 8-4〉 장애 급여(Disability benefit) 수급율	143
〈표 8-5〉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장애관련 프로그램 지출 비율	145
〈표 9-1〉 국가별 노인 기준 연령	149
〈표 9-2〉 국가별 노인복지 관련법	151
〈표 9-3〉 노인복지 소관부처	152

〈표 9-4〉 국가별 노인인구 비율(2010)	153
〈표 9-5〉 국가별 노인인구 비율 추이	153
〈표 9-6〉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현황(2010)	155
〈표 9-7〉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2000-2010년)	156
〈표 9-8〉 노인 빈곤율 현황(2008년)	158
〈표 9-9〉 노인부양비율 현황(2008)	159
〈표 9-10〉 노인부양비율 추이(1990-2010년)	159
〈표 9-11〉 국가별 노인 경제활동 지원 제도	161
〈표 9-12〉 국가별 평균은퇴연령(2009)	162
〈표 9-13〉 국가별 성별 평균은퇴연령 추이	163
〈표 9-14〉 장기요양을 위한 정부예산 규모	165
〈표 10-1〉 가족유형별 아동빈곤율(2008)	168
〈표 10-2〉 국가별 아동 복지 시설 현황	171
〈표 10-3〉 65세 연령의 기대여명(2007)	174
〈표 10-4〉 주요 각국의 학력별 고용률 남녀차(2009)	178
〈표 10-5〉 주요 국가의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남녀차 추세(1980~2008)	184
〈표 10-6〉 주요 국가별 산전후휴가제도	185
〈표 10-7〉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제도	187
〈표 11-1〉 1·2인 가구 비중	190
〈표 11-2〉 평균 가구원수	192
〈표 11-3〉 주택 재고수	194
〈표 11-4〉 공가율	196
〈표 11-5〉 1천명당 주택수	198
〈표 11-6〉 자가 점유율	199
〈표 11-7〉 자가 소유율	201
〈표 11-8〉 멸실 주택수	202

〈표 11-9〉 주택건설호수	204
〈표 11-10〉 주택가격지수	206
〈표 11-11〉 임대료 지수	208
〈표 11-1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 Price to Income Ratio)	209
〈표 11-13〉 평균 주택 면적	211
〈표 11-14〉 1인당 주거면적	212
〈표 11-15〉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214
〈표 11-16〉 임대료보조 가구 비율	215
〈표 11-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217
〈표 12-1〉 주요 국가의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현황 비교(2007년 기준)	220
〈표 12-2〉 주요 국가의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1980-2007)	221
〈표 12-3〉 자녀양육비이행제도 현황	224
〈표 12-4〉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 비율	225

그림목차

〔그림 1-1〕 주요 국가의 인구규모 비교(2009년 기준)	2
〔그림 1-2〕 주요 국가의 인구증가율 비교(2009년 기준)	4
〔그림 1-3〕 부양비 구성 현황 비교(2009)	7
〔그림 1-4〕 부양비의 추이(1980~2009)	9
〔그림 1-5〕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2009년 기준)	11
〔그림 1-6〕 국가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비율	17
〔그림 2-1〕 여성 1인당 출산 아동의 수	29
〔그림 2-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추계(2007년, 2010년)	32
〔그림 2-3〕 지난 20여년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추이(1990-2007)	33

[그림 6-1] 영아사망률	100
[그림 6-2] 자살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102
[그림 6-3] 전체 암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103
[그림 6-4] 병원 병상 수	105
[그림 6-5] 인구 천명당 의사 수 분포(2009)	107
[그림 6-6] 의사 분포	109
[그림 6-7] 인구 백만명당 병원 수(2009)	111
[그림 6-8]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2009	112
[그림 6-9] 국민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추이	114
[그림 6-10] 공공지출 및 가계지출 비율: 2009	116
[그림 6-11]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 추이	118
[그림 6-12] 출생아 천명당 제왕절개 건수	119
[그림 7-1] 개발도상국의 GDP 대비 기초보장예산 비율	132
[그림 8-1] 2000년대 중반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 장애출현율	136
[그림 8-2] OECD 국가의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율의 변화추이	138
[그림 8-3] 장애인 가구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율	141
[그림 8-4]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수급율	143
[그림 8-5]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장애관련 고용 프로그램 지출 비율	146
[그림 9-1] 고령화 추이(2000-2010년)	154
[그림 9-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2000-2010년)	156
[그림 10-1] 아동빈곤율의 변화 추이(1990년대 중반-2008)	169
[그림 10-2] 65세 연령의 기대여명(1970/ 2007)	175
[그림 10-3] 주요 각국의 남녀 고용률(2009)	177
[그림 10-4] 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2009)	179
[그림 10-5] 아동 돌봄에 소요하는 시간(2007)	181
[그림 10-6] 주요 국가의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중간값 남녀 차이(2009)	183

제1장 인구구조

1. 총인구

가. 인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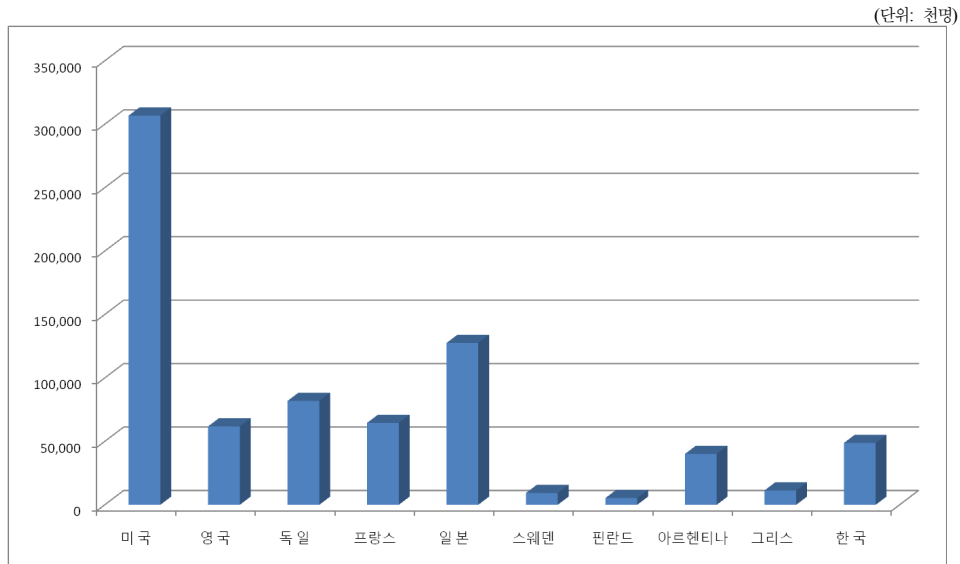
- 한 국가의 총인구 및 인구 성장률 지표 등은 각종 경제·사회정책의 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기초자료임. 특히 인구의 규모, 인구구성, 인구동태 등과 같은 인구의 특성은 경제성장·건강·교육·가족구조·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줌.

나. 국가별 총인구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

- 2009년 현재 국가별 인구규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남.
 - 1억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는 미국(3억명)과 일본(1.2억명).
 - 4천만명 이상의 국가는 독일(8.2천만명), 프랑스(6.4천만명), 영국(6.1천만명), 아르헨티나(4.0천만명) 등.
 - 1천만명 이하의 국가로는 스웨덴(930만명), 핀란드(530만명)임.
 - 우리나라는 약 5천만명으로 프랑스나 영국과 흡사함.

[그림 1-1] 주요 국가의 인구규모 비교(2009년 기준)



자료 :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2) 추이

□ 지난 30여년간 모든 국가에서 인구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 연평균증가율의 격차는 크게 나타남.

○ 지난 30여년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아르헨티나, 미국이 1%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0.5%(프랑스, 그리스), 0.3%(일본, 영국), 그리고 가장 낮은 0.1%(독일) 국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연평균인구증가율 1.0%는 40년 후 인구규모가 기준년도의 1.5배가 되는 속도임. 마찬가지로 연평균인구증가율 0.5%는 80년이 소요되는 낮은 속도임.
- 한국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87%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국가로 분석됨.

〈표 1-1〉 최근 30년간 인구규모의 변화

(단위: 천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인구 증가율
미 국	227,225	237,924	249,623	266,278	282,162	295,517	306,772	1.03
영 국	56,314	56,550	57,248	58,019	58,893	60,224	61,811	0.31
독 일	78,289	77,685	79,433	81,678	82,212	82,469	81,902	0.16
프랑스	55,111	56,624	58,183	59,433	60,762	63,001	64,543	0.54
일 본	116,782	120,754	123,537	125,439	126,870	127,773	127,558	0.32
스웨덴	8,311	8,350	8,559	8,827	8,872	9,030	9,299	0.38
핀란드	4,780	4,902	4,986	5,108	5,176	5,246	5,339	0.38
아르헨티나	28,131	30,354	32,642	34,855	36,931	38,681	40,062	1.23
그리스	9,643	9,934	10,157	10,634	10,917	11,104	11,283	0.56
한 국	38,124	40,806	42,869	45,093	47,008	48,138	48,747	0.87

자료 :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한 국가의 인구는 경제·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인구의 과소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내수 취약, 인구과잉이 야기하는 각종 사회 문제 등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구 관리가 필요함.

2. 인구증가율(전년도 대비)

가. 인구증가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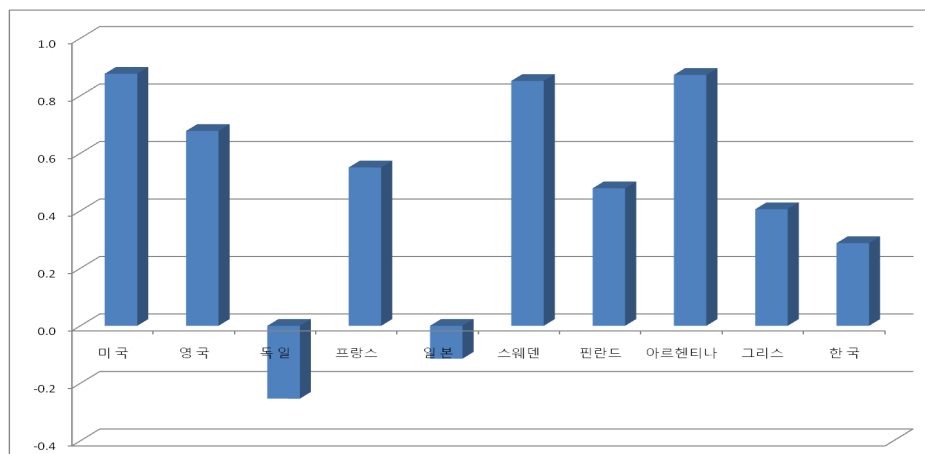
- 인구증가율은 주로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 증감에 좌우되며,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증감의 영향을 받기도 함.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발달에 따라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져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거의 정체되는 현상을 보임.

나. 국가별 인구증가율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

- 2009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1%이하로 정체되어 있으나 개별 국가별 차이가 있음.
 - 인구증가율의 수준에 따라 범주화하면 0.7%이상(미국, 스웨덴, 아르헨티나, 영국), 0.6%이하(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한국), -0.1%이하(일본, 독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2] 주요 국가의 인구증가율 비교(2009년 기준)



자료 :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2) 추이

- 지난 30여년간 인구증가율의 변화에서 국가별 격차가 나타난.
 - 지난 30여년간 인구증가율이 증가한 국가는 영국, 스웨덴이며, 반면 일본, 그리스, 한국, 독일, 아르헨티나는 인구증가율이 감소하였음. 미국, 프랑스, 핀란드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 이후 0.3%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핀란드, 그리스와 유사한 수치임.

〈표 1-2〉 최근 30년간 인구증가율의 변화

(단위: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미 국	1.0	0.9	1.1	1.2	1.1	0.9	0.9
영 국	0.1	0.2	0.3	0.3	0.4	0.6	0.7
독 일	0.2	-0.2	0.9	0.3	0.1	-0.1	-0.3
프랑스	0.4	0.6	0.5	0.4	0.7	0.7	0.6
일 본	0.8	0.6	0.3	0.4	0.2	0.0	-0.1
스웨덴	0.2	0.2	0.8	0.5	0.2	0.4	0.9
핀란드	0.3	0.4	0.4	0.4	0.2	0.3	0.5
아르헨티나	1.5	1.5	1.4	1.3	1.1	0.9	0.9
그리스	1.0	0.4	0.7	0.8	0.3	0.4	0.4
한 국	1.6	1.0	1.1	1.4	0.8	0.2	0.3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0.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인구증가율은 주로 출생과 사망의 자연 증감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낮은 인구증가율은 출산율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구의 순감소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유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3. 부양비

가. 개념

□ 부양비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구구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임.

○ 일반적으로 부양비는 경제활동인구(15~64세 인구)에 대한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로 구분하여 살펴봄.

$$- \text{유소년부양비} = \frac{0 \sim 14 \text{세 인구}}{15 \sim 64 \text{세 인구}} * 100$$

$$- \text{노년부양비} = \frac{65 \text{세 이상 인구}}{15 \sim 64 \text{세 인구}} * 100$$

○ 본 연구에서는 다음세대에 대한 부양과 이전세대에 대한 부양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살펴보고자 함.

$$- \text{부양비} = \frac{(0 \sim 14 \text{세 인구}) + (65 \text{세 이상 인구})}{\text{경제활동인구}(15 \sim 64 \text{세 인구})} * 100$$

나. 국가별 부양비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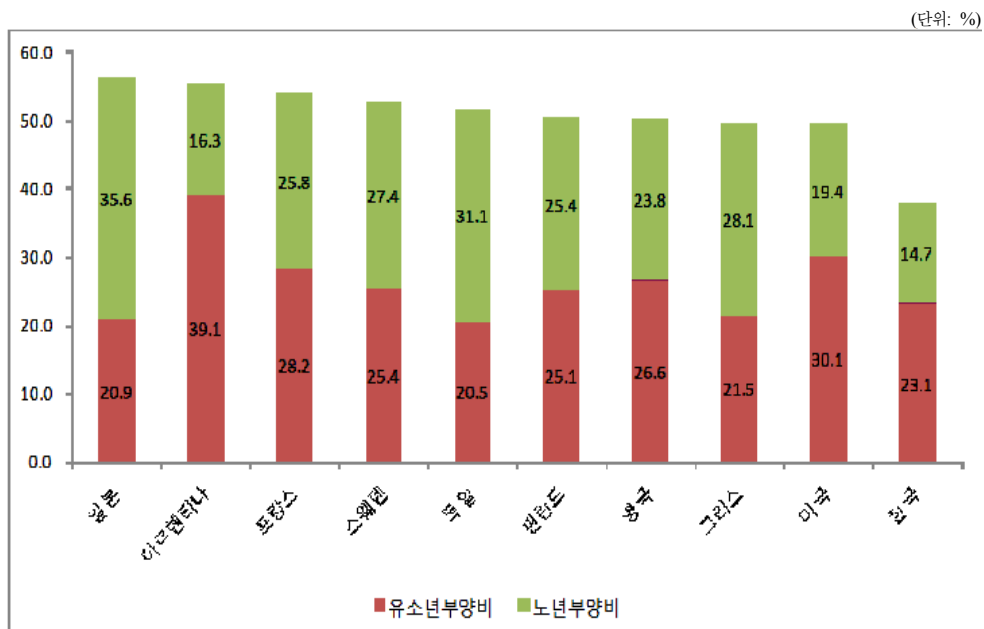
□ 2009년을 기준으로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가장 빠른 일본의 부양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에서 부양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유소년부양비는 아르헨티나(39.1%), 미국(30.1%), 프랑스(28.2%), 스웨덴(25.4%)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의 유소년부양비(23.1%)는 일본(20.9%), 그리스(21.5%) 다음으로 낮은 편

- 유소년부양비가 낮을수록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뜻함.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 유소년인구수가 현저히 낮아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줌.
- 노년부양비는 일본(35.6%), 독일(31.1%), 그리스(28.1%) 순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노년부양비가 높을수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뜻함.
-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 수준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3] 부양비 구성 현황 비교(2009)



자료 :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 2012.3;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표 1-3〉 각국의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15~64세)	유소년인구 (0~1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부양비 (유소년+노년)
미 국	205,137	61,796	39,724	49.5
영 국	40,517	10,780	9,634	50.4
독 일	54,006	11,081	16,815	51.7
프랑스	40,660	11,486	10,490	54.0
일 본	81,493	17,010	29,006	56.5
스웨덴	6,087	1,546	1,668	52.8
핀란드	3,548	890	901	50.5
아르헨티나	25,785	10,074	4,203	55.4
그리스	7,542	1,619	2,122	49.6
한 국	35,374	8,180	5,193	37.8

주 : 2009년 자료임.

자료 :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 2012.3;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2) 추이

- 지난 30여년간 부양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1980년 이후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은 1990년 이후 인구구조로 인한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리스는 부양비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0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표 1-4〉 부양비의 추이(198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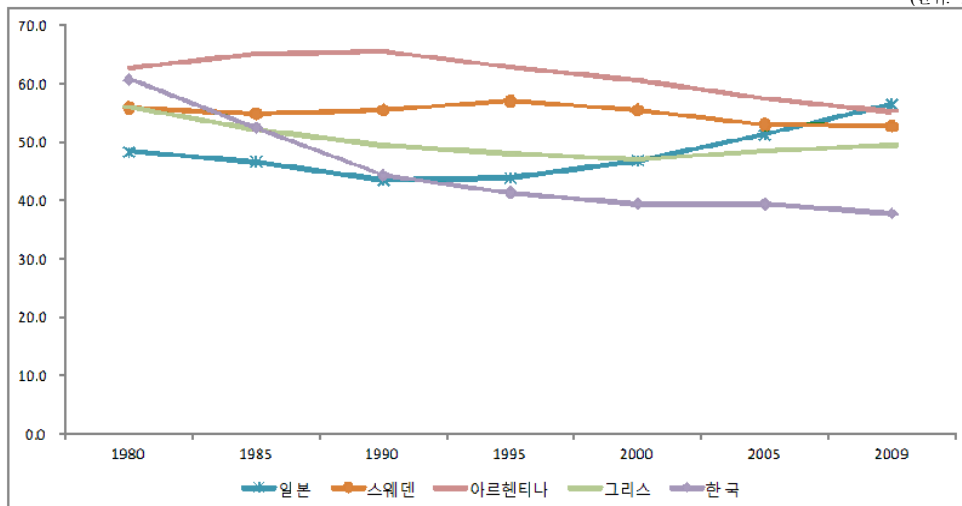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미 국	51.3	50.6	52.0	52.8	51.1	49.3	49.5
영 국	56.1	52.4	53.2	54.6	53.5	50.8	50.4
독 일	51.7	44.0	45.0	46.4	47.2	49.8	51.7
프랑스	57.0	51.9	51.8	53.1	53.7	53.6	54.0
일 본	48.4	46.7	43.5	43.9	46.9	51.3	56.5
스웨덴	56.0	54.8	55.6	57.0	55.5	53.1	52.8
핀란드	47.7	46.8	48.6	49.8	49.4	49.9	50.5
아르헨티나	62.6	65.0	65.6	62.8	60.7	57.5	55.4
그리스	56.1	52.1	49.4	48.1	47.0	48.6	49.6
한 국	60.7	52.5	44.3	41.4	39.5	39.4	37.8

자료 :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 2012.3;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그림 1-4〕 부양비의 추이(1980~2009)

(단위: %)



자료 :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 2012.3;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부양비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음.
 - － 유소년부양비의 감소는 향후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임.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양부담 증가로 연계될 수 있음. 이미 사회복지 관련 인식 조사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4. 합계출산율의 변화

가. 합계출산율의 개요

- 합계출산율은 15세 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49살까지 출산 예상되는 자녀수를 의미하며,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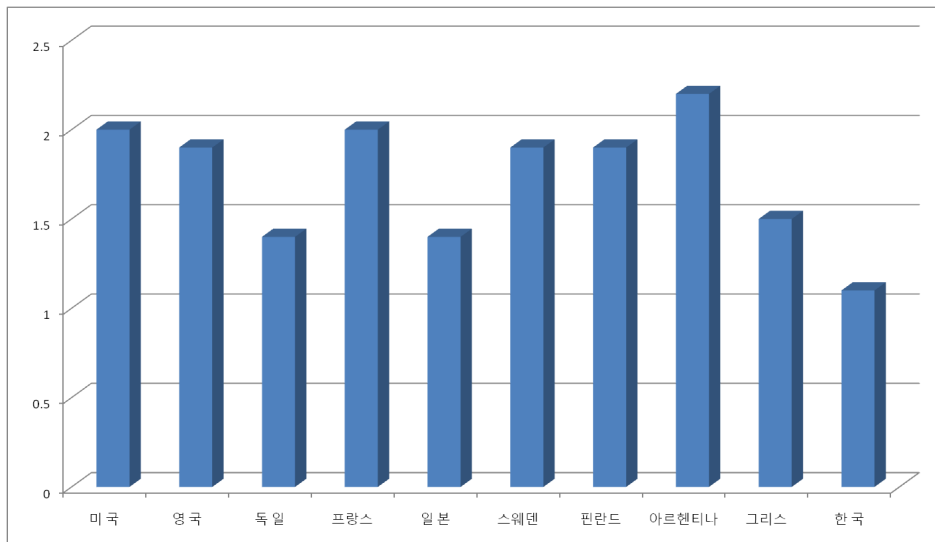
나. 국가별 합계출산율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

- 2009년 현재 국가별 합계출산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가장 높은 국가가 2명(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다음 1.5명(독일, 일본, 그리스), 그리고 가장 낮은 1명(한국) 국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임.

[그림 1-5]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2009년 기준)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2) 추이

□ 합계출산율의 연평균증가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 30여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고, 반면 감소한 국가는 독일, 일본, 그리스, 아르헨티나, 한국임.

- 한국의 합계출산율의 연평균증가율은 -3.17%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 이래로 큰 폭으로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1-5〉 최근 30년간 합계출산율의 변화(연평균증가율)

(단위: 명,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연평균증가율
미 국	1.8	1.8	2.1	2.0	2.1	2.1	2.0	0.36
영 국	1.9	1.8	1.8	1.7	1.6	1.8	1.9	0.00
독 일	1.6	1.4	1.5	1.2	1.4	1.3	1.4	-0.46
프랑스	1.9	1.8	1.8	1.7	1.9	1.9	2.0	0.18
일 본	1.8	1.8	1.5	1.4	1.4	1.3	1.4	-0.86
스웨덴	1.7	1.7	2.1	1.7	1.5	1.8	1.9	0.38
핀란드	1.6	1.6	1.8	1.8	1.7	1.8	1.9	0.59
아르헨티나	3.3	3.1	3.0	2.8	2.5	2.3	2.2	-1.37
그리스	2.2	1.7	1.4	1.3	1.3	1.3	1.5	-1.31
한 국	2.8	1.7	1.6	1.6	1.5	1.1	1.1	-3.17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한국은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최저점에서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 이들 국가의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요구됨.
 - 한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특히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서 이에 대한 공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5. 기대수명

가. 기대수명의 개요

-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하며, 기대수명의 연장은 보건의료 및 소득보장 등 노후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임.

나. 국가별 기대수명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

□ 2009년 현재 국가별 기대수명은 대체로 80세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83세)이고, 다음으로 스웨덴(81.4세), 프랑스(81.0세), 영국(80.4세), 독일(80.3세), 그리스(80.3세), 한국(80.3세), 핀란드(80.0세), 미국(78.2세), 아르헨티나(75.5세) 순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는 80.3세로 영국, 독일, 그리스, 핀란드와 흡사함.

2) 추이

□ 지난 30여년간 모든 국가에서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지난 30여년간 연평균증가율은 한국이 0.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0.3%(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핀란드, 아르헨티나) 국가, 가장 낮은 0.2%(미국, 스웨덴, 그리스) 국가로 구분 할 수 있음.
 - － 한국의 기대수명 연평균증가율은 0.6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1-6〉 최근 30년간 기대수명의 변화(연평균증가율)

(단위: 세,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연평균증가율
미 국	73.7	74.7	75.3	75.7	76.7	77.4	78.2	0.20
영 국	73.2	74.7	75.7	76.6	77.9	79.2	80.4	0.32
독 일	72.9	74.3	75.3	76.6	78.2	79.4	80.3	0.33
프랑스	74.3	75.3	76.8	77.8	79.0	80.3	81.0	0.30
일 본	76.1	77.6	78.9	79.6	81.2	82.0	83.0	0.30
스웨덴	75.8	76.8	77.6	78.8	79.7	80.6	81.4	0.25
핀란드	73.6	74.4	75.0	76.6	77.7	79.1	80.0	0.29
아르헨티나	69.5	70.6	71.5	72.6	73.7	74.7	75.5	0.29
그리스	75.3	76.0	77.1	77.5	78.0	79.2	80.3	0.22
한 국	65.9	68.7	71.4	73.5	76.0	78.5	80.3	0.68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UNPD,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의 개선 및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인력의 증가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임.
 - － 노후소득, 주거환경, 보건의료, 돌봄영역 등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6.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의 개요

- 경제활동인구는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로 국가경제의 바탕이 되며, 취업자 수는 국가경제의 활력도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함.

나. 국가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현황

-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는 경제활동인구대비 취업자 비율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함.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각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
- 2010년을 기준으로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96.28%이고, 다음으로 94%(일본), 92%(독일, 영국, 스웨덴, 핀란드), 90%(미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로 87.47%임.

〈표 1-7〉 국가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2010)

(단위: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A)	취업자 수(B)	B/A*100
미 국	153,889	139,064	90.37
영 국	31,522	29,038	92.12
독 일	41,683	38,738	92.93
프랑스	28,345	22,731	80.19
일 본	65,899	62,563	94.94
스웨덴	4,961	4,545	91.63
핀란드	2,662	2,438	91.58
그리스	5,017	4,389	87.47
한 국	24,748	23,829	96.28

자료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MEI)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수는 9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수치가 최근 젊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보다 높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관련 통계의 기준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 부분은 배제되고 있음.
 - － 실업자를 고용에 연계하는 정책의 수혜 대상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으로 연계하는 정책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7.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가.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개요

- 한 국가의 건강상태가 증진됨에 따라 총 사망자가 상대적 크기 변화와 아울러 사망 원인의 구성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지표로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사인별 사망자수를 백분비로 나타낸 것임.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만성병 및 사고(특히 교통사고)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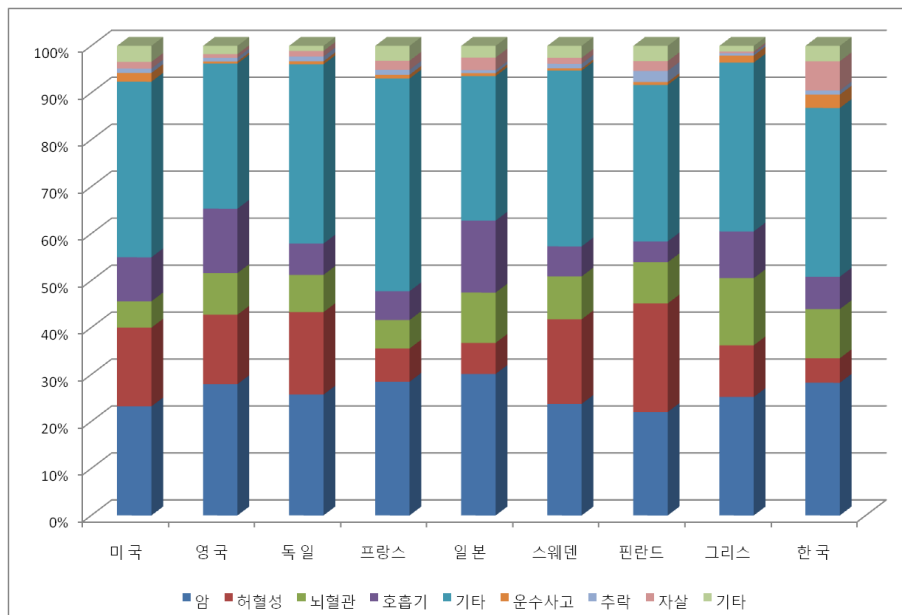
나. 국가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현황

- 2009년을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한국(86.8%)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

이 91.7%(핀란드)에서 96.4%(그리스) 사이의 분포를 보였고,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 역시 한국의 13.2%를 제외하고 3.6%에서 8.3% 수준이었음.

- 한국은 전체 사망자 가운데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요인 중에서도 자살과 운수사고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1-6] 국가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비율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 운수사고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자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음.
-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임.

〈표 1-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단위: 명, %)

구분	계	질 병						외 부 요 인				
		소 계	암	허혈성	뇌혈관	호흡기	기타	소 계	운수사고	추락	자살	기타
미 국	2,423,735 (100)	2,238,656 (92.4)	562,879 (23.2)	406,355 (16.8)	135,955 (5.6)	227,309 (9.4)	906,158 (37.4)	185,079 (7.6)	45,030 (1.9)	22,631 (0.9)	34,529 (1.4)	82,889 (3.4)
영 국	559,617 (100)	538,536 (96.2)	156,467 (28)	82,731 (14.8)	49,682 (8.9)	76,696 (13.7)	172,960 (30.9)	21,081 (3.8)	2,510 (0.4)	4,433 (0.8)	4,245 (0.8)	9,893 (1.8)
독 일	821,627 (100)	789,347 (96.1)	211,523 (25.7)	144,189 (17.5)	65,133 (7.9)	54,888 (6.7)	313,614 (38.2)	32,280 (3.9)	5,267 (0.6)	8,381 (1.0)	9,765 (1.2)	8,867 (1.1)
프랑스	532,474 (100)	495,436 (93.0)	151,572 (28.5)	37,744 (7.1)	32,277 (6.1)	32,676 (6.1)	241,167 (45.3)	37,038 (7.0)	4,273 (0.8)	5,563 (1.0)	10,347 (1.9)	16,855 (3.2)
일 본	1,141,865 (100)	1,068,267 (93.6)	344,105 (30.1)	75,481 (6.6)	122,350 (10.7)	175,028 (15.3)	351,303 (30.8)	73,598 (6.4)	7,089 (0.6)	7,312 (0.6)	30,707 (2.7)	28,490 (2.5)
스웨덴	91,542 (100)	86,732 (94.7)	21,751 (23.8)	16,488 (18.0)	8,364 (9.1)	5,848 (6.4)	34,281 (37.4)	4,810 (5.3)	420 (0.5)	891 (1.0)	1,170 (1.3)	2,329 (2.5)
핀란드	49,904 (100)	45,754 (91.7)	10,996 (22.0)	11,534 (23.1)	4,380 (8.8)	2,210 (4.4)	16,634 (33.3)	4,150 (8.3)	301 (0.6)	1,188 (2.4)	1,032 (2.1)	1,629 (3.3)
그리스	108,316 (100)	104,448 (96.4)	27,328 (25.2)	11,922 (11.0)	15,493 (14.3)	10,770 (9.9)	38,935 (35.9)	3,868 (3.6)	1,632 (1.5)	530 (0.5)	391 (0.4)	1,315 (1.2)
한 국	246,942 (100)	214,281 (86.8)	69,780 (28.3)	12,893 (5.2)	25,838 (10.5)	17,029 (6.9)	88,741 (35.9)	32,661 (13.2)	7,019 (2.8)	2,144 (0.9)	15,413 (6.2)	8,085 (3.3)

주 : 미국(2007년), 독일(2006년), 프랑스(2008년), 스웨덴(2008년) 자료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제2장 복지투자 일반

1. OECD SOCX 담당자

국가	소속	이름	이메일
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khgho@kihasa.re.kr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勝又幸子 (KATSUMATA Yukiko)	yukiko-ka@ipss.go.jp
독일	유럽연합, 유럽통계(EUROSTAT)		ESTAT-ESSPROS@ec.europa.eu
핀란드	유럽연합, 유럽통계(EUROSTAT)	Mr. Ilari Keso	ilari.keso@stm.fi

2.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중

가. 개념

- IMF 기준에 따라 정부 총 예산 중 보건(health) 및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정부의 다양한 기능 중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의중을 살펴보는 지표임.
- 정부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포함된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로 지방정부의 예산은 포함하지 않음.

- 보건복지예산은 정부의 주요 활동별 예산을 보여주는 layout 중 보건(health)과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에 배정된 예산만 포함

나. 국가별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중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2007년 기준)

-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 총 예산의 50% 이상 보건 및 사회보장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음.

- 핀란드에서 복지지출은 보건, 사회보장, 교육을 제외한 기타 복지지출을 포함. 2007년 핀란드의 복지지출은 연간 1인당 8,500유로임. 총 사회복지지출은 45십억유로(인구 5.3백만명), 이 중 1/4는 주 예산을 통해서 쓰임(University of Turku).

〈표 2-1〉 핀란드의 복지지출

(단위 : %)

	1990	1995	2000	2005	2010
복지지출/GDP	24.6	31.5	25.1	26.7	30.4

자료 : Eurostat

- 영국은 정부 총예산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2-2〉 영국의 복지지출

(단위: 자국통화기준, 백만 £,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2
복지지출	39520.4	71643.9	96709.2	148385.7	183693.2	261712.3	290667.6
복지지출/총지출	35.9	42.6	40.3	45.8	47.3	46.6	45.8

자료 : Eurostat

- 독일은 정부 총 예산의 30% 수준을 보건 및 사회보장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3〉 독일의 복지지출

(단위 : €, %)

	1991	1995	2000	2005	2009
복지지출 (A)	365.2	525.6	584.7	642.7	714.8
총지출 (B)	1463.6	1929.5	2047.5	2224.4	2374.5
A/B (%)	25.0	27.2	28.6	28.9	30.1

자료 : 유럽통계 홈페이지(<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tatistics/themes>)

- 일본의 예산 총 지출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4〉 일본의 복지지출

(단위 : 자국통화기준 ¥, %)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복지지출 (A)	1.16	8.39	9.94	11.60	14.65	18.20	20.9	29.0
총지출 (B)	12.1	43.7	53.2	69.7	78.0	90.0	86.7	92.4
A/B (%)	9.6	19.2	18.7	16.6	18.8	20.2	24.1	31.4

자료 : 일본 기획재정부(<http://www.mof.go.jp/budget/reference/statistics/data.htm>)

- 우리나라는 정부 총 예산 중 보건 및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임.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건 및 사회보장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향후 증가될 것으로 보임.

2) 추이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총 예산 중 보건 및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복지 레짐과 뚜렷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은 오랜 기간 복지 선진국임을

자차했으나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핀란드와 독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리스와 미국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 2004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표 2-5〉 정부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 국	48.76	54.69	56.01	55.56	55.21	53.91	55.23	54.88	54.78	56.25
영 국	52.32	52.78	52.37	51.82	52.63	52.04	51.32	51.43	49.26	-
독 일	28.6					28.9	-	-	-	30.1
프랑스	-	-	-	-	-	-	-	-	-	-
일 본	-	-	-	-	-	-	-	-	-	-
스웨덴	-	-	-	52.41	53.17	51.39	51.42	-	-	-
핀란드	55.76	55.95	56.06	56.99	57.58	57.67	57.72	58.13	-	55(2010)
아르헨티나	50.33	49.61	43.24	42.49	45.23	-	-	-	-	-
그리스	45.66	48.53	49.29	50.69	49.15	52.55	51.65	51.35	52.57	-
한 국	17.49	14.77	17.21	13.89	11.97	19.15	19.71	-	-	22.67

주 : 미국(2000), 아르헨티나(2000; 2001)는 현금만 포함한 것임.

자료 : IMF, GFS(2010); 독일은 유럽통계(<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tatistics/themes>); 핀란드는 Statistics Finland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는 정부 총 예산 중 보건 및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급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복지지출의 증가를 야기하는 요인들이 있음.
 -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금 증가
 - － 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 서비스 등 노인복지예산 및 사회서비스 예산 증가
-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복지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들도 있음.
 - －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국방지출의 일정 수준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 총

지출 중 보건복지지출의 증가를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음.

- 보건복지분야 기술 및 정보화로 인하여 중복 수급 등의 행정 효율성 강화
- 향후 정부 총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매칭사업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예산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3. 저소득층의 기준과 규모

가. 개념

- 빈곤은 다양한 취약계층을 양산시키고 가정의 해체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공공부조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재정운영에 위협이 되고 있음. 따라서 저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투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출이자 의무지출로서 국가의 복지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임.
-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개념에 의한 빈곤율로 저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으로 저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음.
 - 절대빈곤의 기준선은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와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등의 기준을 따름.
 - 상대빈곤의 기준선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40%, 50%, 60% 이하의 가구로 정의됨.

나. 국가별 저소득층 기준과 규모의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

- 독일에는 저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음.

- 문헌에는 저소득이 빈곤위험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분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됨. EUROSTAT의 정의에 따르면 빈곤위험선이 중위균등소득의 60%에 상응한다고 함. 이에 따라 수정된 혹은 새로운 OECD 균등화척도가 생김.
- 빈곤으로 인해 위험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자료의 토대와 징수계획에 따라서 매년 변동됨. 소득분배와 위험빈곤율은 아래의 3개 가계조사에 의해 분석됨.
 - 유럽에서 소득과 생활조건에 관해 실행된 사회통계 "유럽의 삶" (EU-SILC)
 - 수입과 소비에 대한 임의추출견본(EVS)
 - 마이크로 센서스
- 이처럼 독일연방정부에 의해 조사된 3가지 통계와 더불어,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사회경제 패널(SOEP) 조사도 있음.
- 빈곤위험률과 빈곤위험선은 각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음.

〈표 2-6〉 독일의 조사자료별 빈곤위험률과 빈곤위험선

	EVS	EU-SILC	Micro census	SOEP
기준연도	2008	2009	2010	2009
빈곤위험선(중위소득 60%, €)	1,053	940	826	966
2명의 14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부(€)	2,212	1,974	1,735	2,029
빈곤위험률은 중위소득 60%에 포함됨				
총합계(%)	15.9	15.6	14.5	15.3

- 핀란드에서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미만의 가계로 정의됨(핀란드 통계청). 2010년 중위소득 60%미만은 일인당 월 1,228 유로 이하의 소득임.
 - 핀란드에서 위의 정의에 따른 저소득층 규모는 2010년 706천명(전체 인구의 13.3%)임(핀란드 통계청).
- 영국에서 저소득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임.

— 저소득층의 규모는 아동과 근로세대(working age adults), 노령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아동 빈곤율: 2009/10년에 전체 아동(2.6백만명)의 주거비용 전(BHC) 순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 비율은 20%, 주거소득 후(AHC) 순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 비율은 29%(3.8백만명). 2008/09와 비교할 때 이는 BHC에 근거할 때 2%p(0.2백만명) 하락하고, AHC를 기준으로 할 때 2%p(0.1백만명) 하락한 것임. 또한 1998/99와 비교할 때 BHC 기준 6%p(0.9백만명) 하락, AHC 기준 5%p(0.7백만명) 하락한 것임.
- 근로세대(working age adults): 2009/10년에 BHC를 기준으로 중위 순가처분 소득의 60% 이하에 사는 가구는 16%(5.7백만명)이고 AHC 기준 상대빈곤율은 22%(7.9백만명)임. 2008/2009와 비교할 때 BHC 기준 0%p(0.1백만명) 감소, AHC 기준 0%p(0.1백만명) 증가. 1998/99와 비교할 때 BHC 기준 1%p(0.7백만명) 증가, AHC 기준 2%p(1.2백만명) 증가
- 연금수급자(pensioners): 2009/10년에 BHC를 기준으로 중위 순가처분 소득의 60% 이하에 사는 가구는 18%(2.1백만명)이고 AHC 기준 상대빈곤율은 16%(1.8백만명)임. 2008/2009와 비교할 때 BHC 기준과 AHC 기준 모두 2%p(0.2백만명) 감소, 1998/99와 비교할 때 BHC 기준 8%p(0.6백만명) 감소, AHC 기준 13%p(1.1백만명) 감소
- 자료: 고용연금부 홈페이지 통계포털

○ 일본에서 저소득층의 기준은 생활보장비보다 수입이 적은 세대를 뜻하며, 2009년 기준 성인 1인가구의 기준액은 112만엔, 성인 2인 가구의 기준액은 224만엔임.

— 일본에서 저소득층의 규모는 16%로 나타남(일본 통계청).

□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규모(김문길 외, 빈곤통계연보, 2011)

-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규모는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 기준과 동일 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에 상관없이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10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0%, 가계지출 기준 빈곤율은 5% 내외수준임.
 -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2010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0.0%, 가계지출 기준 빈곤율은 5.1%
 - 동일 비율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2010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0.5%, 가계지출 기준 빈곤율은 5.9%
-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규모는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0년 전가구를 기준으로 10%에서 20% 수준으로 추정됨
 - 가장 엄격한 상대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할 때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0.5%, 가계지출 기준 빈곤율은 3.8% 수준임.
 - OECD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4.9%, 가계지출 빈곤율은 8.4% 수준임.
 - EU와 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할 때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 가계지출 기준 빈곤율은 14.3% 수준임.

2) 추이

-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총인구 빈곤율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임.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 빈곤율은 모든 국가들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국의 총인구 빈곤율은 12.5%(2003)로 미국 17.3%(2004)보다 낮지만, 다른 모든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스웨덴 5.6%(2005), 프랑스 7.3%(2000), 독일 8.4%(2000), 영국 11.6%(2004)순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10.0%(2003)로 영국 14.0%(2004)과 미국 21.2%(2004)보다 낮은 편임.

- － 스웨덴 4.7%(2005), 프랑스 7.9%(2000), 독일 9.0%(2000) 순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6.1%(2003)로 영국 16.5%(2004), 미국 26.6%(2004)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노인빈곤율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화두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 스웨덴 6.6%(2005), 프랑스 8.5%(2000), 독일 10.4%(2000) 순으로 나타남.

〈표 2-7〉 주요국가의 상대빈곤율

(단위 : %)

구분	연도	총인구			아동			노인		
		40%	50%	60%	40%	50%	60%	40%	50%	60%
프랑스	1989	4.8	8.9	15.5	3.9	8.3	15.5	7.2	14.7	25.5
	1994	3.4	8.0	14.1	2.9	7.9	14.3	3.4	9.8	18.5
	2000	2.8	7.3	13.7	2.6	7.9	15.9	3.0	8.5	16.2
독일	1984	4.0	7.9	14.1	3.9	8.5	14.9	6.8	14.0	25.6
	1989	3.2	5.8	11.4	1.6	4.1	10.6	6.2	11.3	22.4
	1994	4.5	8.2	13.6	5.4	9.5	15.2	4.8	9.7	17.8
	2000	4.6	8.4	13.4	5.5	9.0	14.2	4.0	10.4	18.6
스웨덴	1992	4.1	6.7	12.1	1.6	3.0	6.2	1.5	6.4	19.8
	1995	4.7	6.6	10.0	1.3	2.6	5.5	0.8	2.7	7.8
	2000	3.8	6.5	12.3	1.8	4.2	9.2	2.1	7.7	21.2
	2005	2.6	5.6	12.0	2.0	4.7	10.9	1.5	6.6	20.6
영국	1991	6.7	14.6	22.8	8.6	18.5	26.9	8.3	23.9	4.5
	1994	4.3	10.8	20.0	4.3	13.9	26.6	5.0	15.1	29.4
	1995	6.1	13.4	22.1	8.4	19.8	30.1	4.0	13.7	29.1
	1999	5.3	12.5	21.1	5.9	17.0	28.0	6.7	17.2	31.6
	2004	5.4	11.6	19.2	5.7	14.0	24.2	6.1	16.5	28.6
미국	1991	12.1	18.1	24.3	18.2	25.6	33.1	12.6	21.6	30.0
	1994	11.8	17.8	24.3	16.9	24.5	32.3	11.8	20.6	29.3
	1997	10.8	16.9	23.9	14.8	22.5	31.1	12.0	20.7	29.9
	2000	10.8	17.0	23.8	14.1	21.9	20.3	15.1	24.7	33.3
	2004	11.4	17.3	24.1	14.4	21.2	29.1	14.3	26.6	34.7
한국	2003	8.0	12.5	19.1	5.4	10.0	16.6	27.2	36.1	45.8
	2010	8.9	13.8	19.6	4.9	8.6	13.9	28.2	38.3	46.7

주: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LIS 홈페이지 자료이며, 한국은 1인가구 및 농어가 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김문길 외, 2011, 빈곤통계연보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이동빈곤율과 총인구 빈곤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미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빈곤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4. 베이비부머의 기준과 규모

가. 개념

- 출산율이 급증하여 생긴 인구를 베이비부머라고 명명함.
- 베이비붐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늘어 출생아수가 폭등하는 상황”을 의미(통계청 인구대사전, 2006). 사회적으로는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인구집단을 일컫는 말로 당시 합계출산율이 3.0이상이었던 코호트 세대를 이룸(김영민, 2006; 정경희 외, 2010, p. 23 재인용).
- 일본 ‘단카이 세대’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규모는 680만명, 전체 인구의 5% 차지(정경희 외, 2010: 24)
- 최근에는 정년퇴직 등을 눈앞에 두고 있어 노인빈곤과 은퇴 후 사회적 배제 등에 대한 정책대상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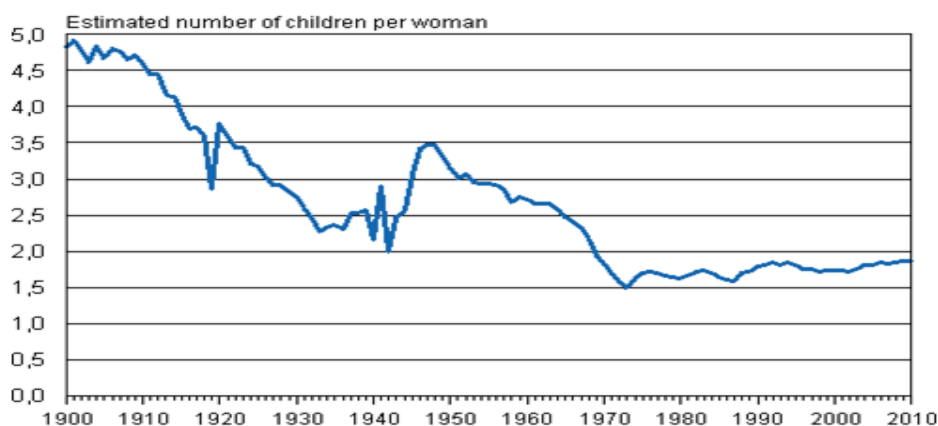
나. 국가별 베이비부머 현황과 추이

- 독일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사용되는 정의는 없음. 베이비부머 세대를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들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

- 현재 독일의 베이비부머세대는 18.7백만 명으로 추정
- 핀란드에서 베이비부머는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정의되며, 당시 매년 신생아 수는 십만명이 넘음.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는 약 5십 만명에 달함.
- 아래의 [그림 2-1] 은 여성 한 명당 생애기간 동안 출산한 자녀의 수를 나타냄. 출생률은 1970년 최저치를 기록한 후, 증가하였으며, 2010년 현재 기준 약 1.9명에 달함. 그러나 최저 인구대체율(한 여성당 2.1명의 자녀 출산)보다는 여전히 다소 낮은 수치임.
- 베이비부머를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은 부재함. 그러나 높은 인구비율을 차지하는 이 세대가 대규모로 퇴직연령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복지국가의 재원조달은 상당 규모의 근로인력이 동시에 퇴직하고 이 인력을 대체할만한 청년근로층이 부재할 시 도전에 직면하게 됨.
- 핀란드에는 모자 돌봄에 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음.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베이비부모 세대에 국한된 것은 아님(핀란드 통계청, 2010년 4월 15일 기준).

[그림 2-1] 여성 1인당 출산 아동의 수



- 영국에서도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의는 없음.
 - 영국은 고령화의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게다가 연금수급자 대비 근로가능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개혁을 통해 연금 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함. 그 주요한 내용에는 State Pension의 증가를 포함
- 일본에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의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임.
 - 일본의 베이비부머 규모는 806만명임.
 - 베이비부머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으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정년을 연장한 것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세대란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출생한 약 816만명(총 인구 대비 16.8%)을 가리키는 용어임. 이들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앞장섰고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 은퇴에 직면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약 712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수는 임금근로자 312만명이고 향후 10년 내에 사회 전면에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아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며, 대다수(85.6%)가 배우자가 있음.
 - 50.2%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46.5%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주 접촉하는 지인은 지역주민(31.5%), 직장동료(28.1%), 동창(25.9%)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27.1%로 비교적 낮으며, 우울증상의 유병률은 10.2%임.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은퇴 시기에 직면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생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 전반적 지원체계가 필요

- 소득에 상관없이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마련이 시급함.
-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관계 모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보다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5.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가. 개념

-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장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OECD작성기준에 의해 34개국이 공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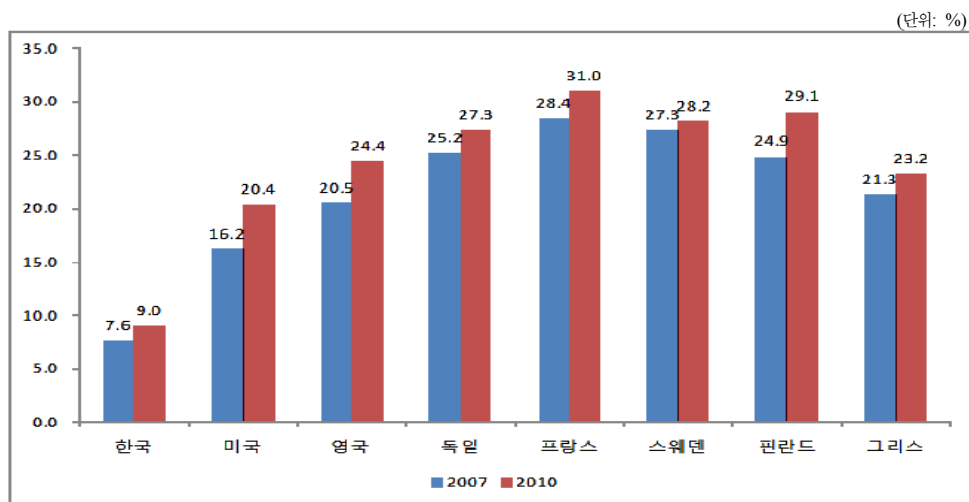
나. 국가별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2010)

- 각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7년 기준 25% 내외로 나타나지만 2010년에는 30%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함.
- 2007년 기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와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미국과 영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 그리스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21.3%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문제는 그리스의 경제규모 혹은 경제력이 이를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임.

- 2010년 역시 프랑스와 핀란드, 스웨덴과 독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증가 폭은 미국과 핀란드, 영국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스웨덴과 그리스에서는 낮음.
-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2-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추계(2007년, 2010년)



주: 2007년은 실적치, 2010년은 추계치임.

자료 : 2007년은 OECD SOCX 홈페이지, 2010년은 Wilem Adema et al.(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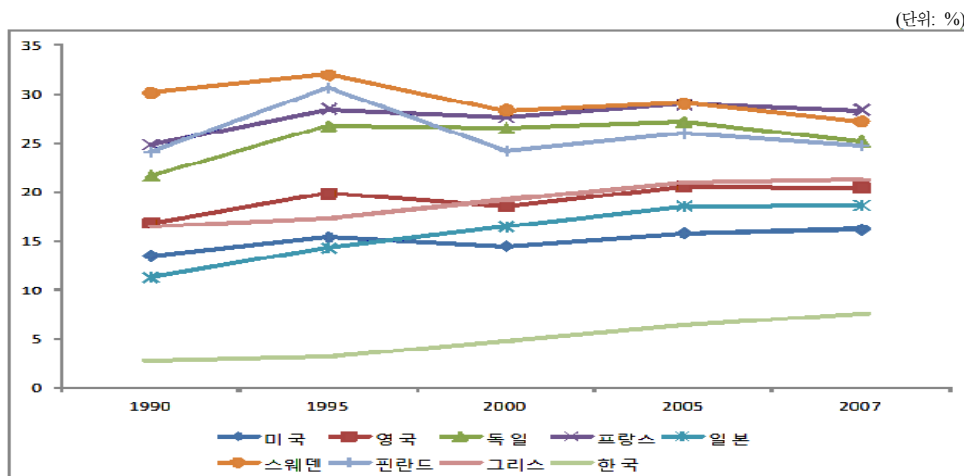
2) 추이

□ 지난 20여년간 각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음.

- 지난 20여년간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대륙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스웨덴과 핀란드, 프랑스와 독일은 공통적으로 1990년대 초반 복지국가 위기와 함께 상당히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 특히 핀란드는 이들 국가 중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감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남.

- 영국과 그리스, 미국과 일본은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과 미국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국가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함.
 - 일본과 그리스는 이 기간동안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함.
- 우리나라는 모든 기간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증가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3] 지난 20여년 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추이(1990-2007)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

- 지난 20여년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연평균증가율은 한국과 그리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과 그리스는 기존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회서비스의 확충 등으로 최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 미국과 영국 등 자유주의형 국가들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6% 내외로 다소 높음.

- 스웨덴과 핀란드 등 이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은 북유럽국가들의
연평균 증가율은 4% 내외로 나타남.

〈표 2-8〉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GDP 대비)

(단위: percentage of GDP)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7	연평균증가율
미 국	13.5	15.4	14.5	15.8	16.2	6.5
영 국	16.8	19.9	18.6	20.6	20.5	6.7
독 일	21.7	26.8	26.6	27.2	25.2	4.6
프랑스	24.9	28.5	27.7	29.0	28.4	4.4
일 본	11.3	14.3	16.5	18.6	18.7	3.8
스웨덴	30.2	32.0	28.4	29.1	27.3	4.0
핀란드	24.1	30.7	24.2	26.0	24.8	4.4
그리스	16.5	17.3	19.2	21.0	21.3	11.8
한 국	2.8	3.2	4.8	6.4	7.6	16.6

주: 연평균증가율은 공공사회복지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계산한 것임.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그리스는 1980년대 이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10.2%(OECD SOCX 홈페이지)였으나 최근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11.8%).
 - 그리스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정책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리스는 선거때마다 보수·진보에 상관없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를 공약으로 약속. 근로자 4명 중 1명은 공무원
 - 유권자에 대한 선심성 공약(각종 수당 제정) 남발
 - 공공부문 종사자는 이익집단화 되어 공무원에 대한 은퇴수당이 생애 최고 연봉의 95% 수준임.
 - 반면에 탈세가 만연하고(GDP 대비 1.5-2.5% 수준) 복지 제도의 집행에 있어 만연한 부패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
 -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복지지출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복지후발국가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의 속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은 당연함.
 - 최근 20년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실업(64.1%), 가족(29.5%), 적극적노동시장정책(20.8%), 기타사회정책(20.1%), 노령(16.5%) 순임.
 - 즉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실업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복지지출 확대시 재원부담에 대한 고려 등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에 대한 공적 투입의 적절성 여부 및 합리적인 운용 방안 결정
 -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따른 투입과 효과성 검토, 이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투자 방안 제시
 - 보건복지정보포털(행복 e-음)을 통한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방안 구축 및 다른 제도와의 효율적 연계 필요(예, 기초생보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훈 기금, 자녀양육비, 실업급여, 고용지원서비스 등 체계적 관리와 연계 필요)
 -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6.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비중

가. 개념

-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비중은 각국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중점 분야 및 재정 배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임.

나. 국가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추이

□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령과 보건부문의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프랑스와 그리스, 스웨덴, 일본, 독일, 핀란드에서는 노령부문의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들 국가에서 노령부문의 지출은 GDP 대비 8%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7.6%(2007)보다 높은 수준임.

○ 미국과 영국, 한국에서는 보건부문의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핀란드,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 보건부문의 지출은 5% 이상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지출(GDP 대비 3.5%) 수준을 상회함.

○ 한편 스웨덴에서는 근로무능력 관련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GDP 대비 5.02%)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가족부문 지출(GDP 대비 3.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9〉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지출 현황

(단위: 경상GDP 대비%)

구분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실업	주거	기타	계
미국	5.30	0.70	1.31	7.24	0.66	0.11	0.33	-	0.55	16.20
영국	5.77	0.14	2.44	6.84	3.24	0.32	0.20	1.43	0.17	20.54
독일	8.65	2.06	1.89	7.85	1.83	0.72	1.38	0.61	0.17	25.16
프랑스	11.06	1.75	1.75	7.49	2.99	0.90	1.36	0.76	0.35	28.40
일본	8.79	1.30	0.79	6.30	0.79	0.16	0.31	-	0.26	18.70
스웨덴	8.98	0.54	5.02	6.58	3.35	1.10	0.67	0.47	0.59	27.30
핀란드	8.40	0.83	3.57	6.01	2.83	0.87	1.55	0.24	0.55	24.83
그리스	10.02	2.00	0.89	5.86	1.09	0.17	0.46	0.46	0.39	21.33
한국	1.6	0.3	0.6	3.5	0.5	0.1	0.3	-	0.8	7.7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는 보건부문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령부문의 지출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보건부문의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국가는 전국민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미국과 잔여적인 영국 등임.
 - －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의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부문의 지출 비중이 높고 향후에도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진료비지불 방식 등 지출 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노령부문의 지출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고령화의 영향으로 향후 급격한 지출이 예상됨.
 - － 노령부문의 지출 증가는 국가적인 지출 통제보다는 다층적인 노후 준비를 통한 노인빈곤을 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제3장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체계 개요

〈표 3-1〉 연금체계 개요

구분	공적연금	1층	2층	3층
한국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연금 저축
미국	-OASDI	-SSI	-OASDI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4층)
영국	-기초연금 -국가이충연금	-기초연금	-국가이충연금	-기업연금, 개인연 금 등
독일	-독일연금보험	-독일연금보험	-리스터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4층)
프랑스	-기초연금 -소득비례 보충연금	-기초연금	-소득비례 보충연금	-기업연금(의무가입) -개인연금
일본	-국민연금 -후생연금	-국민연금	-후생연금	-퇴직연금 -연기금
스웨덴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 -부가연금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	-부가연금
핀란드	-국민연금 -(공적)소득비례연금	-국민연금	-소득비례연금 (공적연금과 사적연 금으로 구분)	-기업연금 -개인연금
아르헨티나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고령자추가연금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고령자추가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그리스	-최저연금 -소득비례연금	-최저연금	-소득비례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2. 공적연금 제도개요

1) 한국

□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체계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1층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 2층은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 및 저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조세방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이를 보완하고 있음.
- 1988년 도입당시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써 틀을 갖추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게 당연적용되고 있음.¹⁾
 -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²⁾를 매달 지급하고 있음.

2) 미국

□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체계

-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은 1층의 공공부조제도인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³⁾, 2층의 공적연금제도인 OASDI, 3층인 기업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 무소득배우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이 있음.

2) 2012년 기준으로 매달 94,6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OASDI(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Disability Insurance)

- 1935년 도입된 일반 근로자⁴⁾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인 OASDI는 노령, 유족,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도입당시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였으나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자영업자에게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자리잡고 있음.
 - OASDI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상인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12.4%⁵⁾를 적용하고 있음.
- 2010년말 기준으로 OASDI에 15,67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취업자 대비 94%에 이르고 있음.

3) 영국

□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체계

-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은 1층의 기초연금제도인 국민보험, 2층의 국가이충연금 그리고 3층의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와 국가이충연금(SSP; State Second Pension)⁶⁾

- 영국은 기초연금제도인 국민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6세부터 가입하는 영국의 국민연금은 조세방식이 아닌 가입자의 기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방식인데,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11%를 납부하되, 급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 1959년 국민보험제도 개정시 소득비례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3) 빈곤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는 연방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부조제도임.

4) 연방정부공무원, 주·지방정부공무원, 철도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위한 연금제도 즉 CSRS(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5) 자영업자는 12.4%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각각 6.2%씩 부담하고 있음.

6) 1978년 도입된 소득비례연금제도(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ERPS)는 2002년 국가이충연금(State Second Pension: SSP)으로 발전함.

- 1960년에 도입된 국가등급퇴직연금제도(State Graduated Retirement Pension Schemes, SGRPS)는 1978년에 국가소득비례이첨연금(SERPS)으로 대체되었음.
- 2000년 아동지원, 연금, 사회보장법(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제정을 통해 SERPS를 대신하여 2002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이첨연금(State Second Pension)가 시행되고 있음.
- 국가이첨연금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온 저소득 근로계층에게 기초연금에 더하여 빈곤선 이상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음.
- 2007년 법개정을 통해 국가이첨연금은 정액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이첨연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고 중 고소득층은 사적연금으로의 가입을 유인하고 있음.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개인저축계좌에 강제가입하고 있음.

4) 독일

□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체계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은 1층의 공적연금제도인 독일연금보험제도, 2층의 리스터연금, 3층의 기업연금제도 그리고 4층의 개인보험과 저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독일연금보험(GRV; Deutsche Rentenversicherung)⁷⁾

- 독일연금보험(GRV)는 기존의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 노동자연금제도 및 광산종사자연금제도를 2005년에 통합한 제도임.
- 일반 국민이 노령, 장애 그리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7) 기존의 국민연금(Rente; Allgemeine Rentenversicherung)을 2005년부터 독일연금보험(Deutsche Rentenversicherung)으로 명칭을 변경함.

- 독일연금보험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⁸⁾ 2010년부터 보험료율은 19.9%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말 독일 전체 생산가능인구 5,110만명 대비 67.3%인 3,513만명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음⁹⁾.
- 연금보험제도 이외에 공무원 및 농업인, 자영자를 위한 공제조합제도를 감안하면 실제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93%임.

5) 프랑스

□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체계

- 프랑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인 기초연금(régimes de base), 2층의 보충연금(régimes complémentaires obligatoires), 3층의 민간 연금보험(assurance vieillesse, surcomplémentaire)과 의무가입인 기업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연금(régimes de base)과 소득비례형 보충연금(régimes complémentaires obligatoires)

-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¹⁰⁾는 부과방식제도로,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형 보충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연금제도는 일반 근로자¹¹⁾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소득비례형 보충연금제도는 기초연금에 추가적으로 연금을 보장하고 있음.
- 기초연금의 보험료율은 부과대상소득의 16.65%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 연금지출의 1/4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음.

9) 가입자 중 1,708만명은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등 제도적용제외자 혹은 과거 가입이력이 있는 자임.

10)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사회계층 및 직종군에 따라 35종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조합(régime)이 존재함. 이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피용자의 경우 노령연금(pension vieillesse)이라 불리는 기본연금과 보충연금, 추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외에 공무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등 직종에 따른 연금제도가 별도로 존재함.

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특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Régime des pensions, Régimes spéciaux 등의 연금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9.9%, 6.75%를 부담하고 있음.

- 1972년말 의무가입으로 제도화된 소득비례형인 보충연금은 7.5%에서 20.3%까지 소득구간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6) 일본

□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체계

- 1층에는 기초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 2층의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퇴직연금과 연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

- 20세 이상 일반국민에게 강제적용하는 국민연금제도는 매년 정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25년 이상 가입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함.
 -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절반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은 15.7%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25년 이상 가입시 60세부터 후생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기초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후생연금은 일정부분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수정부과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최근 국민연금은 감소추세이고 후생연금은 최근 증감현상이 반복되면서 일정규모 유지하고 있음.

7) 스웨덴

□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체계

- 1층의 공적연금제도인 최저보증연금, 소득비례연금 및 부가연금, 2층은 퇴직연금(Occupational Pension), 3층은 개인연금으로 구성됨.

□ 최저보증연금(Guaranteed Pension)과 소득비례연금(Income-related Pension), 부가연금(Premium Pension)

- 1998년 제도개혁을 통해 기존의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제도를 폐지하고¹²⁾ 1999년부터 새로운 공적연금체계를 도입하였음.
 - － 저연금, 무연금 수급자에게 국고로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는 종전의 보충연금을 대신하여 도입됨.
 - －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의 소득비례연금(Income-related Pension)과 완전 적립식 개인저축계정방식의 부가연금(Premium Pension)을 통합하는 형태로 전환함.
- 최저보증연금은 65세부터 지급하는데 최소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해야 하고 40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하였을 경우 최고연금액을 수급함.
 - － 소득비례연금과 부가연금액이 최저보증연금액¹³⁾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
- 소득비례연금과 부가연금제도는 16세 이상 일반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함.
 - － 보험료율은 18.5%로, 이 중 16%는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제도의 부과방식 지출로 충당되고 나머지 2.5%는 초과연금보험료 적립제도(premium reserve scheme)에 개인계정에서 관리하고 있음.
 - － 연금급여액은 평균기대여명의 변화에 따라 자동조정되도록 하고 연금액의 인상폭은 실질임금 및 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산출함.
 - － 2009년말 소득비례연금과 부가연금제도 가입자수는 5,837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16세~64세) 대비 99%에 이르고 있음.

12) 1998년 법개정 이전에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AFP)과 부분적립식 비례연금제(APT)가 운영되고 있었음.

13) 최저보증연금액은 거주기간, 부부가구, 독신가구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2008년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소득의 25.8%수준임.

8) 핀란드

□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체계

- 핀란드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의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2층의 소득비례연금과 3층의 자발적 개인연금으로 구성됨.¹⁴⁾

□ 국민연금(Basic National Pension)과 소득비례연금(TEL; Earning-related Scheme for Private Sector Workers)

- 핀란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2005년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소득비례연금 제도개혁을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함.
- 핀란드의 공적연금제도는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 노인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18세 이상 민간근로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로 이루어짐.
- 조세방식인 국민연금은 40년 거주시 65세부터 수급하는데, 62~64세에 조기수급이 가능함.
 - 국민연금액은 완전기초급여에서 기타 연금소득과 자산조사 등을 반영하여 감액하므로 고소득자 등 일정소득이상인 자는 연금을 수급할 수 없음.

9) 아르헨티나

□ 기초연금(Basic Pension)과 소득비례연금(Additional Pension) 및 고령자추가연금(Advanced Old-age Pension)

- 아르헨티나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여방식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7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공적연금제도¹⁵⁾에 가입할 경우 고령자추가연금

14) 2011년 3월부터 보증연금제도(Guarantee Pension)를 시행하고 있음.

15) 자영자의 경우 5년 이상 제도가입시 고령자추가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을 지급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1994년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통해 이전의 정부주도의 공적연금체계를 공공부문과 사적연금부분을 혼합한 체계(통합연금시스템: SIJP)를 도입하였음.
- 통합연금시스템은 구공적연금체계와 사적개인연금체계로 이루어짐.
 - － 구공적연금체계는 사회보장기구(ANSES)에서 관리감독 및 운영하고 있고 사적개인연금체계는 퇴직 및 연금기금관리회사(AFJP)에서 운영하고 있음.
 -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선택가능한데, 2002년말 기준으로 전체가입자의 80%가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3. 공적연금 적용현황 및 운영기관

가. 국가별 공적연금제도 적용현황

〈표 3-2〉 공적연금제도 적용현황

구분	공적연금제도	가입대상	적용현황																				
한국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의무가입	- 국민연금 가입자수(만명) <table><tr><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r><tr><td>1628</td><td>1650</td><td>1718</td><td>1707</td><td>1712</td></tr><tr><td>’06</td><td>’07</td><td>’08</td><td>’09</td><td>’10</td></tr><tr><td>1774</td><td>1827</td><td>1834</td><td>1862</td><td>1923</td></tr></table> -2011년말 1,989만명	’01	’02	’03	’04	’05	1628	1650	1718	1707	1712	’06	’07	’08	’09	’10	1774	1827	1834	1862	1923
’01	’02	’03	’04	’05																			
1628	1650	1718	1707	1712																			
’06	’07	’08	’09	’10																			
1774	1827	1834	1862	1923																			
미국	-OASDI	-일정소득기준 이상 ⁶⁾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특수직역종사자 포함)와 자영자 의무가입	-2010년말 기준 15,670만명																				
영국	-기초연금 -국가이충연금	-기초연금: 16세 이상 일정소득이상인 일 반국민 의무가입 -국가이충연금: 16세 이상 저소득 근로계 층	-기초연금: 2010년 11월 기준 2,850만명 -국가이충연금: 2010년 11월 기준 2,750만명																				
독일	-독일연금보험	-16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 의무가입	-2009년말 기준 3,513만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80%																				
프랑스	-기초연금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보충연금: 민간부문	-2008년말 기준																				

구분	공적연금제도	가입대상	적용현황
	-소득비례 보충연금	근로자 의무가입	기초연금 2,530만명 보충연금 3,240만명
일본	-국민연금 -후생연금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의무가입 -후생연금: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무가입	-2010년말 기준 국민연금 1,938만명 후생연금 3,441만명
스웨덴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 -부가연금	-소득비례연금과 부가연금: 16세 이상 일 반근로자와 자영업자 의무가입	-2009년말 기준 소득비례연금과 부가연금 가입자 수 584만명
핀란드	-국민연금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 의무가입	
아르헨티나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고령자연금		
그리스	-최저연금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 민간부문 근로자 의무가입	

나. 국가별 공적연금제도 운영기관 및 도입시기

〈표 3-3〉 공적연금제도 운영기관 및 도입시기

국가	공적연금제도	관리운영기관	관련법	도입시기
한국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 2008년 -국민연금: 1988년
미국	-OASDI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¹⁷⁾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935년
영국	-기초연금 -국가이충연금	-노동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1946년 사회보장법 ¹⁸⁾ (National Insurance Act)	-1908년(최초도입) 70세 이상 저소득 노령연금제도 도입 -기초연금: 1946년 -소득비례연금: 1961년
독일	-2005년부터 독일 연금보험	-2005년부터 독일 연금연합 (Deutsche Rentenversicherung)	-국민연금 조직체계의 개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reform)	-1889년(최초도입) 노동자연금제도 도입

16) 2011년 기준으로 월소득이 \$1,120 이상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함.

국가	공적연금제도	관리운영기관	관련법	도입시기
		g Bund)에서 운영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프랑스	-기초연금 -소득비례 보충연금	-사회보장 지역기금 및 노동수당 전국기 금(CNAV) 자영업자 사회레짐 (RSI)와 자영업자 노령보험기금 (CNAVPL)		-1910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법
일본	-국민연금 -후생연금	-2010년부터 일본연 금기구로 재편하여 운영		-1942년(최초도입) 남 성근로자에 대한 노동 자연금보험 -후생연금: 1944년 -국민연금: 1961년 -1985년: 현재의 공적 연금으로 체계화
스웨덴	※1999년 이후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 -부가연금 ※1999년 이전 -국민연금(AFP) -부분적립식 비례연 금제(APT)	-스웨덴 연금청 (Swedish Pension Agency) ¹⁹⁾		-1913년 자산조사방식 조세방식 기초연금(국민 연금)과 개인전액부담의 적립식 비례연금 도입
핀란드	-국민연금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아르헨 티나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고령자추가연금	-사회보장기구 (ANSES)		
그리스	-최저연금 -소득비례연금			

17)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소재

18) 1940년대 영국에서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로 알려진 ‘사회보
험과 연계서비스에 관한 중앙정부간 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구분	공적연금 수급률 (65세(60세) 이상 인구수 대비 수급자수)	공적연금 수급자수(만명)		
		국민연금	합계	2,834
			노령국민연금	2,651
			장애국민연금	172
			유족국민연금	12
		후생연금	합계	2,943
			노령후생연금	2,425
			장애후생연금	38
			유족후생연금	481
스웨덴	-최저보장연금제도 47% (2008년말 기준) -소득비례연금과 부가연금 71%(2009년말 기준)	-최저보장연금제도의 경우 2008년말 778천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약 47%에 해당함. -2009년말 소득비례연금(749천명)과 부가연금(643천명) 수급자수는 1,392천명(65세 인구 대비 71%)		
핀란드		-2011년 기준 1,483천명이 연금수급 (2010년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 926천명)		

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

〈표 3-5〉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

구분	(완전)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한국	-국민연금: 10년 · 20년 이상 가입시 완전노령연금 수급	-60세 ·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인상하여 2033부터는 65세
미국	-OASDI: 10년	-66세
영국	-국민연금: 30년 ²⁰⁾	-남성: 65세 여성: 60세 · 여성의 경우 2020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 · 2024~2046년까지 68세로 인상
독일	-독일연금보험: 5년	-65세 · 2012년~2029년까지 67세로 인상
프랑스	-기초연금: 41년 ²¹⁾ -소득비례 보충연금: 0.25년	-기초연금: 61세 ²²⁾ -소득비례 보충연금: 65세
일본	-국민연금: 25년 -후생연금: 25년	-국민연금: 65세 -후생연금: 60세 · 후생연금은 2013년~2025년까지 65세로 인상
스웨덴	-최저보충연금: 3년 국내거주 -소득비례연금, 부가연금: 최소가입기간 없음.	-최저보충연금: 65세 -소득비례연금, 부가연금: 61세

구분	(완전)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핀란드	-국민연금: 40년(거주기간) (거주기간이 짧을 경우 조정하여 연금수급)	-국민연금: 65세
아르헨티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30년 -고령자추가연금: 10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남성 65세, 여성 60세 -고령자추가연금: 70세
그리스	-최저보장연금: 15년 -소득비례연금: 15년 ²³⁾	-최저보장연금: 65세 -소득비례연금: 65세

5. 공적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가. 정부의 공적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표 3-6〉 정부의 공적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구분	정부의 공적연금 보험료 지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1995년²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농어업인 중 월소득 79만원 이하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보험료 9%의 절반인 4.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124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과 고용주 각각에서 보험료 4.5% 중 1.5%씩 3%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종사자에게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

20) 2007년 법개정을 통해 2010년 4월 퇴직자부터는 국민보험제도에 30년 가입시 완전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연금개혁 전에는 40년을 가입해야 완전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음.

21) 2012년 이전에는 40년이었고 2012년부터 41년을 적용하고 있음.

22) 기초연금은 41년 수급기간을 충족하거나 65세 이상일 때 지급가능하므로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61세부터 연금수급가능함.

23) 가입기간은 35년으로 상한을 두고 있음.

24)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부터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면서 1995년부터 농업종사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

나. 사업주의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표 3-7〉 사업주의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구분	공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2010년 기준)	사용자 부담여부
한국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9%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4.5%를 각각 부담	○
미국	-OASDI	-OASDI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12.4%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6.2%를 각각 부담	○
영국	-기초연금 -국가이충연금	-기초연금과 국가이충연금의 근로자부담 보험료율은 소득수준에 면제, 1%, 11%로 다양함. -사업주부담 보험료율은 12.8%로 동일	○
독일	-독일연금보험	-독일연금 보험료를 19.9%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9.95% 부담	○
프랑스	-기초연금 -소득비례 보충연금	-기초연금 보험료를 16.65%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9.9%, 6.75% 부담 -소득비례 보충연금	○
일본	-국민연금 -후생연금	-국민연금 -후생연금 보험료를 15.4%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7.7% 부담	○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부가연금	-소득비례연금과 부가연금 보험료를 18.5% ²⁵⁾ 중 근로자는 7%, 사업주는 10.21% 부담	○
핀란드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를 21.6% 중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17.1%를 각각 부담	○
아르헨티나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고령자추가연금	공적연금 보험료를 23.7% 중 근로자 11%, 사용자 12.7%를 부담	○
그리스	-최저연금 -소득비례연금	공적연금 보험료를 20.0% 중 근로자 6.7%, 사용자 13.3%를 부담	○

6.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가. 개요

□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근로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급여의 상대적 수준을

25) 법정기여율 18.5%와 실제 기여율 17.21%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18.5%의 기준소득이 실제 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과 다르기 때문임.

나타내며, 연금체계의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연금의 소득대체율 지표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이전 소득수준을 얼마나 유지시켜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됨.

나. 국가별 연금 소득대체율 현황

□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그리스, 스페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평균소득의 남성을 기준으로 약 80%를 넘는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의 경우 95.7%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반면 일본, 영국은 40%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한국의 경우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42.1%로 독일과 비슷한 수준임.

〈표 3-8〉 연금의 소득대체율

(단위 : %)

구분	중위소득	평균소득		
		0.5	1.0	1.5
핀란드	57.8	66.4	57.8	57.8
프랑스	49.1	55.9	49.1	41.3
독일	42	42	42	42
그리스	95.7	95.7	95.7	95.7
일본	36.3	47.9	34.5	30
한국	46.9	64.1	42.1	31.9
스페인	81.2	81.2	81.2	81.2
스웨덴	58.4	72.9	58.4	72.1
영국	37	53.8	31.9	22.6
미국	42.3	51.7	39.4	35.3
아르헨티나	81.1(73.8)	90.7(83.4)	78.1(70.8)	73.9(66.6)

주: ()는 여성에 대한 수치임.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연금의 적정수준 소득대체율은 적정수준의 기여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함.
 - 저기여-고급여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제도의 존립자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42.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여수준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삭감할 경우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수행에 한계가 발생함.
 - － 재정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기 보다는 기여율은 높이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 목적 달성에 보다 바람직한 정책선택일 것임.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개혁과정에서 기여를 높이는 것보다는 급여의 축소를 선택하였음²⁶⁾.
 - － 특히, 최저보증연금제도(Minimum Pension Guarantee)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의 감소는 기초생계선 이하의 낮은 연금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연금정책의 핵심과제는 적정 수준의 급여와 지속가능성간의 조화임.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연금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연금재정의 압박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임.
 - 기여와 급여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삭감과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을 단행하여 추가적인 급여삭감이나 연금수급연령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여율의 인상이 가장

26)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평균소득자의 경우,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 － 단기적 처방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구조 변동과 연금수급간의 완충역할을 하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도입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전체 연금체계에서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요구됨.

7. 최근 개혁동향 및 시사점

가. 영국

- 최근(2007년,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부문의 연금은 적정화하고 수급연령 상향조정 및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2007년 연금개혁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최소가입기간을 30년으로 낮추고 연금액연동방식은 물가에서 소득증가율로 변경하였으며, 소득비례연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함.
 - － 노후근로 장려를 위해 연금지급수급개시 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2024년, 2044년 각각 인상하여 2044년부터 68세로 상향조정함.²⁷⁾
 - 2008년에는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개인저축계좌제도를 강제가입하도록 함.
 - －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3%, 4%를 기여하고 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을 통해 1%를 보조하고 있음.

27) 여성의 경우 현재 60세에서 2010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20년부터 65세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나. 독일

- 독일은 1990년대까지는 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급여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인하 등 공적부문의 역할은 축소하고 대신에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는 대신에 2001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국고지원의 개인연금인 **Riester** 연금 등 사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2004년 법개정에서는 연금액 산정시 고령화지수 등 인구변수를 자동으로 연계시키는 지속가능성계수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확정급여방식에서 인구구조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전환됨.
 - － 재정목표는 보험료율은 22%(2030년까지)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은 43%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소득대체율이 그 이후로 떨어질 경우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007년에는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인해 2004년 개혁시 마련한 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2012년부터 2029년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

다. 프랑스

- 2010년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기간은 늘리고 급여지급은 낮추는 식의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음.
- 주된 내용은 퇴직연령을 늦추어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기간이 부

축할 경우 연금액을 적게 지급하기보다 재취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²⁸⁾ 다른 하나는 보험료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식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로 상향 조정함.
 - － 그러나 현재 고실업 문제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고령의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개혁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는 점은 분명함. 정부 차원에서도 보험료 납부기간은 연장하는데 초점을 맞춘 일련의 개혁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었음.

라. 일본

- 2010년 발표한 정부의 주요개혁방향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일원화하여 전 국민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함.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미가입률이 높아서 이들 대다수가 노후에 저연금, 무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연금자를 축소하는 방안 검토
 - 현재 부과방식인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절반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모색
 - 개인연금기록 5천만건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0년부터 새로운 관리기관을 두어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Agency)을 일본연금기구로 재편함.

28) 연간 4개월씩 점진적으로 연령을 조정하는 조치

마. 핀란드

-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05년과 2011년 연금개혁을 통해 핀란드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의 비중은 낮아지되, 소득비례연금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가의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비례연금액 산정시 늘어난 기대여명계수를 급여산식에 반영하고 연금액 산정소득을 최종소득에서 전 생애 평균소득으로 전환하는 등 급증한 소득비례 연금의 보험료 증가추이 억제하였음.
- 2011년에는 근로능력을 보유한 집단은 가급적 소득비례연금에 노후를 의존하도록 하되,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최저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의 보증연금제도(Guarantee pension)를 도입하였음.
-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국민 연금의 완전노령연금수급자를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적절성 문제가 대두되었음.

제4장 보육

1. 출산 지원 정책

가. 개념

- 출산 지원 정책은 영유아의 건강 출생과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출산 전후에 산모와 영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 정책을 말함.
- 출산 전 지원 정책은 산모의 자궁 내 환경을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으로 유도하여 저체중아와 조산아의 비중을 감소시키는데 있음.
 -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무료로 보편적인 출산 전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검사 및 치료,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사업 등이 포함됨.
- 출산 축하금("baby-bonuses")은 자녀 출생일 혹은 그 즈음에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현금 급여로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OECD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 － 국가마다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폴란드, 핀란드)도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한정하여 지원되는 경우(영국, 노르웨이, 프랑스)도 있음.
- 출산 후 지원 정책은 영아와 산모의 신체검사와 건강 체크 등 영유아와 산모

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며 영유아 대상 처방된 예방
접종도 이러한 목적 하에 수행되고 있음.

〈표 4-1〉 OECD 국가의 출산 지원 정책 유형

출산 전 정책	출생 시점 정책	출산 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전 영유아 보호계획 - 모성 건강 수첩 - 출산 전 모성 휴가 - 출산 전 공공 보건 정책 (예: 임신중 금연) - 보편적인 영양정책 - 출산 전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입원 지원 - 출산 축하금(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접종 계획 - 출산 후 보호 계획 - 영유아 건강 수첩 - 영아 수당(현금) - 출산후 육아휴직 - 출산후 공공보건 정책 (예: 모유 수유 홍보) - 출산 후 가정 방문 프로그램 - 출산 후 부모 프로그램

자료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에서 재구성

나. 국가별 출산 지원 정책 현황

〈표 4-2〉 국가별 출산 지원 정책

구분	국가별 제도 현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없고 지자체에서 지원 - 광역지자체 9지역, 기초지자체 78지역(첫째), 133지역(둘째), 175지역(셋째) 지원(2011년 7월 현재)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은 지자체 마다 다양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 지원(2011년 4월)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만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8종 백신, 22회 접종) 비용 지원 - 보건소 이용시 전액 무료, 민간지정의료기관 이용시 8종 백신 비용 30% 지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산전후급여 대상자가 아닌 출산 여성에게 지원 - 1개월간 210 유로 ● 출산 축하금 ("Entbindungsge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산전후 휴가 대상 여성에게 지원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 - 임신한지 7개월째 되는 달 혹은 입양한 자녀가 가정에 온 날 지급 - 일시불 905.07 유로 (2010년)

구분	국가별 제도 현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지원금액: 산과의료보상제도에 가입한 병원: 42만엔, 그 외 39만엔 • 출산 전 검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횟수: 1인당 5~14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 지원 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음. • BCG, DPT, MRC, DT 등 정기예방접종이 지원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 휴가 중인 여성 대상 - 급여의 최대 80%까지 지원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보조금(Maternity subsi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최소 154일 되는 임신부에 대해 지원 - 급여 수준은 일시불 140 유로 혹은 임신 용품 • 임신부 산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11~15회 무료 검사 • 출생아 예방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질병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예방 접종 - 모든 출생아에 대해 무료 지원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보험 대상자가 아닌 여성에게 지원 - 소득 조사에 기초한 정부 지원 - 500 유로를 2회에 나누어 지급 * 250 유로는 출산전 42일 기간에 지급, 나머지 250유로는 출산후 42일 기간내 지급

자료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조사표를 통한 자체조사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국내에서는 현재 중앙 부처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일시불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 출산 축하금 급여 수준 등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상이하여 출산 축하금의 급여에 차이가 많음.
 - 이러한 지자체 출산 축하금의 지역적 격차는 지역간 급여 수준의 불균형 및 비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중앙 부처에서는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해산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출산 지원 정책이라기보다 빈곤 정책에 가까움.
 - 출산 축하금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고 출산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출산 축하금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보육 시설 현황

가. 개념

- 보육 시설에는 nursery, day care centers, crèche, playschools, parent-run groups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영유아가 4살 될 때 까지 혹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종일제 혹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
- 보육 시설 유형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공공 보육 시설로서 부모가 이용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
 -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 시설 이용 비용은 조세 감면 혹은 아동 수당으로 보상되고 있음.

나. 국가별 보육 시설의 특징

〈표 4-3〉 국가별 보육시설수

(단위: 개소수)

구분	유형별 개소수
한국(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개소수 38,021개소 - 국공립 2,034(5.35%), 법인 1,468(3.86%), 민간 14,677(38.60%), 부모협동 74(0.19%), 가정보육 19,367(50.94%), 직장보육 401(1.05%)
미국(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세 아동의 90%가 민간 보육 시설에서 양육됨 - 민간 보육 시설의 2/3는 비영리시설, 1/3은 영리시설 (모두 인가받은 보육기관)
영국(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개소수 105,100개소 - 보육시설 89,500개소: 종일제 보육(17,500개소), 회기보육(8,300개소), 방과후보육(9,500개소), 휴일보육(7,700개소), 보육 도우미(105,300명) - 유치원 15,700개소: 보육학교(400개소), 예비학교(15,300개소)
독일(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 시설 운영 비중 - 과거 서독 지역: 유치원 64%, 영아 보육시설 55%를 민간이 운영, 지자체 공공 보육시설 55% (*민간의 대부분은 교회) - 과거 동독 지역: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의 2/3가 국공립이 운영 ●Children's Advancement Act 개정 (2009년 12월 16일) - 2013년까지 3세 미만 영아 보육 시설을 확장할 것을 천명 - 특히 세 번째 자녀에게 보육 시설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제공
프랑스(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개소수 10,565개소 - 집단어린이집(1,947개소), 일시어린이집(1,933개소), 놀이방(227개소), 복합보육시설(5,702개소), 가족보육시설(756개소)

구분	유형별 개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지자체 운영) 및 민간(민간비영리 포함)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보육시설: 집단어린이집(73.1%), 일시어린이집(60.7%), 놀이방(61.7%), 복합 보육시설(58.7%), 가족보육시설(91.3%) - 민간 보육시설: 집단어린이집(26.9%), 일시어린이집(39.3%), 놀이방(38.3%), 복합 보육시설(41.3%), 가족보육시설(8.7%)
일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개소수 23,385 개소 - 민간보육시설 7,578 개소
스웨덴(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세 아동의 전원이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대부분의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은 지자체에 의해 운영됨. • 전체 아동의 12%는 가족 보육시설에서, 13%는 민간 보육시설(부모협동, 교회, 직장 보육 시설 등)에서 양육함.
핀란드(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223,000 아동이 공공 혹은 민간 보육시설(유치원 혹은 유아학교 포함)에서 보육되고 있음 (전체 1~5세 아동의 62%). • 대부분의 보육 시설은 비영리 공공 보육 시설로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92%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음.
그리스(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취학전 아동은 공공보육시설에서, 8개월~취학전 아동은 유치원에서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은 맞벌이부부, 저소득가정, 취약계층(한부모, 고아, 이혼가정, 장애아,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주로 양육함. • 보육 시설은 중앙 정부의 지침을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육시설은 공공 보육 시설과 유사한 규칙과 규정이 적용됨.

자료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조사표를 통한 자체조사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보육 기반이 구축된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보육 시설은 국공립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육 시설의 90% 이상이 민간 보육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다수의 민간 보육 시설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질 낮은 보육 서비스, 보육료 부정 수급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0~2세 무상 보육으로 인해 수요자 측면에서도 보육 서비스 기수요 등의 문제로 귀결
- 민간 보육 시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육 시장이 “시장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어 정부 보조금은 없는 상태에서 민간 보육 시설이 보육료를 자율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의 보육 시장은 미국의 상황과 달라서 보육 시장이 시장의 원리로 작동되기 어렵고, 저출산 문제 심각성으로 인해 아동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강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순수 민간 중심의 보육 시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상황

-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전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 서비스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직장 보육 시설 현황

가. 개념

- 직장 보육 시설은 근로자 자녀에 대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자사내의 건물 내에 혹은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일정한 건물 내에 설립한 보육 기관임.

-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낮은 실태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근로자 30명 이상 기업 중 3%가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17%, 근로자 50~99명 기업의 5%가 직장 보육 시설을 운영

- 유럽의 경우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의 13%가 직장 보육 시설을 운영

나. 국가별 직장 보육시설 현황과 인센티브 제도

〈표 4-4〉 국가별 직장 보육시설 현황과 인센티브 제도

구분	시설 설치 현황 및 관련 인센티브
한국(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직장보육시설 개소수: 401개소 • 부동산 관련 세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제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 개별소비세 면제(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사기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교육 기자재 •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 사업체 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비중: 17%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 사업체 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이용자에게도 제공하는 사업체: 5% - 육아휴직이용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 3%
프랑스(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직장보육시설 개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어린이집 151개소, 복합보육기관 149개소 • 직장보육시설 운영주체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어린이집 (공공 82.5%, 비영리법인 9.9%, 민간영리 3.5%, 기타민간 4.2%) - 복합보육기관 (공공 28.4%, 비영리법인 20.5%, 민간영리 39.4%, 기타 민간 11.8%) • 10인 이상 사업체 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이용자에게도 제공하는 사업체: 7% - 육아휴직이용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 8%
일본(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보육시설 총 4,137개소 •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금 지원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 사업체 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비중: 3%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 사업체 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이용자에게도 제공하는 사업체: 7% - 육아휴직이용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 4%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 사업체 중 보육 서비스(보육 시설 설치 혹은 보육료 지원)를 제공하는 사업체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이용자에게도 제공하는 사업체: 9% - 육아휴직이용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 5%

주 :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료 수당을 지원하는 기업 모두 포함
 자료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조사표를 통한 자체조사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합의

- 우리나라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 이러한 의무 사업장의 보육 서비스 제공 이행율을 보면 2010년 12월 말 현재 미이행 기업 비율이 30.6%로서 높은 현황임.
 -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기업체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중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 국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직장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혹은 집에서 가까운 지역 내 어린이 집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함.
 -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기업은 사회적 책무로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4. 만5세 이하 아동의 보육 형태별 이용 비율

가. 개념

- 보육 형태별 이용 현황은 크게 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와 비공식적 육아 지원 인프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에는 보육 시설 (일반 보육 시설, 놀이방, 가정 보육 시설 등), pre-school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정규 교육 기관, 방과후 보육 서비스 제공 센터가 포함
 - 비공식 육아 지원 인프라는 개인 보육 도우미에 의한 보육, 친인척에 의한 보육, 친구 및 이웃 사람에 의한 보육 등이 포함됨.

□ 유럽 국가에서 아동의 보육 형태별 이용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영아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돌보고 있으며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경우 조부모 혹은 친인척이 돌보고 있음.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여 3세부터 취학전 아동의 경우 50% 이상이 육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유럽 국가에서 3세부터 취학전 연령 아동의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취학전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위한 유아 교육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임.

나. 국가별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표 4-5〉 국가별 1~5세 아동의 주된 보육시설 이용 방법

구분	주된(primary or favorable) 이용 방법(%) 어린이집(보육시설), 유치원(교육시설), 기타시설, 부모직접, 조부모, 이웃, 베이비시터, 기타
한국(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61.9%), 조부모(12.9%), 친인척(7.7%), 기관(11.8%), 비혈연(0.9%), 없음(4.8%)
미국(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세 아동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 아동의 50%가 시설 혹은 개인 보육서비스 이용 (개인 보육서비스 26%) - 2~3세 39% 특히 3세의 경우 48% 보육 시설 이용 - 4~6세 56% 유치원 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세: 대부분 부모 직접 돌봄 혹은 친인척에 의한 양육 • 1~2세: 30% 영아가 개인 보육사 혹은 민간 보육 시설에서 양육 • 3~4세: 3세 96%, 4세 98% 유아 학교에서 교육 • 5~6세: 의무교육이 5세 이후부터 시작, 5세 이상 모든 아동은 종일제 학교 교육 참여
독일(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 영아의 8.6%만이 보육 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서독지역 2.8%, 과거 동독지역 36.9% • 3세 이상 조기 교육 이용률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서독지역 90%(종일제 이용 24%) - 과거 동독지역 98.4% 종일제 이용
프랑스(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 영아의 주된 보육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0~2세 영유아: 부모 직접(63%), 가정보육시설 (18%), 어린이집(10%), 조부모 혹은 친인척(4%), 가정 파견 보육사(2%), 기타(3%) - 맞벌이 부부 0~2세 자녀: 부모 직접(27%), 가정보육시설 (37%), 어린이집 (18%), 조부모 혹은 친인척(9%), 가정 파견 보육사(4%), 기타(5%)

구분	주된(primary or favorable) 이용 방법(%)
	어린이집(보육시설), 유치원(교육시설), 기타시설, 부모직접, 조부모, 이웃, 베이비시터, 기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2,137,000명, 33.8%), 유치원(1,556,000명, 24.6%), 부모직접(2,983,000명, 47.2%), 조부모 (600,000명, 9.5%), 이웃 혹은 베이비 시터(472,000명, 7.5%) * 어린이집은 인가시설과 인가외 시설 합계 * 복수응답으로 합계가 100% 이상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세: 부모가 육아휴직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음 - 1~2세 45%, 2~3세 86%, 3~4세 91%, 5~6세 96% • 영유아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2세 아동의 50% 이상 이용, 6~9세 아동의 75% 이용
핀란드(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유치원(144,371명, 35%), 기타 지자체 보육시설(56,301명, 14%), 민간 유치원(9,677명, 2%), 가족 보육시설(46,624, 11%), 민간 보육시설(17,278명, 4%), 부모직접, 친인척, 보육도우미(135,930명, 33%)

자료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조사표를 통한 자체조사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54.07%, 3~5세 유아의 보육 시설 혹은 유치원 이용률은 82.04%로 OECD 평균 수준 (0~2세 30%. 3~5세 77%)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이러한 보육 시설 이용률의 증가는 최근 보육료 이용 비용 지원의 확대에 따라 이루어진 경향이 크며 취업 여성뿐만 아니라 전업 주부에 대해서도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보육 시설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라는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취업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업 주부를 대상으로는 일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 보육 서비스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일제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영유아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음.

- OECD 국가의 경우 영아 보육에 대하여 시설 보육 보다는 개인 보육사에 의한 보육 서비스 이용이 높은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 영아에 대해서도 시설 보육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여성 가족부에 의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용 시간 제한 및 저소득층 중심의 이용 비용 지원으로 인해 국가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 영아에 대해서는 개인 보육 서비스가 선호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가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은 개인 보육사 제도 활성화가 요청됨.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자녀 돌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친인척에 의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호주의 경우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 양육 수당이 조부모에게 지원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조부모 수당” 등 관련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 · 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

가. 개념

-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서비스이용은 여성고용과 밀접한 영향이 있음. 즉 어린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고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국가에서 여성고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나. 국가별 현황과 추이

□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6세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3세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스웨덴(46.7%), 프랑스(42.0%), 영국(40.8%) 순으로 나타남.

– 전통적인 가족을 선호하는 독일과 그리스에서 어린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

○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프랑스(99.9%), 영국(92.7%), 독일(92.7%), 스웨덴(91.1%), 일본(90.0%) 순으로 나타남.

〈표 4-6〉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2008)

구분	3세미만	3세	4세	5세	3-5세
미국	31.4	36.3	57.5	73.3	55.7
영국	40.8	82.4	97.3	98.8	92.7
독일	17.8	86.9	95.4	95.8	92.7
프랑스	42.0	99.0	100.0	100.6	99.9
일본	28.3	75.4	95.7	98.2	90.0
스웨덴	46.7	88.6	91.8	93.0	91.1
핀란드	28.6	68.5	75.4	78.9	74.2
그리스	15.7	0.0	52.4	88.0	46.6
한국	37.7	73.3	79.3	86.3	79.8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는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어린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영아에 대한 공식·비공식보육서비스 이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최근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과 양육수당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제고되고 있음.

6. 방과후 보육

가. 개념

-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서 방과후보육서비스는 취학전후를 모두 포함하여 3-11세 연령을 대상으로 함(OECD, Family database). 그러나 한국에서는 3-6세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보육과 7-11세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시설이용 형태는 우리나라처럼 방과후에 주로 이용하는 국가들도 있으며, 방과전과 후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나. 국가별 현황과 추이

- 방과후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은 최소 2% 수준에서 최대 8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스웨덴과 핀란드, 프랑스와 영국,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 방과후보육서비스는 주로 영아들을 대상으로 매우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 스웨덴의 경우 6-8세 영아의 방과후보육서비스 등록율은 84.2%임.
- 반면에 보수적인 가족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7〉 방과후보육 현황

(단위: 세, %)

구분	기준년도	연령	등록율	서비스유형	아동대 교사 비율
미국	2008	3-5	n.a.	결합	주별로 다양 (10:1에서26:1)
		6-11			
영국	2008	0-14	22.3	결합	n.a.
독일	2006	5-8	7.4	수업전후	기초자치단체별 독자적인 가이드라인
		9-11	4.9		
프랑스	2007	3-6	20.8	수업전후	n.a.
		7-11	n.a.	-	
일본	2008	6-11	11.2	수업 후와 휴일	n.a.
스웨덴	2008	6-8	84.2	수업전후	9:1
		9-11	34.8		21:1
핀란드	2008	7-9	26.0	수업전후	n.a.
		10-11	n.a.	-	-
그리스	2007	4-5	40.8	수업전후	25:1
		6-11	22.9		
한국	2009	6-8	2.6	수업 후와 휴일	n.a.
		9-11	2.1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방과후보육서비스의 등록율은 매우 낮은 2% 수준임.

○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방과후보육보다는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으며, 이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보육서비스의 등록율이 낮은 것은 프로그램이 부모의 욕구에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학생의 욕구와 부모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보육은 맞벌이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나 이에 대한 정책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임.

-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보육 활성화와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7. 아동 수당

가. 개념

- 아동 수당이란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임.
- 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각 국가는 현금 형태로 자녀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국가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보편적인 형태로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보편적인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 중 호주, 프랑스, 독일은 저소득층, 영아 자녀 가정, 실업 가정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부모의 노동 형태에 따라서도 아동 수당 유형이 다양하여 벨기에의 경우 실업 후 7개월 이후부터 수당 급여액이 증가함.
 - 몇몇 국가에서 급여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 아이슬란드의 경우 급여액을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하며 이때 소득 기준은 자녀수에 따라서 조정됨.
- 아동 수당은 자녀가 정규 교육을 받는 전 기간 동안 지급되며 다만 자녀가 소득이 생기거나 결혼하거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수당 급여액은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기도 하나 많은 경우 자녀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

나. 국가별 아동 수당 제도의 내용과 특징

〈표 4-8〉 주요 국가의 아동 수당제도

구분	소득기준	대상자	조건/아동연령	지급 액수
스웨덴	•보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엄마에게 지급되나 특별한 요청 혹은 아빠가 돌보는 경우 아빠에게 지급 •2006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부부가 나누어 받는 것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거주 아동 •16세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1명당 1개월에 116 유로 •둘째(11유로), 셋째(39유로), 넷째(95유로), 다섯째 혹은 그 이상 (116 유로) 추가 지급
노르웨이	•보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르웨이 거주 아동 •18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1명당 118유로 •최단북쪽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1명 당 추가적인 보조금 39유로 지급
핀란드	•보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세 이하 자녀의 부모 혹은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란드 거주 아동 •17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1명당 1개월에 첫째 100유로, 둘째 110.50유로, 셋째 141유로, 넷째 161.50유로 다섯째 혹은 그 이상 182유로 •한부모의 경우 아동 1명당 46.60유로 추가 지급
프랑스	•보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이하 최소 2명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이하 부양자녀 최소한 2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당액수는 가족수와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2자녀 120.32유로, 3자녀 274.47유로, 4자녀 430.76유로, 5자녀 585.68유로 •자녀 연령 14세 이후 60.16 유로 증가하여 지급
독일	•보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에 거주하는 과세 대상자 •독일에 거주하지 않지만 부양자녀로 인해 과세 대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EEA 멤버 국가, 스위스 거주 아동 •18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164유로, 둘째 164유로, 셋째 170 유로, 넷째 혹은 그 이상 195유로
벨기에	•보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벨기에 거주 아동 •18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81.77유로, 둘째 151.30유로, 셋째 혹은 그 이상 225.90 유로

구분	소득기준	대상자	조건/아동연령	지급 액수
이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적용 • 취업자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자는 부인으로서 이혼하거나 법률적으로 별거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리 거주 아동 • 18세 이하 • 연소득은 법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됨 • 소득의 최소한 70%가 자영업에서 번 돈이 아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액수는 가구소득(100유로 기준)과 가족수에 따라 변동됨 •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12,500유로 이하 월 258.33 유로, 연소득 25,000~25,100유로 월 121.83유로, 연소득 67,000 유로 이상 급여 없음 • 한부모 가족의 경우 추가액 지급 •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을 9,677.76 유로 증가하여 적용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적용 (장애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거주 아동 • 18세 이하 • 연 가구소득 11,264 유로 이하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세 연간 500 유로, 3~18세 연간 291 유로 • 둘째 이상부터 연간 소득 기준은 15% 증가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조세체계에 따라 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있는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혹은 EU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 • 임금노동자는 전년도 50일 보험 가입 증명 • 18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자녀 8.22 유로, 2자녀 24.65유로, 3자녀 55.47유로, 4자녀 67.38유로, 이후 11.30 유로 추가 지급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은 영국 거주자여야 함 • 16세 이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0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 주당 18.80 파운드, 그 이상 출생 순위 자녀는 주당 12.55 파운드

자료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대부분의 OECD 국가 및 유럽 국가에서 보편적인 형태의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아동 수당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아동 수당이 실제로 각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금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의 아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인 기능으로의 역할도 큼.

○ 세계적인 초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는 아동 수당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휴가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조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 서비스 이용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현금지원은 매우 미약한 실정

○ 아동 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다자녀 가정 및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현재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 수당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 수당 제도로써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제5장 교육

1. 무상교육

가. 개념

- 무상교육은 자녀가 받는 교육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부담하며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 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고(취학의무), 무상교육은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육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예, 5세 누리과정).

나. 국가별 무상교육 현황

- 무상교육 제공 학년
 - 의무교육 종료 연령은 만 14세에서 16세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복지국가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포폴리즘형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표 5-1〉 무상 교육 종료 단계

구분	의무교육 종료 연령	무상교육 기간	비고
미국	17		
영국	16	12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독일	18	모든 교육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단, 공립만)
프랑스	16		
일본	15	9년	중학교까지
스웨덴	16	모든 교육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핀란드	16	모든 교육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르헨티나	17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단, 공립만)
그리스	14~15		
한국	14	9년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자료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표 5-2〉 국가간 의무교육 비교

의무교육 시행	점수	국가
초등학교	10	
초등학교 + 중학교	20	한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30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표 5-3〉 국가간 무상교육 비교

무상교육 시행	점수	국가
9년(중학교까지)	10	한국, 일본
12년(고등학교까지)	20	영국
모든 교육	30	독일,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 무상교육 제공 소득기준

-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소득 기준의 경우, 영국과 핀란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무상교육 제공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일본의 무상교육 제공 기준
 - 경제적 이유에 의해 취학이 곤란한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원조
 -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전원의 총소득액이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액 이하인 자, 가정의 경제사정이 급변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
 - 원조내용 :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하기사설비, 클럽 활동비, 소풍비, 이동교실비, 졸업기념앨범비, 통학비, 의료비

□ 무상교육 지원 금액의 범위

- 무상교육 지원 금액의 경우, 핀란드는 수업료, 기성회비 등 일체의 경비가 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일본의 경우에는, 수업료만 무상교육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의 경우, 수업료는 면제이나, 중학교의 경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자 부담 경비는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표 5-4〉 무상교육 지원 금액의 범위

구분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기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초/중)		
스웨덴			
핀란드	수업료 징수 금지	기성회비 없음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초/중)	○(학교운영지원비 부분적 면제)	

자료 : 조사표를 통한 자체조사

□ 무상교육 지원 방식

- 영국과 핀란드는 무상교육지원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경우 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표 5-5〉 무상교육 지원 방식

구분	부모 지원	학교 지원
미국		
영국		○(초/중/고)
독일		
프랑스		
일본	○(초/중)	
스웨덴		
핀란드		○(초/중/고/대)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초/중)

자료 : 조사표를 통한 자체조사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보편적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복지 수요 확대 등의 추세를 고려할 때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확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의무교육 종료 연령이 14세이고, 무상교육 제공 기간이 9년(중학교까지)으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따라서 향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연한 연장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무상교육 지원 금액의 범위에서 기성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있고,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방과후 학교, 수학여행 등)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향후 복지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무상교육 지원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2. 사교육

가. 개념

- 공교육이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영역, 형식 그리고 체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교육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형식의 교육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말하고, 학교 밖에서 사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지칭함.
- 사교육은 크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소질과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입시 준비를 위한 학원 및 과외 교육 등으로 구분됨.

나. 사교육 현황

- 등록금과 학교급식비를 제외하고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 등록금과 학교교육비를 제외하고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었음.
 - 영국과 핀란드의 경우 데이터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요구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사부담 공교육비’라고 부르는데,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GDP 대비 2.8%로 가장 높고, 미국이 2.1%, 일본이 1.7%로 나타남.
 -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0.1%, 스웨덴은 0.2%로 나타남.

〈표 5-6〉 국가별 GDP 대비 공·사부담 공교육비 비율

(단위 : %)

구분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	사부담 공교육비 비율	전체
미국	5.1.	2.1	7.2
영국	5.1	0.6	5.7
독일	4.1	0.7	4.8
프랑스	5.5	0.5	6.0
일본	3.3	1.7	4.9
스웨덴	6.1	0.2	6.3
핀란드	5.7	0.1	5.9
아르헨티나	5.3	0.7	6.1
그리스	m	m	m
한국	4.7	2.8	7.6

자료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표 5-7〉 국가간 사부담 공교육비 비교

사부담 공교육비 비율	점수	국가
0.0% ~ 1.0%	30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1.0% ~ 2.0%	20	일본
2.0% ~ 3.0%	10	한국, 미국

□ 국가별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

- 일본의 경우 사교육비가 8.2조 엔으로 GDP 대비 약 1.7%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에는, 2011년 GDP가 1,237조원이고 사교육비가 20조원으로 GDP 대비 1.6%가 사교육비로 지출되었음.
- 기타 국가의 경우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핀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교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교육이 존재하나 그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 5-8〉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

(단위 :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GDP 대비 사교육비	-	-	-	-	1.7%	-	-	-	-	1.6%

자료 : 조사표를 통한 자체조사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사교육은 한국과 일본 등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일부 국가의 문제로 인식됨.
 -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비 가운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사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GDP 대비 2.8%), 이와는 별도로 GDP의 1.6%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반면, 공부담 공교육비는 4.7%로서 일본, 독일과 함께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고, 국가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됨.

3. 학교 급식

가. 개념

- 학교급식이란 학교 안에 급식 시설 설비를 갖추고 그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함.
 - 무상급식이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나. 학교급식 현황

- 초·중·고등학교의 한 끼당 급식비 평균 금액
- 조사대상 국가의 초등학교 1인당 급식비는 2.00달러(일본)에서 3.35달러(한국) 사이로 나타남(단, 핀란드의 경우에는 급식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의 경우 3,35달러로 1인당 급식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남.
 - 국가 유형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표 5-9〉 국가별 1끼당 급식비

(단위 : ppp dollar)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	2.68		
영국	2.67		
독일	2.91		
프랑스			
일본	2.00		
스웨덴	2.91		
핀란드	0	0	0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3.35		

자료 : 이덕란 외(2010),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핀란드는 대사관을 통한 별도 조사 자료.

〈표 5-10〉 국가간 1끼당 급식비 비교

1끼 당 급식비	점수	국가
0 ~ 1달러	40	핀란드
1 ~ 2달러	30	일본
2 ~ 3달러	20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3 ~ 4달러	10	한국

□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

-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 핀란드 등 복지국가의 경우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반면, 일본(14.5%)과 영국의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편임.
- 한국의 경우, 최근 무상급식 확대 이후 수혜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도 국가 유형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표 5-11〉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

(단위 :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	49.7%		
영국	19.2%	15.9%	6.1%
독일			
프랑스			
일본	14.5%	14.5%	
스웨덴	100%	100%	100%
핀란드	100%	100%	100%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59.7%	10.6%	3.8%

자료 : 이덕란 외(2010).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영국과 일본은 대사관을 통한 별도 조사 자료.
한국은 2011년 7월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 조사 자료

〈표 5-12〉 국가간 무상급식 제공 학생 비율 비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 비율	점수	국가
0 ~ 20%	10	한국(중/고), 일본, 영국
21 ~ 40%	20	
41 ~ 60%	30	한국(초), 미국
61 ~ 80%	40	
81 ~ 100%	50	스웨덴, 핀란드

□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소득기준

- 핀란드의 경우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자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소득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국의 경우에는 소득지원 대상자, 소득기반 구직자 수당, 소득 연계 고용보조수당, 「이민 및 망명법」 제4조 해당자, 자녀세액 공제, 국가연금 보장요소 적용자들의 자녀들이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13〉 주요국의 무상급식 제공 기준

구분	무상급식 제공대상	비고
미국	- 가계소득 및 가족수가 고려된 ‘연방빈곤지표(FPG)’ 130%미만의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가족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지원대상 가구의 자녀	- 연방빈곤지표 130%에서 185%미만은 할인 급식
영국	- 잉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는 다음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 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제공함 :소득지원, 소득기반 구직자수당, 소득연계 고용·보조 수당, 「이민 및 망명법」 제4부 해당자, 자녀세액 공제, 국가연금 보장요소 적용 대상자	- 스코틀랜드는 항목 및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독일	- 초등 및 중등교육 I 단계의 개방형 또는 의무형 전일제 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州)의 사례
일본	-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요보호자’와 ‘준보호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전원의 총소득액이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액 이하인 자, 가정의 경제사정이 급변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	- 「학교급식법」 제 7조 제 2항
한국	- 「학교급식법」 제 9조 제 2항의 제 1호부터 제 4호에 규정한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의 우선지원 대상	- 「학교급식법」 제 9조 제 2항

자료 : 이덕란 외(2010),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일본은 대사관을 통한 별도 조사 자료.

□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급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단,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14〉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급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			
영국	○	○	○
독일			
프랑스			
일본	○	○	
스웨덴			
핀란드	○	○	○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	○	○

□ 무상급식 지원 방식

- 핀란드, 영국,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의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와 학교장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모두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15〉 무상 급식 지원 방식

구분	부모에게 현금 지급	학교에 지원
미국		
영국		○(초/중/고)
독일		
프랑스		
일본	○(초/중)	○(초/중)
스웨덴		
핀란드		○(초/중/고)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

주: 일본의 경우,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와 학교장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있음

□ 국가별 급식비 부과 체계

○ 국가별 급식경비 부과체계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 핀란드와 미국의 경우, 중앙 정부의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핀란드의 경우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45.3%를 부담함).
- － 반면, 스웨덴은 지방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음.
- － 일본, 영국, 한국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경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독일의 경우에는 주정부, 지자체, 학부모 분담이 4:2:4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16〉 국가별 급식경비 부과 체계

(단위 : %)

구분	중앙정부	주/지자체	학부모	기타
미국	50.6	8.8	24.2	16.4
영국		(30.4)	(69.6)	
독일		40/20	40	
프랑스				
일본	(5.0)		95.0	
스웨덴		100		
핀란드	(54.7)	(45.3)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28.3)	3.9	67.0	0.8

자료 : 이덕란 외(2010).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들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보편적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기준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 국가별 1인당 급식비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경우, 무상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보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특히, 유치원 등 유아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문해율

가. 개념

- 문해(文解) 또는 문자 해득(文字解得)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넓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말함. 유네스코는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 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함.
- 문해율이란 전체 국민 가운데 문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 문맹률이란 반대로 문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말함.

나. 문해율 현황

- 대부분의 국가들의 문해율이 9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는 상대적으로 문맹률이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문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5-17〉 국가별 문해율

(단위 :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문해율	99.0	99.0	99.0	99.0	99.0	99.0	99.0	97.2	96.0	99.8

자료 : UNDP(2007/2008)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문해율 역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함. 향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현재의 교육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임.

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가. 개념

- 공교육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의 예산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를 말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란 학생 1인에게 투입되는 공교육비를 말함.

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현황

-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국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미국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공교육비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의 경우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미국의 1/3 수준이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8〉 국가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단위 : ppp 달러)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미국	9,982	12,097	29,910
영국	8,758	9,487	15,310
독일	5,929	8,606	15,390
프랑스	6,267	10,231	14,079
일본	7,491	9,092	14,890
스웨덴	9,080	9,940	20,014
핀란드	7,092	8,659	15,402
아르헨티나	2,511	3,531	4,411
그리스	m	m	m
한국	5,420	7,931	9,081

자료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OECD 평균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고등교육 부문의 투자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6. 교사 1인당 학생수

가. 개념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체 교사 수 대비 학생 수를 말함.
 -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개별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도움 제공이 높아져,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인프라 지표로서 매우 중시되고 있음.

나. 교사 1인당 학생수 현황

- 국가별 유형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스웨덴, 중학교의 경우에는 핀란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핀란드와 거의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5-19〉 국가별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	14.8	14.3	15.1
영국	19.9	16.1	12.3
독일	17.4	15.1	13.9
프랑스	19.7	14.9	9.6
일본	18.6	14.5	12.2
스웨덴	12.1	11.3	13.2
핀란드	13.6	10.1	16.6
아르헨티나	16.0	15.3	8.8
그리스	m	m	m
한국	22.5	19.9	16.7

자료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매우 많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으나, 최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10년 안에 OECD 평균에 도달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교원 수급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7. 고등교육 이수율

가. 개념

-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체 성인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즉,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을 말함.

나. 고등교육 이수율 현황

- 국가 유형별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음.
- 일본이 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르헨티나가 1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의 경우, 일본, 미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25~34세의 젊은 층 가운데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63%로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됨.

〈표 5-20〉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율(2009)

(단위 :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한국
고등교육 이수율(전체)	41	37	26	29	44	33	37	14	24	39
25-34세	41	45	26	43	56	42	39	m	29	63

자료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고등교육 입학률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조만간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양질의 고급 인적자원을 풍부히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시에 Overeducation으로 인하여 대졸실업, 하향취업 등의 주 원인이 되고 있어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8. 대학 등록금 수준

가. 개념

- 대학교에서 학습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함.

나. 대학 등록금 현황

- 국가유형별로 대학등록금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등록금이 가장 비싼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복지국가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등록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많은 국가로 조사되고 있음.

〈표 5-21〉 국가별 대학 등록금 수준

(단위 : ppp 달러)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미국	6,312	22,852
영국	a	4,840
독일	m	m
프랑스	190~1,309	1,128~8,339
일본	4,602	7,247
스웨덴	등록금 없음	a
핀란드	등록금 없음	a
아르헨티나	m	m
그리스	m	m
한국	5,315	9,586

자료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합의

-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등록금을 포함하여 대학 재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6장 보건·의료

1. 영아사망률

가. 개념

□ 출생아 1,000명당 첫돌 이전에 사망한 영아수

나. 국가별 영아사망률 현황

-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등은 영아사망률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낮으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3.5명으로 일본 2.4명보다는 높으나 선진국 수준의 낮은 사망수준을 보이고 있음.
 -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의 개선, 사회 환경의 꾸준한 개선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낮아졌음.
- 아르헨티나의 영아사망률은 12.7명으로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6-1〉 영아사망률(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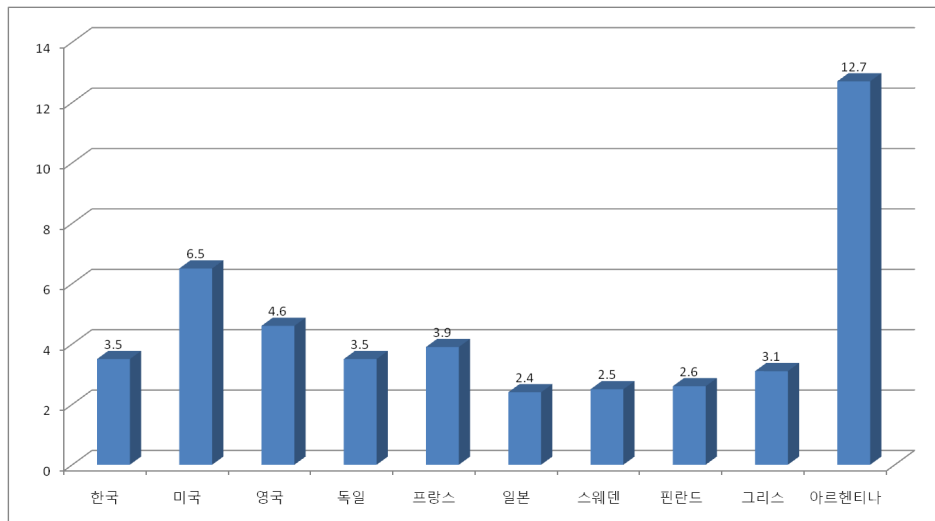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국 (2008)	미국 (2008)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아르헨티나
영아 사망률	3.5	6.5	4.6	3.5	3.9	2.4	2.5	2.6	3.1	12.7

주 : 출생 1,000명당 사망 수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그림 6-1〕 영아사망률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영아사망률은 기대수명과 함께 그 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정도와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그리고 전반적인 보건환경을 가름하는 기본 지표의 하나임.
- 우리나라는 모성과 영아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출생이수의 감소 등으로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영아사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매우 낮아 영아사망률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

구되고 있음. 보건정책은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환경의 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됨.

2. 자살에 의한 사망률

가. 개념

-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한 개인이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자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나. 국가별 현황

-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자살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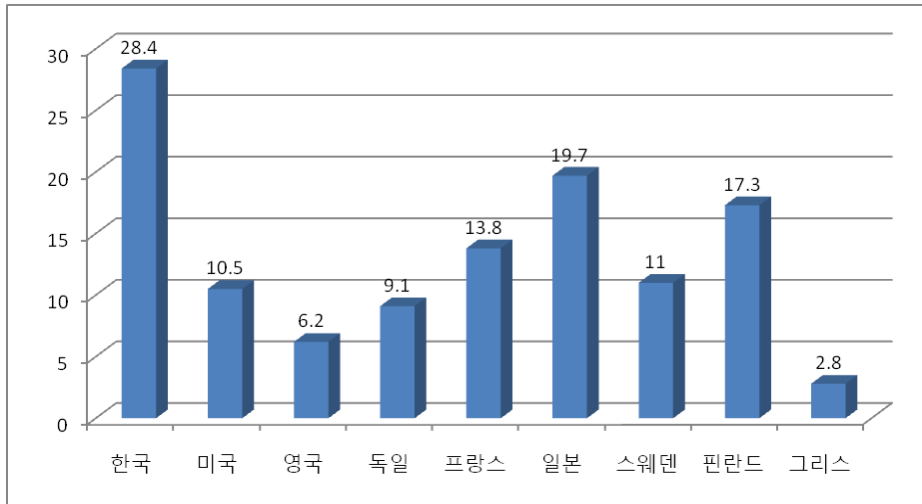
〈표 6-2〉 자살의 연령별표준화 사망률(2009)

(단위 : 명/인구 100,000명)

구분	한국	미국 (‘07)	영국	독일 (‘06)	프랑스 (‘08)	일본	스웨덴 (‘08)	핀란드	그리스
인구10만명당 자살률	28.4	10.5	6.2	9.1	13.8	19.7	11.0	17.3	2.8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6-2] 자살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 홍보방안 마련 및 추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경제사회적인 원인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의식의 고취와 상호 관심 및 사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임에 의한 사망률

가. 개념

- 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사람 수

나. 국가별 현황

□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42.9로 일본이나 핀란드보다는 높으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암에 의한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훨씬 높아 2009년에 여성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91.1이었으나 남자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220.6으로 여자보다 약 2.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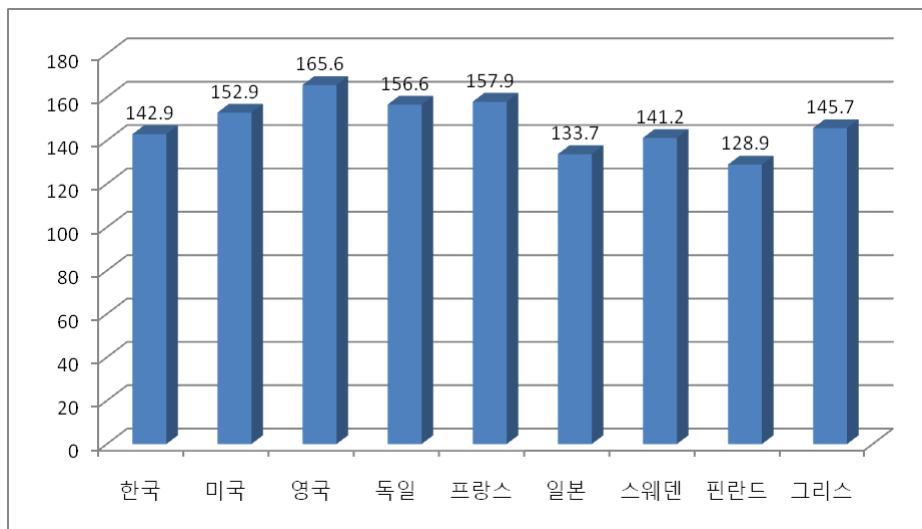
〈표 6-3〉 전체 암의 연령표준화 사망률(2009)

(단위 : 명/인구 100,000)

구분	한국	미국 (’07)	영국	독일 (’06)	프랑스 (’08)	일본	스웨덴 (’08)	핀란드	그리스
인구10만명당 사망률	142.9	152.9	165.6	156.6	157.9	133.7	141.2	128.9	145.7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6-3〕 전체 암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경제사회발전과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정부의 노력 등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암 예방 및 검진사업 등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으로 암 발생을 억제하고 조기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병원 병상 수

가. 개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병상 수

나. 국가별 현황

- 한국의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8.3개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은 수준임.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인구 1,000명당 13.7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스웨덴이 2.8개, 미국 3.1개, 영국 3.3개, 그리스 4.8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다 훨씬 적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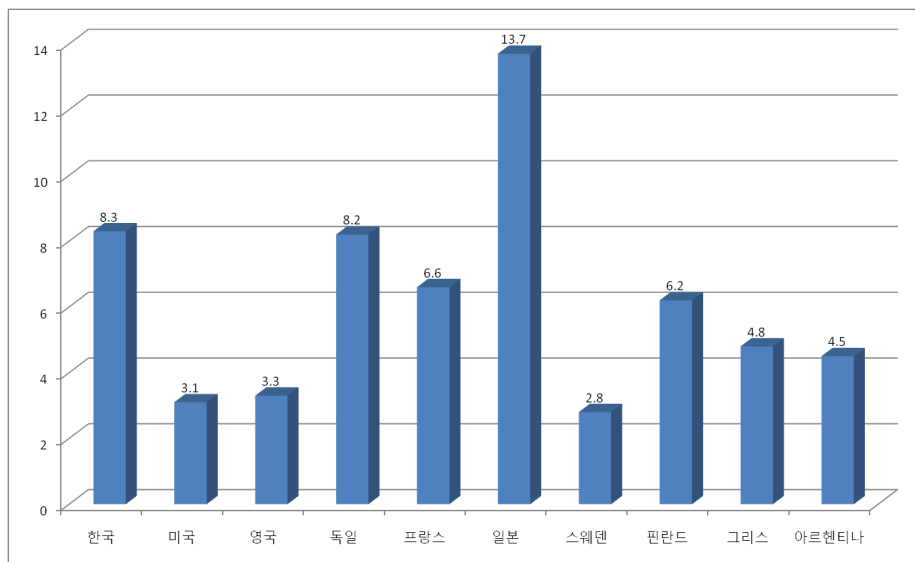
〈표 6-4〉 병원 병상 수(2009)

(단위 : 병상수/인구 1,000명당)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아르헨티나 (2010)
병상수	8.3	3.1	3.3	8.2	6.6	13.7	2.8	6.2	4.8	4.5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그림 6-4〕 병원 병상 수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아르헨티나)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병원 병상은 크게 증가하여 왔음.

- 병원 병상이 많다는 것은 입원의 용이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의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환자의 편중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5. 인구대비 의사 수

가. 개념

- 가장 중요한 의료자원인 의사인력은 의료의 혜택 및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임. 인구수에 비례하여 충분한 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다 좋은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함.

나.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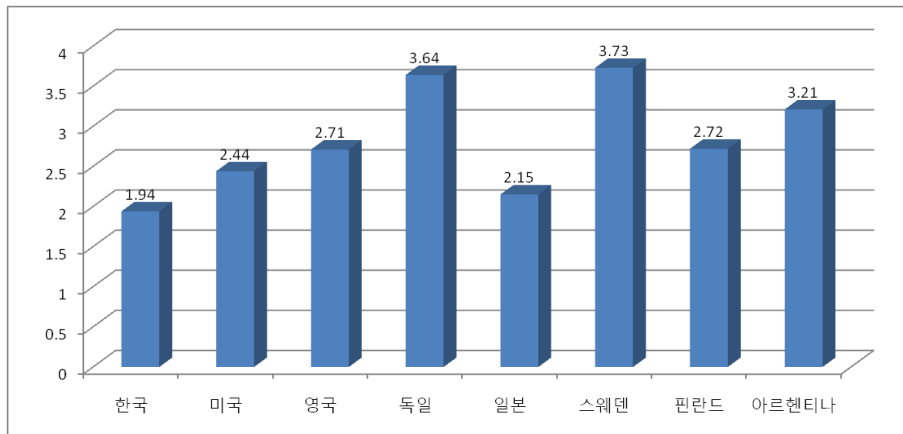
- 인구대비 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인구 1,000명당 3.73명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많은 국가는 독일로 인구 1,000명당 3.64명인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1.95명이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많은 2.15명으로 나타남.

〈표 6-5〉 인구대비 의사 수 분포(2009)

(단위: 명)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2008)	스웨덴 (2008)	핀란드 (2008)	아르헨티나 (2004)
의사 수	94,672	749,566	164,891	297,835	274,992	34,383	14,455	122,623
총인구대비 (1,000명당)	1.94	2.44	2.71	3.64	2.15	3.73	2.72	3.16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아르헨티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WHO Web site, <http://apps.who.int/ghodata/>

[그림 6-5] 인구 천명당 의사 수 분포(2009)



주 : 일본(2008), 스웨덴(2008), 핀란드(2008), 아르헨티나(2005)

자료 : 아르헨티나는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OECD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사의 충분한 진료를 받을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함을 의미함.
- 향후 의사 수의 변동을 예측하여 적정규모의 의사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전문분야별 의사의 분포

가. 개념

- 적절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의와 전공별 전문의의 적절한 분포가 요구됨. 전공의 배출은 일반적으로 수요에 맞춰 이뤄지나, 진료의 어려움 또는 개업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어 분야별로 불균형을 이루기도 함.

나. 국가별 의사 분포 현황

□ 일반의사의 비율을 보면 프랑스가 49.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우리나라로 41.9%를 점하고 있음.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로 4.5%이며,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12.3%를 나타냄.

○ 전공분야별 의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외과의사가 전체의사의 22.7%로 가장 높았으며, 내과가 20.3% 그리고 산부인과는 5.4%를 점하였음. 미국은 내과가 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외과로 15.7%를 점하였음. 영국은 외과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과로 22.5%를 점하였음. 독일은 내과가 22.0%, 외과가 20.4%였음.

○ 일반의사의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가 4.5%에서 가장 높은 국가는 49.0%였으며, 전문분야별로는 소아과가 2.4~9.6%, 산부인과가 3.5~5.5%, 정신과가 2.6~7.1%, 내과가 19.8~28.9%, 외과가 13.0~26.8%, 기타가 4.0~39.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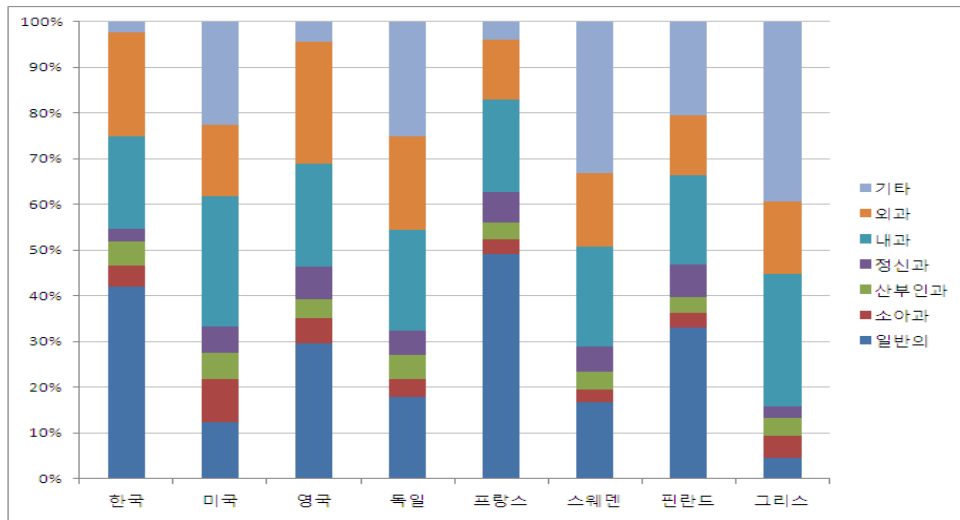
〈표 6-6〉 의사 분포

(단위: %)

구분	일반의	전문의						
		계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내과	외과	기타
한국	41.9	58.1	4.7	5.4	2.6	20.3	22.7	2.4
미국	12.3	87.7	9.6	5.5	5.9	28.3	15.7	22.6
영국	29.7	70.3	5.4	4.1	7.1	22.5	26.7	4.4
독일	18.0	82.0	3.8	5.3	5.5	22.0	20.4	25.1
프랑스	49.0	51.0	3.4	3.7	6.5	20.3	13.0	4.0
스웨덴	16.7	83.3	2.7	4.0	5.6	21.8	16.2	33.1
핀란드	33.1	67.0	3.2	3.5	7.0	19.8	13.1	20.5
그리스	4.5	95.5	4.8	4.0	2.6	28.9	15.9	39.3
범주	4.5 ~49.0	51.0 ~95.5	2.4 ~9.6	3.5 ~5.5	2.6 ~7.1	19.8 ~28.9	13.0 ~26.8	4.0 ~39.3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6-6] 의사 분포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는 일반의사의 비율은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소아과는 중간정도, 산부인과는 높은 편에 그리고 정신과와 내과는 낮은 편에 외과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나 전문의의 적정분포는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외국의 예로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힘들므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잘 파악하여 적정분포를 판단하고 그 여부에 따라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7. 병원 수

가. 개념

- 병상을 갖춘 병원 수의 정도는 필요한 치료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 인구에 비하여 충분한 병원 수를 갖추고 있다면 필요시 보다 용이하게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아 좋은 의료환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나. 국가별 병원 수 현황

- 인구 100만명당 병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68.5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우리나라로 54.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국가는 미국으로 18.9개소를 그 다음으로 적은 국가는 그리스로 27.7개소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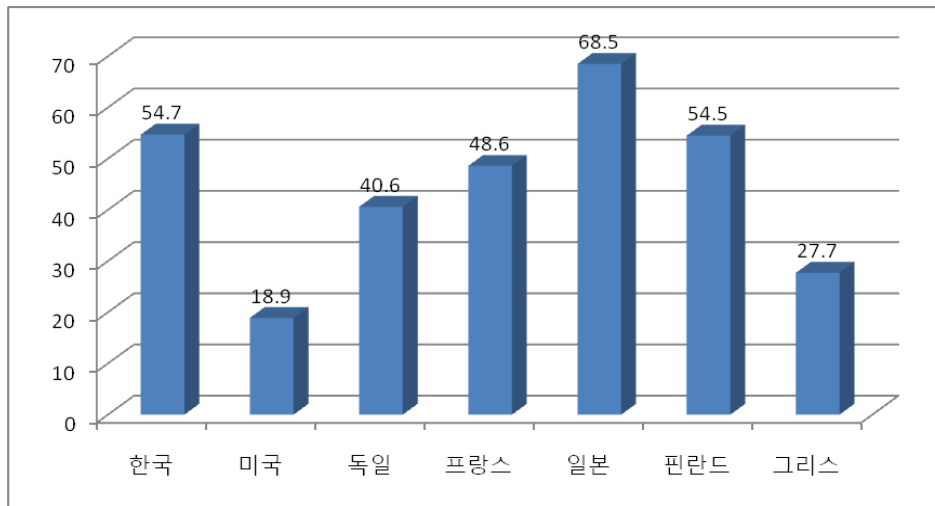
〈표 6-7〉 병원 수

(단위: 개소)

구분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핀란드	그리스
총 병원 수	2,666	5,795	3,324	3,019	8,739	291	313
년 도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인구 100만명당	54.7	18.9	40.6	48.6	68.5	54.5	27.7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6-7] 인구 백만명당 병원 수(2009)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는 OECD 회원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병원의 분포는 서울 중심의 대도시에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 적절한 분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의사인력과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8.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가. 개념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한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나. 국가별 국민의료비 현황

□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17.4%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프랑스가 11.8%, 독일이 11.6%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6.9%였고, 그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8.5%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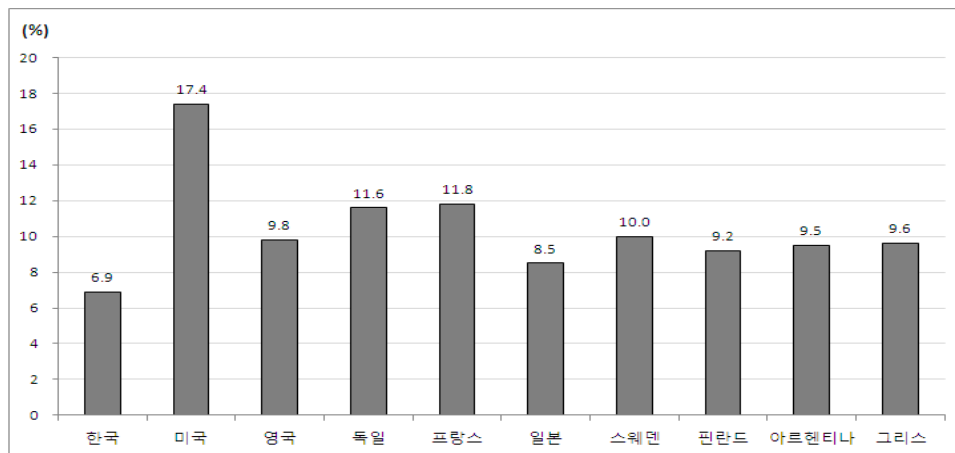
〈표 6-8〉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비중	6.9	17.4	9.8	11.6	11.8	8.5	10.0	9.2	9.5	9.6
년도	2009	2009	2009	2009	2009	2008	2009	2009	2009	2007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아르헨티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WHO Web site, <http://apps.who.int/ghodata/>

〔그림 6-8〕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2009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OECD 국가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민의료비가 GDP의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수준의 발전에 따라 GDP가 증가한다면 국민의료비의 비중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9. 국민 1인당 의료비

가. 개념

-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PPP US\$(구매력평가환율, Purchasing Power Parity)로 측정하며 건강보험, 민간보험 등을 통해 국민이 실제 지출하는 의료비의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임.
- 의료비 지출 규모는 의료제도의 재원조달 및 조직 구조 등으로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시장 및 사회적 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OECD 국가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

나. 국가별 국민 1인당 의료비 현황과 추이

- 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는 전국적인 보건의료망이 없는 미국(\$8,23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리스(\$2,913)와 한국(\$2,035)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6-9〉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단위 : PPP US\$)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한국
2010	8232.8	3433.2	4338.4	3974.0	3034.6	3757.7	3250.9	2913.7	20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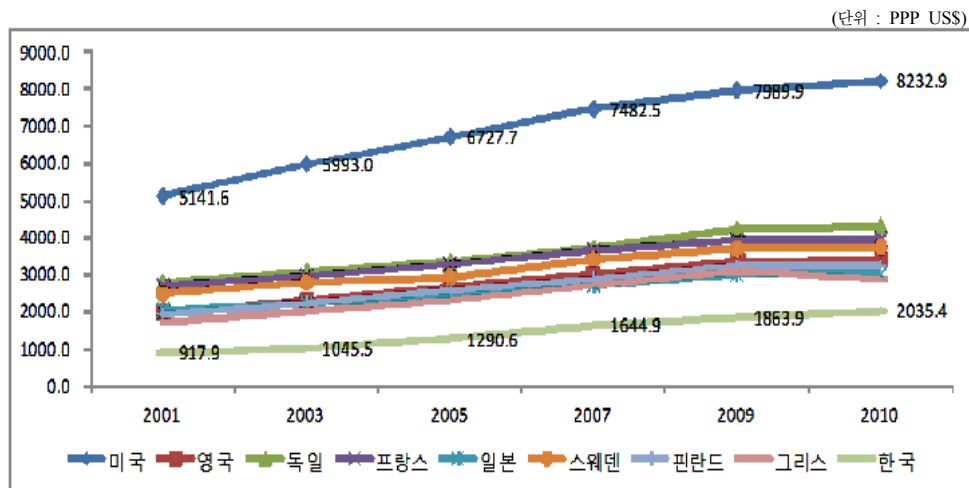
자료 : OECD Health Data 2012

□ 지난 10년간 국민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국민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 그리스는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6-9]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추이



자료 : OECD Health Data 2012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지난 10년동안 약 2.2배 증가하였음.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정부의 공공지출의 증가와 함께 가계지출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각 부문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공공지출을 통제하는 방안과 가계지출의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10. 의료비의 공공지출 및 가계지출 비중

가. 개념

- 국민의료비에서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비중과 가계의 부담 비중을 나타냄
 -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지출과 가계지출은 보편적으로 역의 관계를 가짐. 즉 의료비 공공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지출은 줄어들고, 공공부문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면 가계부문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나. 국가별 의료비 부문별 지출 비중 현황

1) 공공지출

-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공공지출 비중은 영국이 84.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스웨덴이 81.5%, 일본이 80.8%의 순이었으며, 미국이 47.7%로 가장 낮았으며, 우리나라는 58.2%로 낮은 국가에 속함.

2) 가계지출

-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가계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32.4%로 가장 높고, 다음은 핀란드로 19.0%였으며, 프랑스가 7.3%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영국으로 10.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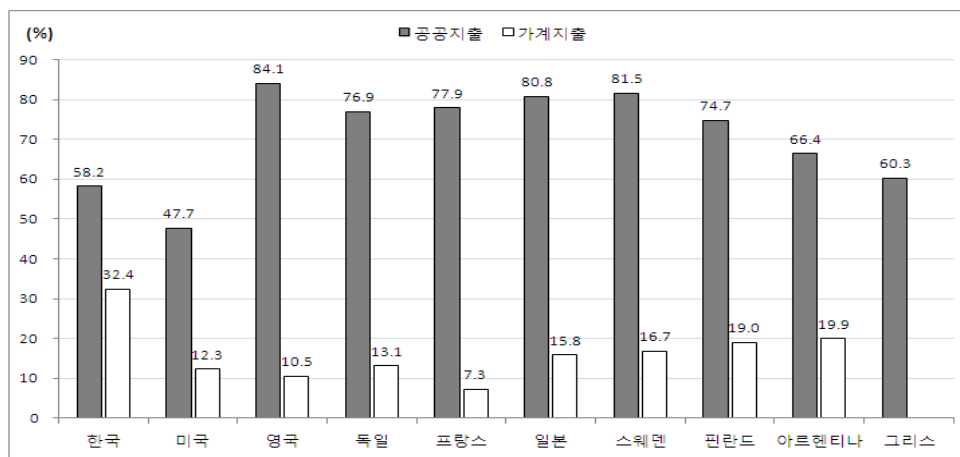
〈표 6-10〉 공공지출 및 가계지출 비율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공공지출	58.2	47.7	84.1	76.9	77.9	80.8	81.5	74.7	66.4	60.3
년 도	2009	2009	2009	2009	2009	2008	2009	2009	2009	2007
가계지출	32.4	12.3	10.5	13.1	7.3	15.8	16.7	19.0	19.9	-
년 도	2009	2009	2009	2009	2009	2008	2009	2009	2009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아르헨티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WHO Web site, <http://apps.who.int/ghodata/>

〔그림 6-10〕 공공지출 및 가계지출 비율: 2009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공공지출 비율은 낮은 반면 가계지출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OECD 국가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큰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공공지출 부담을 높이고, 가계지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1.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

가. 개념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몇 번이나 진료받았는가를 나타내는 국민 1인당 진료횟수는 횟수가 많을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하나는 질환 발생률이 같다면 의료기관의 이용이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또 다른 하나는 발생률이 높아 의료기관을 많이 찾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나. 국가별 진료횟수 현황과 추이

-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는 2010년 기준 한국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12.9회). 그러나 일본 역시 2009년 기준 13.1회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반면에 스웨덴(2.9회)과 미국(3.9회)은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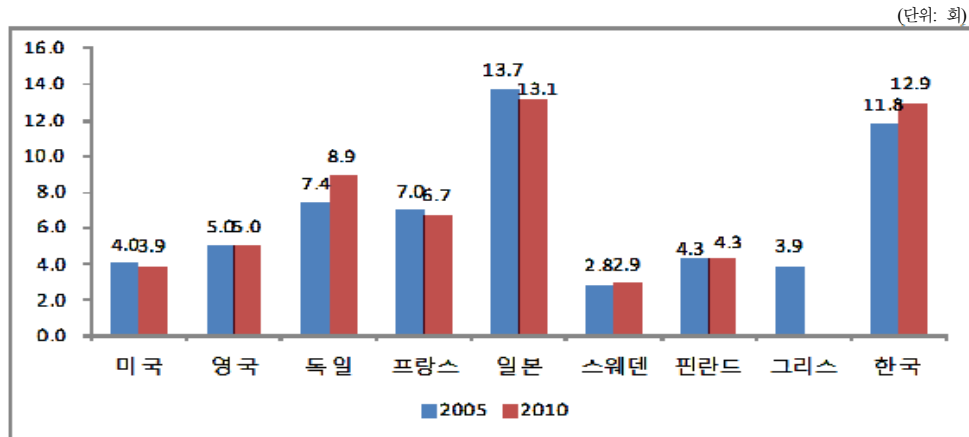
〈표 6-11〉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

(단위: 회)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한국
진료횟수	3.9	5.0	8.9	6.7	13.7	2.9	4.3	-	12.9

자료 : OECD Health Data 2012

- 2005년과 2010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영국과 핀란드에서 지난 5년간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스웨덴, 한국은 지난 5년간 의사 진료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독일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과 프랑스, 일본에서는 지난 5년간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는데 대체로 감소폭은 크지 않음.

[그림 6-11]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 추이



주: 일본과 영국의 2010년 데이터는 2009년 자료임.
 자료 : OECD Health Data 2012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다른 국가의 국민의 1인당 의사 진료횟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다른 국가의 국민에 비하여 과다 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즉,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적은 의사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오히려 국민 1인당 의사진료수가 많다는 것은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임.

12. 제왕절개

가. 개념

- 제왕절개는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를 출산하는 수술로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 시행함.

나. 국가별 제왕절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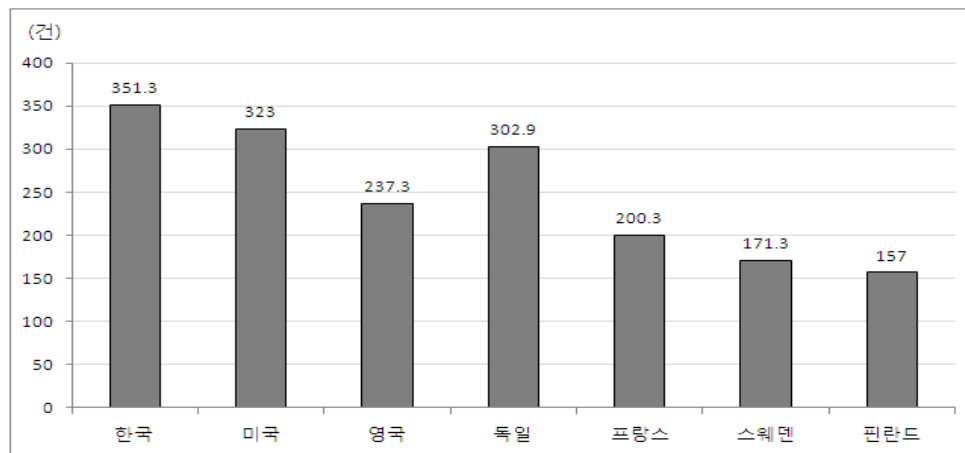
- 미국이 323.0건, 독일이 302.9건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핀란드 157.0건, 스웨덴 171.3건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출생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351.3건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6-12〉 출생아 천명당 제왕절개 건수(2009)

(단위 : 건)							
구분	한국	미국 (2008)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제왕절개 건수	351.3	323.0	237.3	302.9	200.3	171.3	157.0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그림 6-12〕 출생아 천명당 제왕절개 건수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출생아 천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산모의 제왕절개 선호와 일부 의료기관 의사의 권유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자연분만 제고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 공개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제왕절개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의 저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제7장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의 개념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체장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써 빈곤에 대한 치료적이며 최종적인 사회 정책수단(last social safety nets)을 의미함.

□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 간의 관계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정의(제3조))”.
- 공공부조의 경우 사전에 기여(contribution, 보험료)하는 것이 없고, 급여를 받을 때 자산조사(means test)를 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 반면, 사회보험은 사전에 기여(contribution, 보험료)를 하고, 급여를 받을 때 자산조사(means test)를 하지 않는 제도로 공공부조와는 특성이 다름.
-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기여(contribution, 보험료)하는 것이 없고, 급

여를 받을 때 자산조사(means test)도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산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예,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긴급지원제도, 의료급여제도 등이 공공부조제도(기초보장제도)에 속함.

〈표 7-1〉 사회보장제도 분류

구 분	자산조사	비자산조사
기여	-	사회보험
비기여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1. 부양의무자

가. 개념

- 서구 각국은 그들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기초하여 상이한 복지국가의 전통, 정치,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과 국가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
- 부양책임과 관련하여 국가, 시장, 가족 그리고 시민사회에 부여된 역할은 각 국가들마다 다양함.

나. 국가별 부양의무자 유형²⁹⁾

□ 가족 책임 및 의무에 관한 법적 정의,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조직 방식, 가족 구성원 및 국가의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섯 가지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봄.

〈표 7-2〉 각국의 부양의무자 기준

국가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	부양의무자 범위
미국	없음	-
영국	없음	-
독일	있음(민법)	배우자, 존속과 비속
프랑스	있음(민법)	배우자, 존속과 비속 그리고 친척
일본	있음(생활보호법)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아들, 딸, 손자
스웨덴	없음(1978년까지 존재)	-
핀란드	없음	-
아르헨티나	N.A	N.A
그리스	있음	N.A
한국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1) 북구유럽형: 부양에 대한 국가책임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에 대해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있음.

○ 보육 및 노인 돌봄은 가족보다는 국가를 통해 제공받으며, 가족이 부양을 제

29) 여유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에서 인용

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거의 없음.

— 예: 스웨덴의 경우 1978년까지 법률상으로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956년 이래로 부모부양에 대한 비용은 자녀가 아닌 지자체(Municipalities)에서 부담하였음.

○ 가족부양의 책임에 대한 규정 자체는 존재하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권리적 성격이 강한 형태로 나타남.

□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부양책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다소 당연한 것으로 인식함.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은 부양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개인적 권리 및 시민권에 기초하고 있음.

2) 유럽대륙형: 규정된 공동책임

□ 프랑스와 독일은 민법(civil law)에서 친척들에 대한 부양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민법전(civil code)에서는 배우자, 존속과 비속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 상호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독일의 기본법(basic law)에서는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적용하고 있음. 가령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구성원의 경우 한 부모 가정의 자녀, 25세 이내의 미취업·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일본도 이러한 유형에 가까움.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부양책임에 대해 가족의 역할만 강조하지 않음.

○ 따라서 국가가 부양책임의 주된 제공자여야 하며, 지역사회는 부양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함.

3) 영국형: 규정되지 않은 책임의 공유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가족과 국가의 부양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국가의 부양책임은 국가 법령으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의 부양책임(부양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은 비속 쪽으로만(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에게로) 요구됨.
-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부양책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정하나 기본적으로 부양책임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은 청장년층과 중년층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돌봄 제공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국가는 가족들이 책임지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에 대한 부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함.

4) 남유럽형: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

- 남부 유럽에서는 부양에 대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예컨대 그리스의 경우 피부양 부모와 피부양 자녀에 대한 동일 면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가족 상호 간 부양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³⁰⁾.
- 남유럽 국가에서는 가족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하고, 정책은 일반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가족 프라이버시 관념이 있음.
 -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들이 피부양 성인과 부모에게 돌봄(care)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임.
 - 개인적 자율성이 정책의 중심 목표가 아니며, 대신 피부양 관계의 가정이 현금이전과 돌봄을 제공하도록 정책이 편재되어 있음.

30) 조사대상외 남유럽국가들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4촌 이내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스페인의 경우도 손수에 따른 가족 상호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제시된 모든 국가에서 공적 부양(public support)은 현금급여 혹은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가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돌봄 제공자에 관한 일반적 흐름은 국가에서 가족, 자원섹터, 그리고 시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체재(substitute)가 아닌 단지 보완재(supplement)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인식함.
-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나라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의 판단 하에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 부양의무자의 생활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기초보장 급여수준

가. 개념

- 국가 간의 기초보장 급여수준 비교에서 절대적인 급여수준 제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 나라의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음.
 - 여기서는 최저소득보장 수준과 평균생산직근로자임금(APW:Average Production Worker Wage)하고자 함.
 -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이란 공공부조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적 소득패키지를 합한 금액을 말함. 여기에는 공공부조제도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 등이 포함됨.

나. 국가별 급여수준 현황

□ 아래의 표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가정할 때, 평균생산직근로자임금(APW: Average Production Worker Wage) 대비 최저소득보장 수준을 나타낸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는 높으나 비교대상 국가보다는 낮음.

〈표 7-3〉 APW 대비 최저소득보장의 최대현금급여 비율(2002년)

구분	공공부조 3인가구기준 (부부+1자녀)	주거 급여	가족급여(FB) (3-12세 한 자녀)		최대급여액 /APW
			보편적	자산 조사	
핀란드	36-39	16	4	-	59
프랑스	29	20	9	-	58
독일	25-30	17	6	-	53
일본	43-44	공공부조에 포함	-	1	45
스웨덴	34-39	11	5	-	55
영국	32	20	4	-	56
미국	13	-	-	3	16
한국	35-36	공공부조에 포함	-	-	36

자료 : 김미곤 외(2006). 최저생계비 계측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합의

□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급여가 존재하지 않고 최대급여액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 외국보다 ‘높다’ 또는 ‘낮다’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는 시사점이 큼.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거급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가족급여가 존재는 하지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도의 형태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공부조 급여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수준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3.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가. 개념

- 기초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기초보장 제공자와 수급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장치로서 현물 및 현금 급여의 전달 업무를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함.
 - 급여의 선정과 지급 주체, 지급방법에 있어 지속적이며 접근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나. 국가별 전달체계 현황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기초보장제도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핀란드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관(Kela)에서 선정·급여를 담당하고 있음.
- 급여의 경우 정보화 전산화의 발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현금 급여는 계좌이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표 7-4〉 기초보장제도 운영주체 및 현금급여 지급방식

구분	선정 주체	급여 주체	급여 지급방법
미국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좌이체
영국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좌이체
독일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좌이체
프랑스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좌이체
일본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현금 또는 계좌이체
스웨덴	기초자치단체(코뮨)	기초자치단체(코뮨)	계좌이체
핀란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관(Kela)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관(Kela)	계좌이체
한국	시·군·구	시·군·구	계좌이체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 바 있으나 국민들의 체감도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복지행정의 인프라 정비가 요구됨.
- 기초자치단체의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주로 대상자 선정과 급여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궁극적인 제도의 목표인 자활·자립·탈빈곤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관리와 각종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확보된 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업무수행 여건을 합리화하여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행정체계를 마련이 요구됨.

4. 기초보장제도 재정

가. 개념

- 기초보장제도의 재정규모는 재정여력, 빈곤율, 사회보험 및 수당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달라짐.
- 그러므로 단순히 공공부조지출 규모만 가지고 그 국가의 빈곤대책 정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음.

나. 국가별 재정 현황

-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조 지출 규모를 단순 비교해 보면,
 - <표 7-5>에 제시된 주요국의 경우 GDP 대비 평균 약 1.16%를 공공부조에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0.47%(2001년)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이후 공공부조 지출이 급격하여 증가하여 2009년 현재는 약 0.8%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7-5> 주요국의 GDP대비 공공부조 지출의 비중(2003)

구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공공사회지출 대비 공공부조지출 비율	GDP 대비 공공부조지출 비율
벨기에*	27.2	2.5	0.68
캐나다	16.8	11.2	1.88
중국	5.8	5.3	0.31
체코*	20.1	17.5	3.52
덴마크	27.6	3.6	0.99
독일	25.2	4.2	1.06
프랑스	26.3	2.1	0.55
한국*	6.1	7.7	0.47
노르웨이	24.8	2.6	0.64
네덜란드	20.3	5.2	1.06
스웨덴	31.3	2.2	0.69

구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공공사회지출 대비 공공부조지출 비율	GDP 대비 공공부조지출 비율
스위스*	26.4	2.4	0.63
영국	22.1	11.8	2.61
평균	21.54	6.02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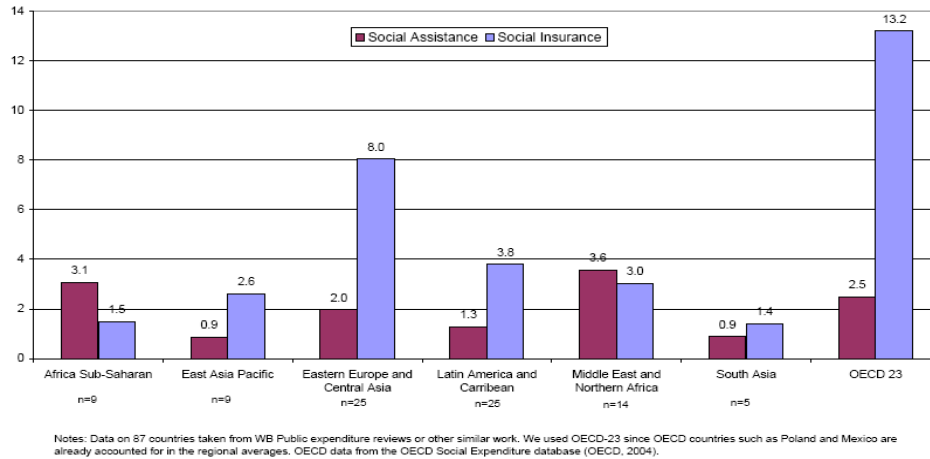
주 : *는 2001년 기준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OECD, Expenditure Survey of China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OECD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이나, GDP 대비 공
공사회지출 및 공공부조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빈곤대책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우리나라 기초보장예산 추이
 - 1996~2012년간의 연평균 기초보장 예산 증가율은 약 22.8%임.
 - － 이는 동 기간 동안의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약 9.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예산 변화는 의료급여예산이 기초보장예산에 포함된 시점인 1996년을
기점으로 전 후 두 구간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요 증
가에 기인함.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1년
의 예산증가율은 49.46%임.
 - 기초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1996년 1.3% → 2012년 3.54%).
 - 기초보장예산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0.17%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1년 0.61%임(중앙정부 예산기준).
 - － 하지만 이는 서구 복지국가 및 개발도상국 수준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임.
동 비율은 기초보장예산이 가장 낮은 지역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낮은
편임.

[그림 7-1] 개발도상국의 GDP 대비 기초보장예산 비율



자료 : Weigand and Grosh(2008), Levels and Patterns of Safety Net Spending in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World Bank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5. 기초보장제도의 정책방향

□ 주요국의 기초보장제도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근로무능력자에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protection 강화)
- 근로능력자에게 근로유인(work incentive)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activation 강화).
 - 근로유인 정책을 유형화해보면, 제재형(sanction type), 관리형(management type)³¹⁾, 인센티브형(incentive type)으로 다시 구분 됨.
 - 제재형(sanction type)은 근로능력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급여 자격을 제한하여 근로를 유인하는 체계로서 일종의 근로강제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³²⁾.

31) 관리형은 제재형과 인센티브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재형과 인센티브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음.

32) 제재형을 다시 분류하면 공공부조 수급자격 제한형, 수급기간 제한형, 현금급여 제한형, 현금급여 수준

- 관리형(management type)은 근로능력 판별을 통해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관리하는 행정 지도형 체계를 의미함. 이러한 형태의 예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제도(자활사업)를 들 수 있음.
- 인센티브형(incentive type)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임. 미국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의 근로소득공제제, 근로장려세제(EITC), 취업장려금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장려금제 등이 이에 해당됨.

□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및 한계

- 주요국의 2원화된 정책목표(protection 및 activation 강화)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이상적인 저소득층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을 담보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의욕(work incentive)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아야 함.
 - 그러나 세 가지 목표들(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근로유인)을 모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느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목표가 희생되어야 함(Ozawa, 1978).
 - 이 결과 정책결정자들은 이른바 ‘복지개혁의 철의 삼각(the iron triangle of welfare reform)’으로 불리는 상충적인 3대 정책목표들 간의 딜레마(dilemma)에 처하게 됨(Blank, et al., 1999).
- 근로유인 및 강제정책을 예로 들어 목표 상충성을 살펴보면, 수급자격 제한이

제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공공부조 수급자격 제한형은 근로능력자에게 공공부조 수급 전 자활사업에 먼저 참여토록하는 형태이고(work first), 수급기간 제한형은 수급자 특히 근로능력자에게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형태임. 예컨대, 전 생애에 걸쳐서 5년 이상, 연속해서는 2년 이상 수급할 수 없는 미국의 TANF가 이에 해당됨. 현금급여 자격 제한형은 근로능력자에게는 이에 현금급여를 하지 않는 형태임. 과거의 생활보호제도가 이에 해당됨. 현금급여 수준 제한형은 현금급여 상한액을 현금급여기준선 이하로 설정하는 형태임. NIT(밀튼 프리드만(안))와 현행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제가 이에 해당됨.

라는 극단적인 근로강제 정책은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그러므로 사회적 적절성을 훼손하게 됨.

—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예산대비 그 효과가 미미함.

결국 낮은 근로유인과 높은 경제적 효율성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성화 및 보장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 제도운용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소득보장과 함께 탈빈곤 유도(activation 강화)
-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최저생활보장 강화(protection 강화)
- 적정수준의 예산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유인을 도모(economic efficiency)

제8장 장애인

1. 장애출현율

가. 개념

-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능, 장애 및 건강의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는 장애를 개인(의 건강상태)과 개인이 처한 맥락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2001)
 - 그러나 현재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나라별, 정책별로 각기 상이함.
 - 본 장에서 장애출현율은 근로가능연령 인구(20-64세)에서 장애인의 비중을 의미함.

나. 국가별 장애출현율 현황과 추이

- OECD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약 6% 수준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7명 중 1명(14.3%)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8-1〉 2000년대 중반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장애출현율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²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OECD-27 ³
출현율 ¹	6.0	11.9	17.6	17.5	13.2	5.8	18.1	20.5	8.3	13.8

주 : 1) 자기보고 방식에 따름 / 2000년대 중반

2) 일본의 경우,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의 장애출현율이 아닌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본의 총인구를 장애인 수(744.2만 명)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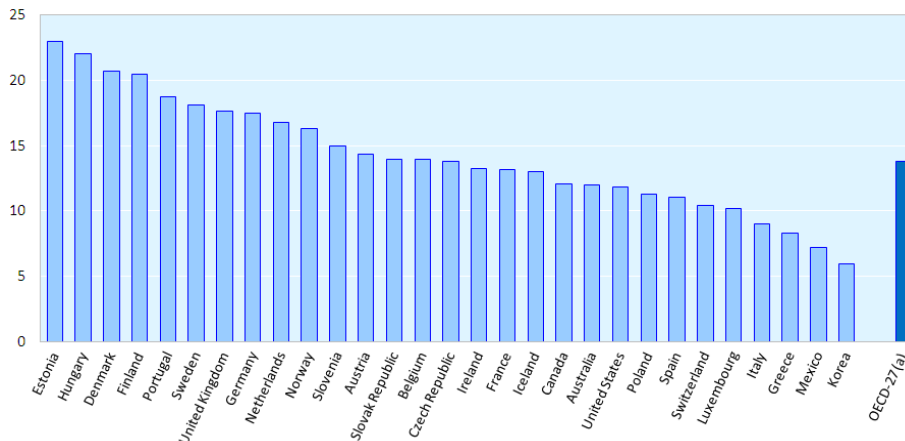
3) OECD 27개국 평균값을 의미함. (Australia, Ireland, Canada, Estonia, Mexico, Portugal, Slovenia, Denmark, Spain, Italy, Belgium, Poland, Austria, Hungary, Iceland, Luxembourg, Czech Republic, Switzerland, Netherlands, Slovak Republic, Norway 를 포함하고, 일본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값임.)

자료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일본은 후생노동성(2006). 「신체장애(자) 실태조사」; 후생노동성(2005). 「지적장애(자) 기초조사」; 후생노동성(2008) 「환자조사」; 후생노동성(2005, 2006) 「사회복지시설 등조사」.

○ 우리나라는 OECD 2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장애출현율을 보이고 있음.
(6%대)

— 이러한 결과는 다른 국가가 인구주택총조사 등 서베이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장애에 초점을 맞춘 등록장애인구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집계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림 8-1〕 2000년대 중반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장애출현율



주 : 자기 평가에 의한 장애출현율임.

자료 : OECD(2010).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 장애인 고용률

가. 개념

- 장애인의 고용률은 근로가능연령(20-64세)인 장애인의 고용률을 의미하며, 상대적 고용률은 비장애인 고용률 대비 장애인의 고용률을 의미함.

나. 국가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과 추이

- 우리나라의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70.3%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75.1%)임.
- 우리나라의 상대적 고용률은 0.64로 OECD 회원국 평균 0.577보다 약간 높음.

〈표 8-2〉 OECD 국가의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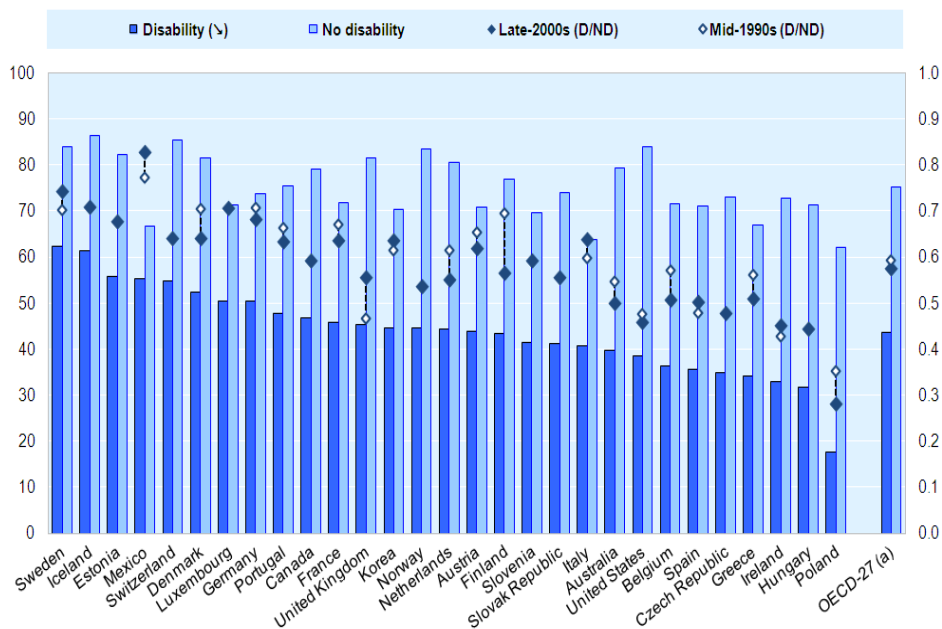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장애			비장애			상대적고용률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한국	43.9	44.7	44.7	71.5	68.8	70.3	0.61	0.65	0.64
미국	40.4	35.1	38.5	84.7	83.6	83.9	0.48	0.42	0.46
영국	38.0	42.1	45.3	81.2	80.9	81.4	0.47	0.52	0.56
독일	52.4	60.4	50.4	74.0	77.2	73.7	0.71	0.78	0.68
프랑스	45.9	49.1	45.8	68.5	70.0	71.8	0.67	0.70	0.64
일본									
스웨덴	54.6	53.6	62.3	77.7	80.1	83.9	0.70	0.67	0.74
핀란드	48.4	54.4	43.5	69.7	77.3	76.8	0.69	0.70	0.57
그리스	35.0	31.7	34.2	62.5	65.0	67.0	0.56	0.49	0.51
OECD-27	-	-	43.6	-	-	75.1	0.594	-	0.577

자료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장애인 고용률 43.9%, 2000년대 44.7%, 2000년대 후반 44.7%로 2000년대 이후 장애인 고용의 증가는 정체되었음.
- 비장애인 고용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2000년대에는 68.8%로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70.3%로 다소 증가함.

[그림 8-2] OECD 국가의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율의 변화추이



주 : 1) OECD-27은 27개국의 고용율과 19개국의 대략 지난 10년간에 걸친 상대적인 고용률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2) 본 조사에서 근로가능연령은 20~64세임.
 자료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62.3%)임. 비장애인의 고용률 또한 83.9%로 높음. 상대적 고용의 경우도 0.74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임.
-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또한 활성화하고 있

음. (OECD, 2010)

-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수준은 하위권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0년 이후 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함.
 -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프로그램과 고용연계프로그램 등의 노동통합지원책을 내실 화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 빈곤율

가. 개념

- 빈곤율은 가구소득이 보정된 가처분 소득 중앙값의 60% 미만인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가구 비율임. (근로연령대 기준)
- 상대빈곤율은 장애 가구 빈곤율을 비장애 가구 빈곤율로 나눈 값임.

$$\text{상대빈곤율} = (\text{장애 가구 빈곤율} / \text{비장애 가구 빈곤율}) * 100$$

나. 국가별 장애인 빈곤율 현황과 추이

-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22%로서 비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14%보다 8% 포인트 높았음.
 - 빈곤율의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차이는 미국, 한국, 영국이 1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고, 핀란드, 독일, 프랑스도 장애 가구 빈곤율이 비장애 가구 빈곤율에 비해서는 높지만 차이가 크지 않은 경향을 보임.

〈표 8-3〉 장애인가구 빈곤율 및 상대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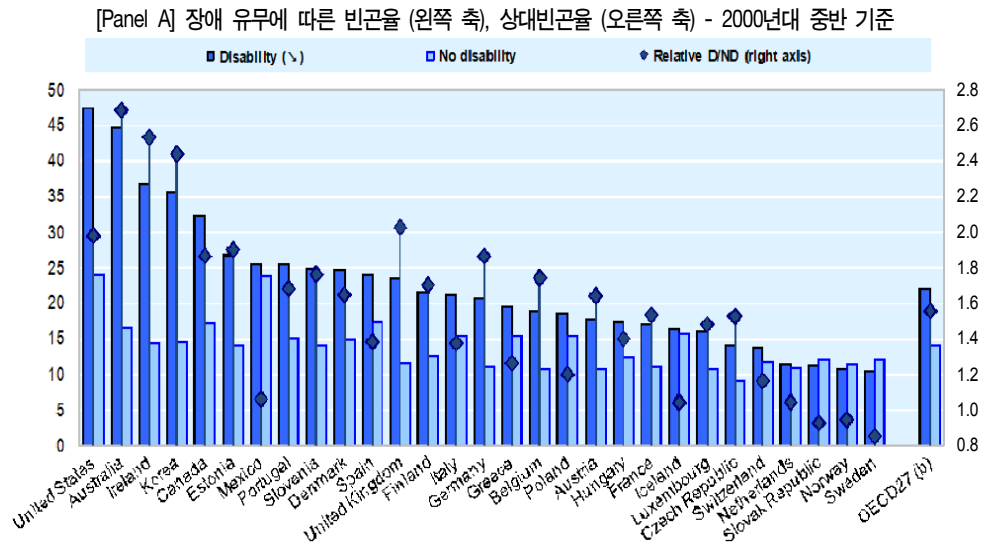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근로연령대 빈곤율 (2000년대 중반)		상대빈곤율 (장애 빈곤율 / 비장애 빈곤율) (2000년대 중반)	상대값 (장애 빈곤율 /근로연령대 빈곤율)	
	장애	비장애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한국	35.6	14.6	2.4	-	2.2
미국	47.6	24.0	2.0	1.8	1.8
영국	23.6	11.6	2.0	-	1.8
독일	20.7	11.1	1.9	1.1	1.6
프랑스	17.1	11.1	1.5	1.3	1.4
일본	-	-	-	-	-
스웨덴	10.4	12.2	0.9	0.8	0.9
핀란드	21.6	12.6	1.7	1.3	1.6
아르헨티나	-	-	-	-	-
그리스	19.5	15.4	1.3	1.7	1.2
OECD 27'	22.1	14.1	1.6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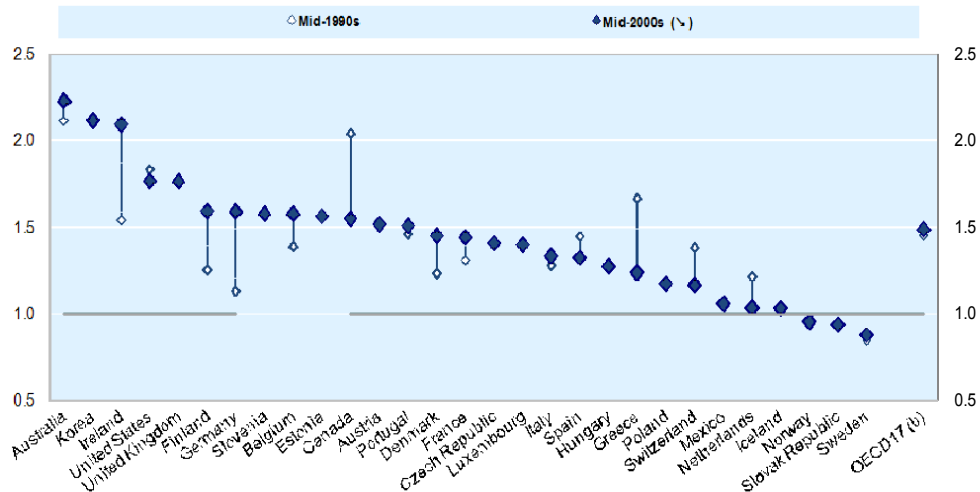
주 : 1) OECD 국가 중, 자료확보가 가능한 국가의 가중치 주지 않은 평균값임. (Estonia와 Slovenia는 포함안됨)
 자료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1.6으로서 이는 장애인 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비장애인가구보다 1.6배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상대빈곤율의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의 변화는, 독일, 핀란드가 비교적 증가분이 커서 장애 가구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미국, 프랑스, 스웨덴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리스의 경우 장애 가구 빈곤율이 근로연령대 빈곤율보다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35%로 OECD 국가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2.4로 미국, 영국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8-3] 장애인 가구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율



[Panel B] 근로연령대 빈곤율 기준의 장애인곤율의 연도별 추이 -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 비교



자료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에 관한 수치는 모두 OECD 국가 내에서 최하위권임.
-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장애인은 가장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결과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우리나라 장애인의 낮은 고용율 및 높은 실업율과 무관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예산 투입이 매우 낮기 때문이기도 함.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장애급여 지출은 0.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열악한 삶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소득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재활과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4. 장애급여 수급율

가. 개념

- 장애인 대상의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산재급여(Pensions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상병급여(Paid sick leave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Paid sick leave (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를 포함함.

나. 국가별 장애급여 수급율 현황과 추이

-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가능연령대(20~64세) 인구 중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6%에 크게 못 미치는 2% 미만으로 최하위권임.

〈표 8-4〉 장애 급여(Disability benefit) 수급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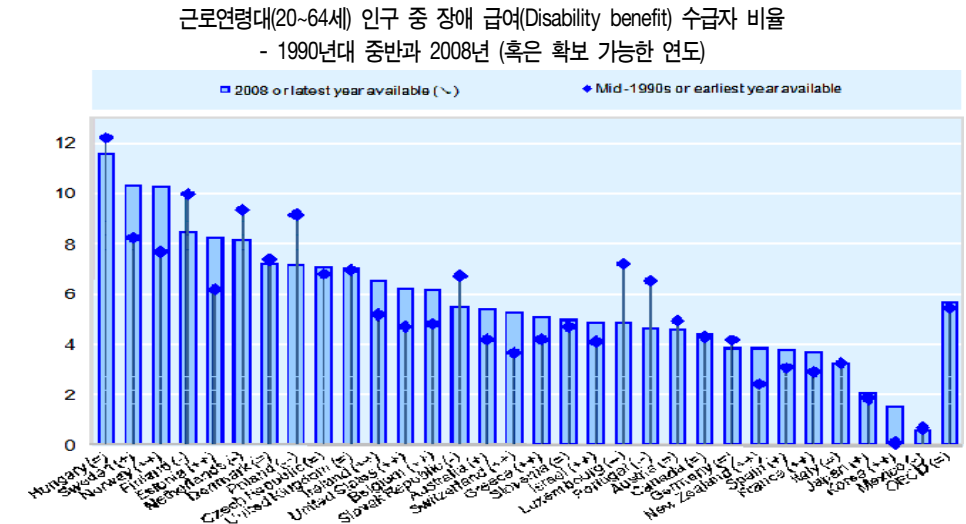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1990년대 중반 (혹은 자료 확보 가능 연도)		2008년 (혹은 자료 확보 가능 연도)	
	수급율	연도	수급율	연도
한국	0.1	1995	1.6	2008
미국	4.7	1995	6.2	2008
영국	7.0	1995	7.0	2007
독일	4.2	1995	3.9	2008
프랑스	2.9	1995	3.7	2007
일본	1.9	2003	2.1	2008
스웨덴	8.2	1995	10.3	2008
핀란드	10.0	1995	8.5	2008
아르헨티나	-	-	-	-
그리스	4.2	2005	5.1	2008
OECD	5.5		5.7	

주 : 1) OECD 28개국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평균값임.
자료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8-4〕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수급율



주 : (E) 기준 데이터를 좌에서 우로 작아지는 순서로 정렬함.
(+)(-) : 매우 증가 / 2% 이상 감소
(+)(-) : 보통 증가 / 0.75%에서 2% 사이 감소
(=) : -0.75%에서 0.75% 사이의 안정적
자료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지난 20년간 장애인 소득보장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급여 수급율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장애급여의 대상 인구 자체가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현재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진입조건으로서 등록 장애의 범주가 전체 신체 기능의 제약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의 급여대상이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또한 외국에 비해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종류가 적은 것도 요인으로 보임. 보호자 수당,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제도 등의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장애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제도의 급여 수준 또한 확대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정책 예산의 확보가 필요해 보임.

5. 재할 및 고용프로그램

가. 개념

- 장애 (고용)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rograms)의 장애인고용대책(Employment Measures for Disabled)을 의미함.

나. 국가별 장애인 재할 및 고용프로그램 현황과 추이

- 직업재활과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중은 대개의 국가가 8% 미만으로, 장애

인정책이 수동적인 급여 지급 정책의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장애인 관련 (고용) 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지출 비중은 스웨덴이 가장 높고, 독일,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독일의 경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중심의 지출로 보임.

〈표 8-5〉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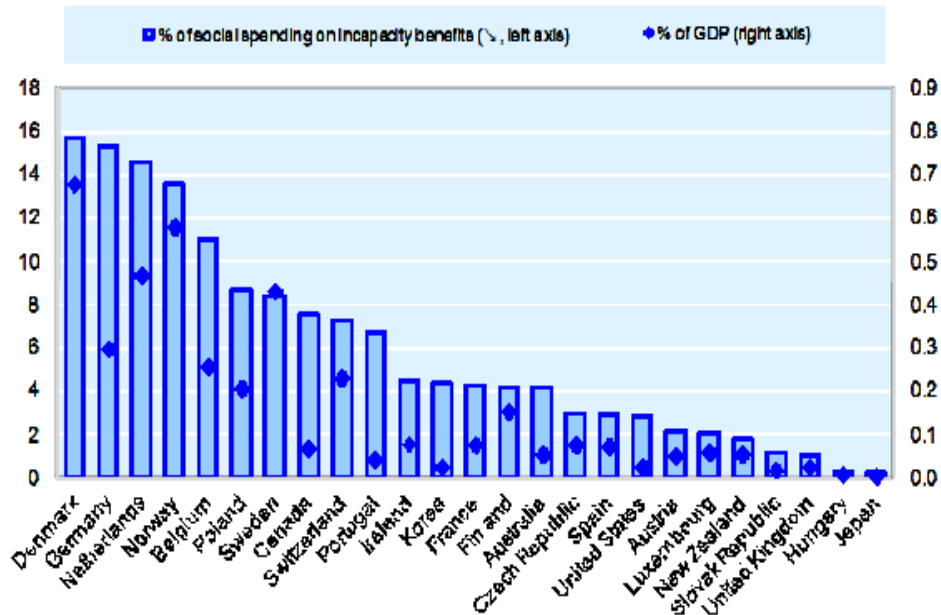
구분	노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중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출 비율 (%) (A)	공적 지출 중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s)에 대한 지출 비율(%)	(A)의 GDP 대비율 (%)
한국	7.1	4.4	0.02
미국	5.8	2.8	0.02
영국	4.9	1.0	0.02
독일	10.1	15.3	0.29
프랑스	3.5	4.3	0.07
일본	0.3	0.2	0.001
스웨덴	24.1	8.4	0.43
핀란드	6.0	4.2	0.15
아르헨티나	-	-	-
그리스	-	-	-

주 : 2007년 혹은 이후 연도 기준

자료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공적 지출(social spending) 중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s) 지출 비율은 독일이 가장 높고, 스웨덴,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5]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장애관련 고용 프로그램 지출 비율



주 : 2007년 혹은 이후 연도 기준

자료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장애인을 활성화하여 사회·경제적 통합을 높이하고자 재활 및 고용프로그램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

○ 국가의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는 재활 및 고용서비스의 확충은 장애인의 빈곤율 및 실업률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경향은 복지국가 환경이 변화하면서 장애와 노동무능력에 대응하는 현금중심의 소극적인 지원이 갖는 재정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음

□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 발전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정해 볼 필요가 있음.

○ 국제적인 장애개념과 비교하여 아직 협소하게 정의되고 있는 장애개념을 확대

하여 근로능력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장애인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확대된 장애인 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는 의료적, 직업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괜찮은 일자리와 연계하는 장애인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제9장 노인

1. 노인의 기준연령

가. 개념

□ 국가별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기준 연령

※ 노인복지정책의 세부 사업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함.

나. 국가별 노인 기준 연령

1) 현황

〈표 9-1〉 국가별 노인 기준 연령

(단위 : 세)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연령	65	65	65	65	65	65	65	65	65	65

자료 :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country-statistical-profiles-key-tables-from-oecd_20752288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전 세계적으로 노인의 연령은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추세임.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노인의 연령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함.
-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 내면에서는 사회적 노인부양 부담 감소를 지향하였음.
- 그러나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에서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변화하는 것은 현 산업구조, 노후 소득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 연령기준을 조절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2.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법

가. 개념

- 노인복지를 수행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법을 의미
-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복지의 소득보장, 건강보장 영역은 연금이나 건강 관련법이 근거가 되는데 본 장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에 관한 법으로 제한함.

나. 국가별 노인복지 관련 법

- 국가별로 법체계는 상이하게 존재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법(연금관련 법), 건강보장을 위한 법, 그 이외의 사회보장관련 법을 통해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을 수행중임.

〈표 9-2〉 국가별 노인복지 관련법

구분	노인복지 관련법
한국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미국	노인복지법
영국	노령연금법, 국민보건서비스법 등
독일	장기요양보험법,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공공건강법전,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 등이 중요한 노인복지관련법
일본	노인복지법, 노인보건법, 개호보험법 등
스웨덴	사회서비스법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은 노인복지법임. 다른 국가에서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세부적 정책에 따라서 정책에 따른 법체계를 갖고 있음.(예: 요양서비스, 사회서비스 법 등)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위한 법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음.

3. 노인복지관련 정부부처

가. 개념

- 노인복지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를 측정하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의 소관업무의 위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됨.

나. 국가별 노인복지관련 정부부처

〈표 9-3〉 노인복지 소관부처

구분	내용
한국	보건복지부
미국	연방정부의 건강 및 인간서비스부(DHHS)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소득보장, 보건의료, 식품증서 등 제반 서비스 프로그램 집행, DHHS 산하의 노인청(AoA)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영국	소득유지, 보건, 사회서비스 체계가 분리 실행,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업무부서는 노동연금부(DWP), 보건의 보건부(DH)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노인복지 전반), 보건사회보장부(건강, 장기요양)
프랑스	소득보장은 중앙 연금중앙공단 담당, 사회부조 및 사회활동은 중앙정부의 사회활동국(DGAS)
일본	후생노동성
스웨덴	보건사회부(보건 및 복지서비스업무 담당 보건복지청, 소득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보장청), 노인보호 및 공중보건부, 사회보장부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 부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음. 별도의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조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건강 및 인간서비스부(DHHS) 산하에 노인청을 두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이 특징적임.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상적 접근을 위한 노인 별도의 기구를 두기보다는 가족정책의 관점, 도는 건강영역, 사회보장의 영역내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실시함.
- 따라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내의 노인복지서비스 업무는 부처내 연금, 건강영역의 협업을 통해 실시하는 것은 적합함.

4. 노인인구 비율

가. 개념

-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

나. 국가별 노인인구 비율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

〈표 9-4〉 국가별 노인인구 비율(2010)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노인인구 비율	11.0	13.1	16	20.4	16.7	23.1	18.3	17.3	10.6	18.9

자료 : OECD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ISBN 978-92-64-11150-9 - © OECD 2011

- 국가별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23.1%, 독일 20.4%로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영국의 순으로 고령화율이 높음.

2) 추이

〈표 9-5〉 국가별 노인인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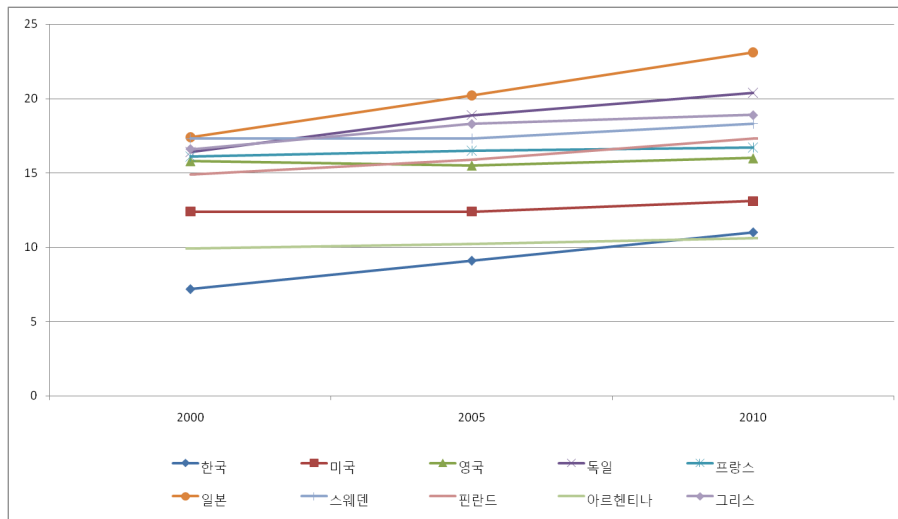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2000	7.2	12.4	15.8	16.4	16.1	17.4	17.3	14.9	9.9	16.6
2005	9.1	12.4	15.5	18.9	16.5	20.2	17.3	15.9	10.2	18.3
2010	11.0	13.1	16	20.4	16.7	23.1	18.3	17.3	10.6	18.9

자료 : OECD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ISBN 978-92-64-11150-9 - © OECD 2011

□ 지난 10년간의 고령화율 변화의 속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함께 일본이 가장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림 9-1] 고령화 추이(2000-2010년)



자료 : OECD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ISBN 978-92-64-11150-9 - © OECD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1.0%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의 고령화의 속도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의 고령화율의 변화가 많이 나타난 곳은 일본, 독일, 한국이며,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율의 증가속도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변화는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보다는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고령화율의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5. 노인 경제활동 비율

가. 개념

□ 65세 이상 노인 중 주 1시간 이상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비율

나. 국가별 노인 경제활동 현황과 추이

□ 고령화를 증가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인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짐. 그의 한 방안으로 가능한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1) 최근 현황

〈표 9-6〉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현황(2010)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28.8	17.4	8.6	4.0	1.6	21.8	12.1	7.8	3.45	4.0

자료 : <http://stats.oecd.org/>

□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한국, 일본의 경우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를 넘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28.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에 반해 노후 소득보장이 안정화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국가별 노후소득보장체제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음.

2) 추이

□ 과거 10년간 국가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추이를 살펴보면, 큰 변화는 없으나 약간의 상승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음.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의 상승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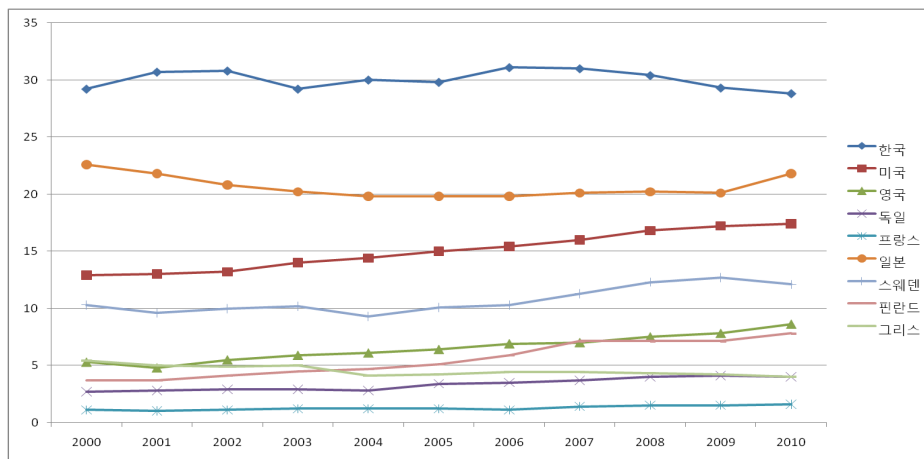
〈표 9-7〉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2000-2010년)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9.2	30.7	30.8	29.2	30.0	29.8	31.1	31.0	30.4	29.3	28.8
미국	12.9	13.0	13.2	14.0	14.4	15.0	15.4	16.0	16.8	17.2	17.4
영국	5.3	4.8	5.5	5.9	6.1	6.4	6.9	7.0	7.5	7.8	8.6
독일	2.7	2.8	2.9	2.9	2.8	3.4	3.5	3.7	4.0	4.1	4.0
프랑스	1.1	1.0	1.1	1.2	1.2	1.2	1.1	1.4	1.5	1.5	1.6
일본	22.6	21.8	20.8	20.2	19.8	19.8	19.8	20.1	20.2	20.1	21.8
스웨덴	10.3	9.6	10.0	10.2	9.3	10.1	10.3	11.3	12.3	12.7	12.1
핀란드	3.7	3.7	4.1	4.5	4.7	5.1	5.9	7.1	7.1	7.1	7.8
그리스	5.4	5.0	4.9	5.0	4.1	4.2	4.4	4.4	4.3	4.2	4.0

자료 : <http://stats.oecd.org/>

〔그림 9-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2000-2010년)



자료 : <http://stats.oecd.org/>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국가별 노인 경제활동참여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약간씩 상승함을 볼 수 있음. 즉,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향상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노후소득보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경제활동참여율은 감소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6. 노인 빈곤율

가. 개념

- 빈곤의 조작적 정의 : 중위소득 50% 미만

나. 국가별 노인 빈곤율(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현황과 추이

- 노인 중 중위소득 50%미만의 비율은 한국이 45.1%로 가장 높으며 미국, 일본, 그 리스가 20%대로 나타남.
-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노인의 빈곤율은 높으며, 이는 또한 높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로 연결되고 있음.

1) 최근 현황

〈표 9-8〉 노인 빈곤율 현황(2008년)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노인빈곤율	45.1	22.4	10.3	8.4	8.8	22.0	6.2	12.7	11.0	22.7

자료 : OECD Income-Distribution Database; see OECD(2008), Growing Unequal, table 5.3.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사회보장제도가 일찍이 마련된 외국의 경우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구축되어있음.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노후 빈곤율이 10% 안팎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1998년 도입되어, 완전 노령연금 수급 개시가 2008년 시작됨으로서 현 노인층에서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낮음. 이로 인해 노인의 빈곤율이 타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남.
 - 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빈곤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낮은 급여수준과 연금 사각지대 등은 노후 빈곤율 감소의 걸림돌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노인의 빈곤율 감소를 위해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의 다양한 소득원 확보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7. 노인부양비율

가. 개념

- 노인부양비는 사회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규모를 생산가능 인구의 규모를 고려한 수치임.

○ 노인부양비 = 노인(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 사회 총 부양비 = 노인부양비 + 아동부양비

나. 국가별 노인부양비율과 추이

1) 최근 현황

〈표 9-9〉 노인부양비율 현황(2008)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14.3	19.0	24.3	30.4	25.5	34.3	27.1	25.2	16.0	27.9

자료 : OECD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ISBN 978-92-64-11150-9 - © OECD 2011

2) 추이

〈표 9-10〉 노인부양비율 추이(1990-2010년)

(단위 : %)

국 가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7.2	8.3	10.2	13.0	15.4
미국	19.0	19.2	18.7	18.4	19.5
영국	24.1	24.5	24.3	24.2	25.1
독일	21.5	22.6	24.0	28.6	30.8
프랑스	21.3	23.2	24.7	25.2	25.9
일본	17.1	20.7	25.2	29.9	35.5
스웨덴	27.7	27.4	26.7	26.4	28.0
핀란드	19.9	21.3	22.2	23.9	26.0
아르헨티나	14.8	15.4	15.8	16.0	16.4
그리스	20.4	22.5	24.8	27.2	27.7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인 중간 연령층이 감소하는 추세로 점차 노인부양비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그러나 급격한 이미 고령화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노인부양비는 높으나 안정적 추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는 최근 20년간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노인부양비의 증가속도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최근 연령에 따른 노인부양비의 개념 탈피의 필요성이 증가됨. 즉, 65세 이상 노인 중 계속적 경제활동 인구, 자산을 활용한 노후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인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 － 따라서 향후에는 노인층의 건강과 경제활동 촉진 등을 통하여 실 노인부양비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8. 노인 경제활동 지원 제도

가. 개념

-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부담을 감소 및 노인층의 사회참여 촉진의 일환으로 가능한 오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경쟁시장체계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욕구는 충족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나. 국가별 제도 현황

〈표 9-11〉 국가별 노인 경제활동 지원 제도

구분	내 용
한국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고령자고용환경개선훈자지원사업 장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장년연장장려금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독일	은퇴연령 점진적 향상 조기퇴직제도 축소 퇴직시기에 가까워진 노인에 대한 단시간근무자 제도 혜택 축소 연령에 따른 노인고용자 우선 해고 금지 규정 노인일자리 노동조건 개선 등
일본	고령자 고용안정법 중소기업 장년연장관련 장려금 고령자 직역확대 관련 장려금 고연령자 고용확보 충실 장려금
핀란드	근로하는 63-68세의 노동자에게는 연금의 특별 보너스 지급 의무퇴직연령(65세)을 폐지(효과: 63-68세 퇴직 증가) 63세 이전 조기퇴직 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재

자료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독일과 핀란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원정책은 연금개혁과 맥락을 동일 맥락에서 이루어짐. 즉, 고령화로 인한 연금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함으로써, 고령자가 연금을 수급할 시기까지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방식을 활용.
- 또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방식, 퇴

직연령 상향조정 등의 방식을 활용

- 이에 반해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함.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의 미성숙하고, 시장에서의 조기퇴직 만연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재의 일시적인 장려금보다는 고령자가 최소 연금수급개시연령까지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 제도가 요구되어짐.

9. 평균 은퇴 연령

가. 개념

- 실제로 직업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으로 법적 은퇴연령과는 다름.

나. 국가별 평균은퇴연령

1) 최근 현황

〈표 9-12〉 국가별 평균은퇴연령(2009)

(단위 : 세)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그리스
평균은퇴 연령	70.3	65.5	64.3	61.8	59.1	69.7	66.0	61.8	-	61.9

자료 : OECD estimates based on the results of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and, for earlier years in some countries, national censuses.

2) 추이

〈표 9-13〉 국가별 성별 평균은퇴연령 추이

(단위 : 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남성	67.1	67.5	68.2	68.6	69.9	70.2	70.9	71.3	70.5	70.3
	여성	65.9	66.7	66.4	65.6	66.9	67.7	67.6	67.9	70.0	69.8
미국	남성	64.7	64.6	65.0	64.1	64.2	64.6	64.8	64.6	65.4	65.5
	여성	63.5	63.3	62.9	63.2	63.1	63.1	63.8	63.9	64.2	64.8
영국	남성	62.4	62.7	63.1	63.4	63.0	63.3	63.4	63.3	63.9	64.3
	여성	60.9	60.8	61.2	61.6	61.5	61.4	61.5	61.9	61.9	62.1
독일	남성	61.0	61.1	61.0	61.1	61.3	61.7	61.8	62.0	61.1	61.8
	여성	60.2	60.2	60.2	60.3	60.6	60.7	60.9	60.8	60.3	60.5
프랑스	남성	58.8	58.7	58.5	58.7	58.7	58.6	58.4	58.7	59.1	59.1
	여성	58.9	58.6	58.5	59.0	58.8	59.4	59.2	59.4	59.5	59.7
일본	남성	70.1	69.8	69.7	69.7	69.5	69.3	69.3	69.5	69.6	69.7
	여성	66.2	66.0	65.6	65.9	66.2	66.2	66.3	66.5	66.9	67.3
스웨덴	남성	63.7	63.5	63.6	64.0	63.6	65.1	64.7	65.5	65.7	66.0
	여성	62.3	62.0	61.9	61.8	61.6	62.4	62.7	62.9	63.1	63.6
핀란드	남성	60.2	60.2	60.8	59.8	59.9	60.5	60.4	60.1	61.4	61.8
	여성	59.9	60.0	59.9	60.1	60.3	60.1	60.3	61.0	61.2	61.4
그리스	남성	63.2	63.1	62.5	63.1	62.6	62.4	62.1	62.5	62.1	61.9
	여성	62.7	61.2	61.0	61.3	61.3	61.2	61.6	61.2	60.4	59.6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한국, 일본, 스웨덴은 평균은퇴시점이 70세 전후반으로 타 국가에 비해서 늦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의 국가는 대략 60세를 전후하여 평균은퇴시점이 나타남.
- 우리나라가 타 국가에 비해 평균은퇴시점이 늦게 나타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미비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경향을 나타냄.
- 타 국가의 경우 대부분 은퇴연령과 연금개시연령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도 향후 연금이 보편화면서 은퇴연령은 연금개시연령과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지만, 현재는 실제 연금개시연령에 비해 일반 기업의 퇴직연령이 낮게 나타남. 이로 인해 중장년기의 불안한 경제상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10. 장기요양 자원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 규모

가. 개념

-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구조 및 가족구성의 변화로 인해 노인부양에 대하여 개인과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사회와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에서 나아가 사회적·국가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각 국에서는 사회보험 또는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과 관련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장기요양을 위한 정부예산 규모 현황

- 장기요양과 관련한 대응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한국, 독일, 일본은 사회보험을 통한 장기요양보장체계를 구축한 국가임.
 - 영국, 미국, 그리스는 자산심사와 보편적 급여 방식.
 - 스웨덴과 핀란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의 장기요양보장체계를 구축한 대표적 국가임.

〈표 9-14〉 장기요양을 위한 정부예산 규모

(단위 : GDP 대비 %)

구분	재정(GDP 대비 비중)	내용
한국	0.3	- 노인장기요양보험
미국	1.0	- 메디케이드(자산심사안전망) - 메디케어(보편적)
영국	0.8	- 자산심사 - 보편적 급여
독일	0.9	- 장기요양보험
프랑스	1.4	- 소득관련 급여
일본	1.4	- 개호보험
스웨덴	3.5	- 보편 및 세금 기반
핀란드	1.8	- 보편적, 사회서비스(세금 기반)
그리스	1.4	- 보편적 급여와 자산심사 급여 혼합

자료 : 2011 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1)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한국의 제외한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고령화율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 장기요양의 예산규모가 GDP 대비 1% 전후로 나타남. 특히 스웨덴의 경우 3.5%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한국의 수준은 0.3%로 매우 낮은 상태임.
- 향후 급속히 증가할 고령화율을 고려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함께 양육구 필요도에 다른 추가적 서비스가 요구되어질 것으로 판단됨.

제10장 아동 · 여성

1. 아동빈곤율

가. 개념

- 아동빈곤율은 중위소득이 50%미만인 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비율을 뜻함. 빈곤이 세습화되고 빈곤의 덫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동빈곤율은 향후 빈곤율을 예측하는 지표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아동빈곤이 가족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 가족유형별 아동빈곤율을 구분하여 생산하는 경향이 있음. 즉 한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빈곤율과 양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빈곤율의 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차이를 통해 가족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나. 국가별 현황 및 추이

- 2008년 기준 전체 아동빈곤율은 미국, 일본, 그리스, 영국 순으로 나타나지만, 양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아동빈곤율은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한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한부모가 근로를 하더라도 아동빈곤율이 상당히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한부모가 근로를 할 경우 아동빈곤율이 낮아지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

- 이는 영국에서 가족유형별 빈곤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족이 근로를 할 경우 많은 사회적 급여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아동빈곤율은 8.6%로 다소 높은 수준이나 한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한부모가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빈곤율이 19.7%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한부모가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23.1%)와 비교했을 때 아동빈곤율의 차이는 크지 않음.

〈표 10-1〉 가족유형별 아동빈곤율(200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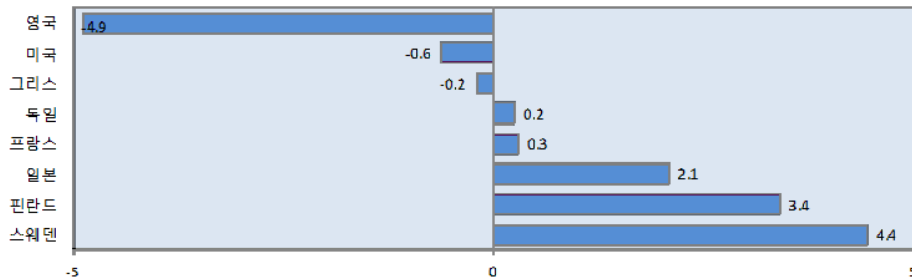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근로안함	근로함	둘다 근로안함	한명만 근로함	두명이상 근로함
미국	18.7	91.5	35.8	84.1	30.6	6.6
영국	11.2	47.8	6.7	31.5	9.7	1.4
독일	7.6	46.2	11.6	23.2	3.7	0.6
프랑스	7.4	45.7	16.5	21.8	10.5	2.3
일본	12.2	52.5	54.6	37.8	11.0	9.5
스웨덴	6.0	54.5	11.0	46.0	18.5	1.4
핀란드	4.7	49.0	8.6	49.2	13.4	1.4
그리스	11.6	81.5	12.3	37.3	21.8	5.3
한국	8.6	23.1	19.7	37.5	9.5	5.3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국의 아동빈곤율의 변화는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영국($\Delta 4.9\%$)과 미국($\Delta 0.6\%$), 그리스($\Delta 0.2\%$)의 아동빈곤율은 상당히 완화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아동빈곤율은 여전히 상당히 높음.
 - 반면에 독일, 프랑스, 일본, 핀란드, 스웨덴의 아동빈곤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국가에서 아동빈곤율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10-1] 아동빈곤율의 변화 추이(1990년대 중반-2008)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정책은 주로 가족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아동빈곤율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소득보장 정책이 아동빈곤율 퇴치와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높은 아동빈곤율을 타파하고 인적자원으로서 아동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임. 대표적인 예로 한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한부모가 16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다양한 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건강한 미래세대의 자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이 아동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추고 행해져야 함.

2. 아동 복지 시설

가. 개념

- 국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등이 있음 (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 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 (아동복지법 제2조의6)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2012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법정배치 인원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추진

나. 국가별 아동 복지 시설 현황과 특징

〈표 10-2〉 국가별 아동 복지 시설 현황

구분	시설 수	보호 아동 수
한국 (2011년)	<시설현황> ●양육시설 238곳 ●직업훈련시설 2곳 ●보호치료시설 11곳 ●자립지원시설 12곳 ●일시보호시설 14곳 ●종합시설 3곳 ●아동상담소 7곳 ●전용시설 3곳 ●개인양육시설 25곳	●양육시설 15,787명 ●직업훈련시설 69명 ●보호치료시설 495명 ●자립지원시설 235명 ●일시보호시설 402명 ●종합시설 131명 ●개인양육시설 340명

구분	시설 수	보호 아동 수
	<인력현황> ●총인력수: 12,011명 ³³⁾ ●인력 1명당 정부 인건비 보조금 - 정부보조 97.06% ³⁴⁾ - 법인보조 2.15% - 후원금 0.63% - 이용료 0.01% - 기타 0.28%	
영국	●자자체 439 개소 ●민간 혹은 자원봉사기관 1,371개소	●자자체 2,771명 ●민간 혹은 자원봉사기관 5,662명
일본	●조산시설: 494개소 ●유아원 119개소 ●모자생활지원시설: 285개소 ●아동후생시설: 8,470개소 ●아동양호시설: 558개소 ●아동자립지원시설: 56개소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27개소	●유아원: 3,000명 ●모자생활지원시설: 4,100세대 ●아동양호시설: 29,800명 ●아동자립지원시설: 1,900명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890명
스웨덴		●보호 시설 아동수: 10,003명 ●아동 보호 혹은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수: 78,500명 ●복지 혹은 사회기관 아동수(17,064명) - 가족보호시설: 5,675명 - 전문가족보호시설: 2,927명 - 기관에서의 보호: 1,970명 - 기타: 1970명
그리스	●사회보호기관 18개소 ●아동보호센터 5개소 ●만성질병센터 3개소 ●취약계층 재활센터/장애아동 보호기관 1개소	●사회보호기관 650명 ●아동보호센터 391명 ●만성질병센터 141명 ●취약계층 재활센터/장애아동 보호기관 113명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국내 아동 보호 시설은 주로 저소득층, 유기 아동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있는 아동, 발달 및 행동

33) 아동이용시설로서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포함

34) 2009년 아동복지시설 130개소 현황으로 보고서에서 액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비율만 나와 있음 (변용찬 외 2010).

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 등에 대한 보호 관찰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해 집안에서 돌볼 수 없는 아동, 성폭력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아동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저소득 취약 계층 아동 중심의 보호 시설에서 확장하여 전반적인 아동 보호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여성과 남성의 65세 연령의 기대여명

가. 개요

□ 65세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년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잔여평균수명을 예측하고 있는 지표임.

○ 여성의 결혼, 출산, 이혼 등 가족관련 사건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 수준과 관련이 있음. 최근의 결혼과 출산연령의 지체, 이혼율의 증가, 가구원 수의 감소 등 가족과 관련된 주요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교육수준의 향상등과 서로 연계되어 있음.

○ 기대여명의 증가는 노년기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됨.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과 소득 보장 등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나. 국가별 현황과 추이

1) 현황

- 2009년 현재 주요 국가의 65세 연령의 기대 여명을 성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 일본 여성이 23.6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도 18.6년으로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국가임.
 - 한국은 여성 20.5년 남성 16.3년으로 남성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10-3〉 65세 연령의 기대여명(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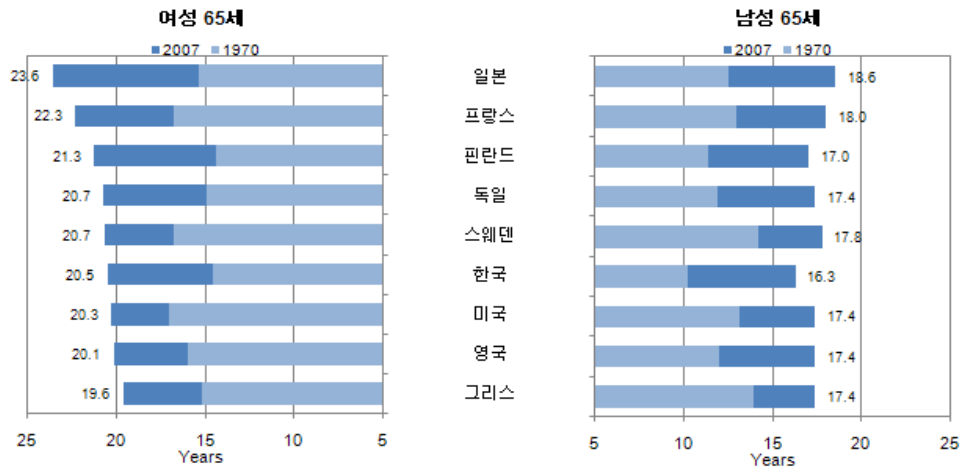
(단위 : 년)										
구분	일본	프랑스	핀란드	독일	스웨덴	한국	영국	미국	그리스	아르헨티나
여성65세	23.6	22.3	21.3	20.7	20.7	20.5	20.3	20.1	19.6	23.5
남성65세	18.6	18.0	17.0	17.4	17.8	16.3	17.4	17.4	17.4	18.5
성별차이 (여성-남성)	5.03	4.30	4.21	3.29	2.90	4.20	2.90	2.76	2.20	5.00

주 : 아르헨티나는 60세 연령의 기대 여명임.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

2) 추이

- 국가별 65세 연령의 기대여명은 1970년 대비 2007년 모든 나라에서 증가하였음.
 - 특히 일본은 여성 65세 연령의 기대여명이 1970년 15.3에서 2007년 23.6으로 매우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음.
 -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 여성과 남성의 65세 기대여명은 각각 14.6, 10.2로 조사되었으나 2007년 여성 20.5, 남성 16.3으로 높은 증가를 보였음.

[그림 10-2] 65세 연령의 기대여명(1970/ 2007)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한국은 기대여명의 증가가 높은 국가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성별 노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여성노인은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살지만, 80대 전후로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여성노인은 남성에 비해 연금가입률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처할 확률이 높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4. 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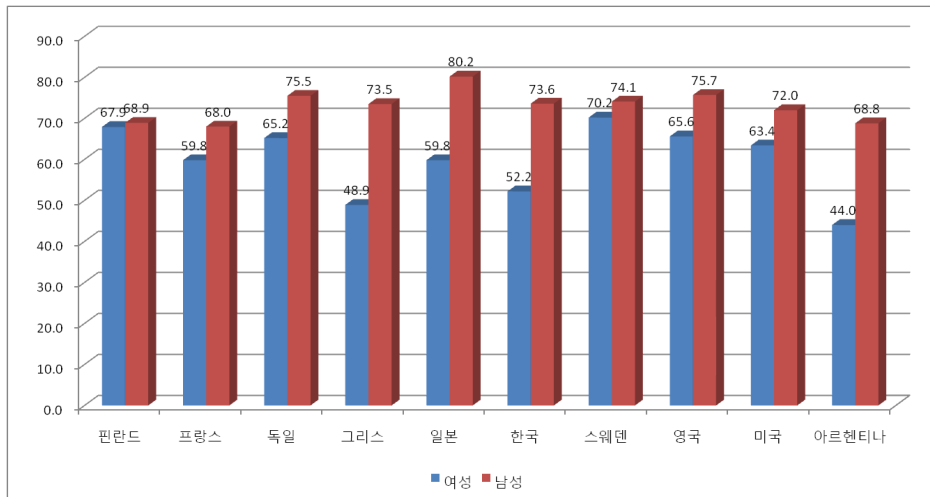
가. 개념

- 여성의 고용률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활성화의 주요한 지표임.
 - 여성의 취업은 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자아 달성 등에 가장 중요함.
 -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7년 긴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 소득 보장 등은 사회복지 비용의 감소를 위해 필요함.
- 최근 OECD국가 등은 실업자가 포함되는 취업률보다 고용률을 주로 사용함.
 - 고용률 = 취업자/해당인구*100

나. 국가별 현황과 추이

- 주요 각국의 남녀 고용률을 비교하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남녀차이가 각각 1.0%포인트, 3.9%포인트로 가장 적은 국가임.
 - 반면 그리스, 일본, 한국은 남녀차이가 20%포인트 이상 되는 국가로 나타남.
-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52.2%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반면 스웨덴은 70.2%로 가장 높은 국가임. 두 국가간은 18%포인트의 차이를 보임.
 -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일본이 80.2%로 가장 높고, 프랑스가 68.0%로 가장 낮으며 한국은 73.6%로 중간 수준임.

[그림 10-3] 주요 각국의 남녀 고용률(2009)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 남녀 고용률의 차이를 보면 그리스가 29.4%포인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일본과 한국이 27.3%, 27.5%로 그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임.
- 학력별 남녀의 고용률 차이를 보면 OECD평균은 초등이 22.8%로 가장 높고 학력수준이 올라갈수록 남녀차이가 줄어들어 중등수준과 고등수준은 각각 17.2%와 10%의 차이를 보임.
- 남녀차이가 가장 큰 그리스와 일본, 한국의 상황을 보면
 - 그리스는 초졸의 남녀차이가 40.7%로 가장 크고, 학력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듦.
 - 일본은 모든 학력수준에서 27% 내외의 비슷한 수준임.
 - 한국은 초졸보다 중등과 고등에서의 남녀차이가 더욱 커지는 유일한 국가임.

〈표 10-4〉 주요 각국의 학력별 고용률 남녀차(2009)

(단위: %)

구분	전체		초졸		중/고/전문대졸		대졸이상	
	고용률	남녀차	고용률	남녀차	고용률	남녀차	고용률	남녀차
핀란드	74.4	-5	53.7	-9.8	73.5	-6.9	83.3	-5.5
프랑스	67.8	-10.3	50.4	-15.4	71	-9.4	82	-6.1
독일	69.6	-12.1	48.2	-18.3	71.2	-9.9	82.7	-6.8
그리스	54.5	-29.4	39.3	-40.7	55.4	-30.1	78.1	-9.6
일본	62.2	-27.3	53.5	-27.7	59.8	-27.5	65.9	-26.9
한국	57.8	-27.5	58.4	-19.8	55.5	-29.3	60.8	-28.4
스웨덴	79.2	-6.2	55.9	-18.1	79.2	-7.5	88.4	-1.8
영국	69.3	-13.8	51.1	-19.5	72.7	-12.4	82.4	-7.3
OECD평균	64.7	-17.9	47.8	-22.8	67.1	-17.2	79.6	-10

주 : 24-65세 인구 기준

자료 : ELFS and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0)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의 남녀차이가 가장 큰 국가중의 하나임.

○ 한국의 노동정책은 여성의 참여를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졸이상의 여성 참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대졸의 남녀차이가 OECD평균이 10%임에 비해 한국은 28.4%로 가장 대책이 필요한 지점임.

5. 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가. 개념

□ 현재 국제기구에서 유자녀 여성 고용률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모의 고용률은 ‘1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어머니의 고용률’을 통해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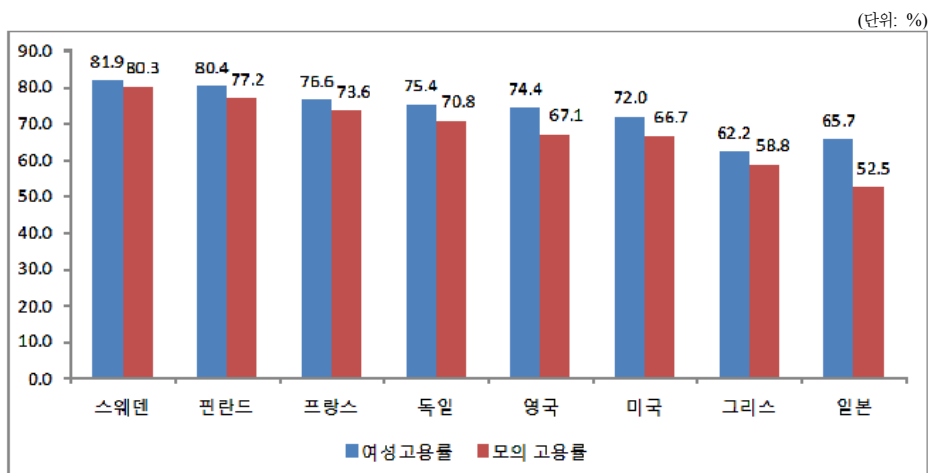
- 대부분의 국가에서 15세(혹은 16세)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으로 이 연령까지의 아동에게는 가족 내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따라서 모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보육을 포함한 일가족양립정책이 성공적으로 설계된 국가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모의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기반이 덜 발달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나. 국가별 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현황

□ 2009년 기준 국가별 모의 고용률은 스웨덴(80.3%), 핀란드(77.2%), 프랑스(73.6%) 순으로 나타남.

-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성고용률과 모의 고용률의 차이가 크지 않음. 이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고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 영국과 일본은 여성고용률에 비해 모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미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용이하지만 자녀의 출산 이후 자녀의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뜻함.

[그림 10-4] 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2009)



주 : 일본과 미국은 2005년 자료이며, 일본과 미국의 자녀 연령 기준은 16세, 핀란드와 스웨덴의 자녀 연령 기준은 25세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배우자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50.4%(2008)로 나타남.
 -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만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36.5%,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56.3%로 각각 나타남(한국노동연구원, 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
 -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특히 30대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은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책대안과 연계될 것임.

6. 아동 돌봄 소요시간

가. 개념

- 본 지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소요하는 시간의 배분을 살펴보는 지표임.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인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인 부모들의 시간 배분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됨.
 -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를 측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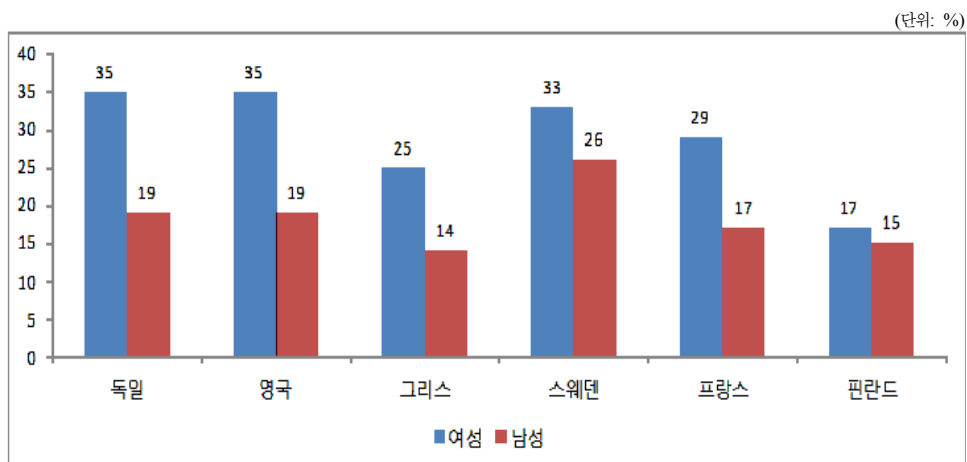
나. 국가별 아동 돌봄 소요시간 현황

-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남성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주당 30시간 이상을 아동을 돌보는데 이용하고 있음. 특히 독일과 영

국에서 이러한 높은 수치는 전업주부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음.

- 일가족양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여성의 자녀 양육에 소요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예외적으로 스웨덴에서 남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5] 아동 돌봄에 소요하는 시간(2007)



주 : 주당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가족 단위에서 실제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음.
- 우리나라는 성별 통상 근무시간이 54시간 이상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음. 이에 반해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주당 40-44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5일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부모들이 나머지 시간에 가족과 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부모들

은 주 5일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경향이 있음.

- 주당 근무시간의 조정과 일가족양립을 위한 기업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시급함.

7. 남녀임금격차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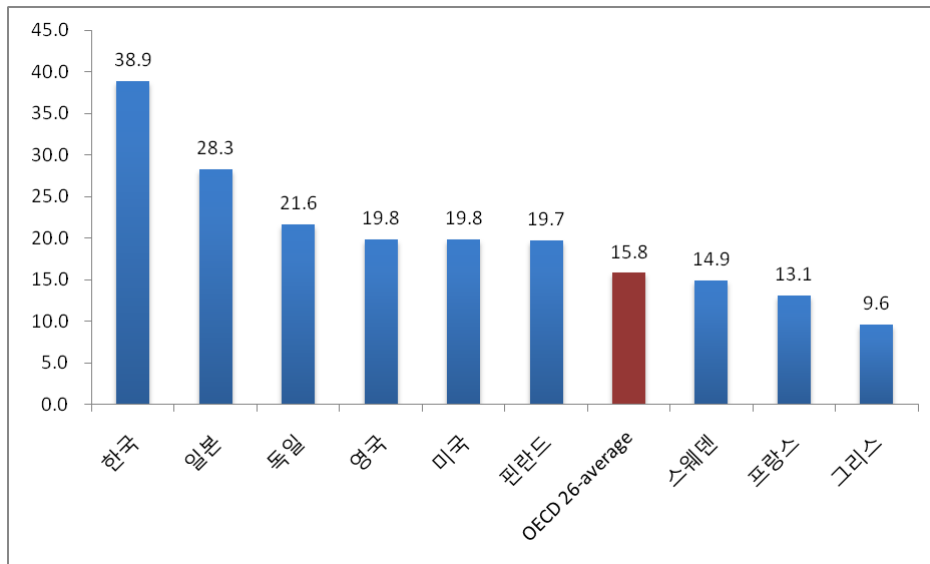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임
 -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남성과 비교하여 그 격차를 봄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파악할 수 있음.

나. 국가별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2009)

- 한국의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중간값의 남녀 차이는 38.9%로 여성 노동에 대해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28.3%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OECD평균은 15.8%로 한국의 1/2도 안되는 수치임.
 - － 고용률의 차이가 적은 스웨덴은 임금의 차이도 14.9%로 적게 나타남.

[그림 10-6] 주요 국가의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중간값 남녀 차이(2009)



주 :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평상시 30시간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함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2) 추이

□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한국은 1985년의 51.0%에서 상당히 감소하였음.

- 그러나 1980년에 이미 프랑스와 스웨덴은 남녀차이가 20% 미만으로 감소한 상태이며, 이들 국가도 지속적으로 남녀차이를 줄여 프랑스의 경우 2008년에 12.0%의 차이를 보임.
- 남녀차이가 큰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 순서임. 반면 적은 국가는 프랑스, 스웨덴 등임.

〈표 10-5〉 주요 국가의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남녀차이 추세(1980~2008)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핀란드	26.6		22.9	22.4	20.4	19.5	21.2
프랑스	19.7	17.0	15.3	10.3	10.8	12.1	12.0
독일		27.0	27.2	23.5	23.0	24.8	25.4
일본	41.7	41.7	40.6	37.1	33.9	32.8	30.7
한국		51.9		43.1	40.7	38.3	38.8
스웨덴	14.5	18.4	19.6	19.0	15.5	14.9	15.4
영국	35.3	33.6	31.2	26.6	24.0	20.4	21.0
미국	36.6	33.0	28.5	24.6	24.5	19.8	20.1

주 :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평상시 30시간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함.
 자료 : OECD Earnings database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남.
 - 한국은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뚜렷하게 큰 국가로 파악됨.
 -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요구됨.

8. 산전후휴가제도

가. 개요

- 여성취업자의 산전후휴가제도는 모성건강의 확보에 필요할 뿐 아니라, 여성의 취업 상태 유지와 출산율의 제고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나. 국가별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2009)

□ 주요 국가의 산전후 휴가제도를 보면 최소 14주 이상임.

○ 최근에는 여성근로자에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임.

— 급여 재원은 크게 건강보험, 사회보험, 기타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

〈표 10-6〉 주요 국가별 산전후휴가제도

구분	최대 기간	적용대상	급여수준	급여재원
스웨덴	· 14주 -산전 7주, 산후 7주(2주는 의무) -작업환경 위험시 산전 60일부터 사용가능	거주민	· 소득의 80%	부모보험
핀란드	· 17.5주 -산전 8주, 산전후 최소 2주 의무	거주민	· 최초 56일 동안 50,606 유로까지 연간소득의 90% 지급, 이후에는 최대 32,892유로까지 소득의 70% 지급 -휴가동안 근무시, 최소수당(22.04유로) 재정적 지원받는 학생 15.20 유로/일	건강보험
프랑스	· 16주 -산전 6주, 산후 10주 -다산 또는 조산의 경우 출산 이후 12주까지 연장 -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총 24주	근로자, 자영업자	· 100%(최대 2,885유로)	통합사회보험
독일	· 14주 -산전 6주, 산후 8주 -조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경우 산후 12주로 연장	건강보험 가입여성	· 최소 12주간 휴가사용 3개월 혹은 13주의 평균임금 100%(1일 최고 13유로) -보험 미가입 경우 총 210 유로(통상임금의 16일분 정도)	건강보험
영국	· 52주 -산전 26주, 산후 26주	근로자, 자영업	· 초기 6주 통상임금의 90%, 이후 33주는 123.06 £ (2010년 124.88 £계획) 또는 평균소득의 90% 중 적은 금액	통합보험 (고용주가 급여 지급 후)

구분	최대 기간	적용대상	급여수준	급여재원
			-산전후휴가 급여 비수급자에게는 모성수당을 최대 39주간 지급, 주당 123.0606 £나 총 평균 소득의 90% 중 적은 금액	돌려받는 방식)
일본	· 산전 6주(다태임신의 경우는 14주간); 산후 8주	보험 가입여성	· 근로자: 1일당 표준보수일액의 2/3 · 자영업자 등: 출산육아일시금 35만엔	건강보험
한국	· 90일 · 산후 45일 보장	보험가입 여성근로자	·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 통상임금기준 · 대기업은 60일 사업주, 30일 고용보험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고용보험	고용보험

자료 :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0; 박선영 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2011, p.163-165, 13p 재구성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현행 한국의 제도는 대기업의 경우 60일에 대해 고용주의 부담이 있어 고용주가 산전후휴가를 기피하고 있음.
 - 대기업의 정규직 여성근로자는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자격이 발생하나 이 자격을 획득하기가 어려움.
 - 이에 대해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에의 적용, 부모보험의 도입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 육아휴직제도

가. 개요

- 유아기의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음.
- 현재 한국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주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나. 국가별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2009)

-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제도는 기간과 적용대상 등 매우 다양한 형태여서 일반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움.
- 스웨덴은 자녀 8세 이내이나,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은 자녀 3세까지만 제한하고 있음.

〈표 10-7〉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제도

구분	기간	적용대상	급여수준	급여재원
스웨덴	·출산(입양) 자녀 8세 (초등학교 1학년) 이내 480일(부모 각각 240일) -60일은 부모 각각 의무 적 사용 -산전후휴가와 통합	·출산예정일 이전 240일 동안 고용	·최초 390일은 80%, 이후 90일은 1일 60SEK	부모보험
핀란드	·자녀 3세까지 약 26주 간 부모 중 한명 혹은 공 유 -다태아 경우 자녀 1명 당 10주 연장	·출산예정일 이전 최소 30주 보험 가입	·최초 30일은 소득의 75%(상한: 50,606유로) -이후 소득의 70%(상한 32,892유로)	건강보험
프랑스	·자녀가 3세가 될 때까 지 1년간 2회 연장 가 능	·급여수급자격: 첫째 자 녀의 경우 출산전 2년 동 안 연속하여 근무 셋째	·가구당 개별혜택 -두 자녀 이상이고, 특정 기간 근무하였을 때 정	통합사회보험

구분	기간	적용대상	급여수준	급여재원
		자녀의 경우 5년 중 2년 근무 · 휴직수급자격: 출산전 1년 동안 근무	액 월 553유로	
독일	· 자녀 3세까지 부모 1명당 3년간 · 최초 2년 출산·입양 직후, 추가 1년 자녀 8세까지 연장 사용 가능	· 자격요건 없음(실업자 포함)	· 최대 12개월간 통상임금의 67% (최소 300유로~ 최대 1,800유로) · 한부모 14개월간 급여 · 출산전 무노동시 300유로	조세
영국	· 자녀 5세까지(장애아의 경우 18세) 13주	· 1년간의 계속고용	· 무급	
일본	· 자녀 1세까지	· 육아휴직 개시전 2년 동안 12개월 고용보험 가입 · 기간제(육아휴직 개시전 1년 이상 근무에 계속 근무 예상) 포함 · 일용직 제외	· 평상시 임금의 30%	고용보험
한국	· 1년 이내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 급여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고용보험

자료 : 박선영 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2011, p.167-168, 20p 재구성, 원자료는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0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재원마련의 다양성 검토

- 일본과 독일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스웨덴은 “부모보험”을 만들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위한 독립적인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자영업자와 비정규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불안정한 집단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재원마련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1장 주택

1. 1·2인 가구 비중

가. 개념

-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1·2인 가구’는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함.
- 1·2인가구수의 증가는 중소형주택에 대한 매매 및 전월세 수요를 증가시킴.

나. 국가별 1·2인 가구 현황과 추이

- 한국의 1~2인 가구 비중은 1990년 259만 가구(22.8%)에서 2000년 496만 가구(34.6%), 2010년에는 835만 가구(48.2%)로 빠르게 증가. 이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체 가구의 58.3%가 1~2인 가구이며 특히, 독신자·독거노인 증가와 이혼 증가 등으로 1인 단독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단독세대 가운데서도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가 1995년 220만 명(전체 단독세대의 19.6%)에서 2005년 386만 명(26.7%)로 크게 증가
- 영국은 1~2인 가구 규모가 전체 가구의 2/3이상을 차지하는 64.0%나 되며, 1인 가구 비율도 1971년 18%에서 2008년 28.8%로 지속 증가³⁵⁾

- 한국의 경우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1980년 5인 이상 가구에서 1990년 4인 가구, 2010년 2인 가구로 변화(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 11-1〉 1·2인 가구 비중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22.8	29.5	34.6	42.1	48.1
영국	60.08(‘91)	-	63.6(‘01)	64.0	64.0
독일	64.46(‘91)	-	-	71.1	74.3
프랑스	56.7(‘91)	-	-	65.4	68.2
일본	43.7(‘90)	48.6(‘95)	52.7(‘00)	56.0(‘05)	58.3(‘10)
스웨덴	70.63(‘91)	-	-	72.9	73.0
핀란드	61.1(‘90)	65.1(‘95)	68.8(‘00)	72.2(‘05)	74.0(‘10)
그리스	42.92(‘91)	-	-	47.8	48.5

자료 : 일본 통계청(www.stat.go.jp), 핀란드 통계청(www.stat.fi), 런던 국립통계청(www.statistics.gov.uk), 유럽 연합통계청(<http://epp.eurostat.ec.europa.eu/>)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주요국의 가구의 증가추이를 볼 때 1~2인 가구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영국의 경우 근래 10여년간 63~64%, 독일 70~75%, 프랑스 65~68%에서 1~2인 가구의 증가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1~2인 가구의 빠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약 60% 내외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장래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매매 및 전월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35) UK ONS :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생성자료는 Vital Statistics : Population and Health Reference Tables Spring 2011 (Released : 22 Feb 2011) 형태로 공개

2. 평균 가구원수

가. 개념

- 가구원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하며, ‘평균 가구원수’는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
-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가구원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존 2~3세대 가족구조에서 1~2세대로 가족구조가 가구구성 형태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함. 평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중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

나. 국가별 평균 가구원수 현황과 추이

-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가족 유형과 형태 분화의 빠른 진행으로 1990년 3.7명을 기록한 이래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2.7명으로 크게 감소
 - 일평균 가구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둔화되는 양상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일본의 경우 저출산의 영향으로 1990년 평균 가구원수가 3.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2.5명을 기록
 - 핀란드의 경우도 저출산 영향 등으로 1990년 2.42명에서 2010년 2.0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평균 가구원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감소 속도가 매우 완만

〈표 11-2〉 평균 가구원수

(단위 : 명)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3.7	3.3	3.1	2.9	2.7
미국	2.63	2.65	2.62	2.57	2.6('10)
영국	2.5('91)	-	2.4('01)	-	2.4('09)
독일	2.3('91)	-	-	-	2.0('09)
프랑스	2.6('90)	-	-	-	2.2('09)
일본	3.0('90)	2.8('95)	2.7('00)	2.6('05)	2.5('10)
핀란드	2.42('90)	2.31('95)	2.21('00)	2.12('05)	2.07('10)
아르헨티나	-	-	3.55('01)	-	-
그리스	-	-	-	2.7	2.7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KB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주택도시통계편람(2008,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인용 미국 통계청 (www.census.gov), 유럽 연합통계청(http://epp.eurostat.ec.europa.eu/), 런던 국립통계청(www.statistics.gov.uk), 일본 통계청 (www.stat.go.jp), 핀란드 통계청(http://www.stat.fi/), 아르헨티나 통계청(http://www.indec.gov.ar)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 여성과 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여성이 증가하면서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1995년 이후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5년마다 약 두 배나 증가. 30~34세의 미혼율은 1995년 6.7%, 2000년 10.5%, 그리고 2005년에는 19.0%로, 35~39세 여성은 각 3.3%, 4.1%, 7.6% 증가
 -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1.59명에서 2010년 1.2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수치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
-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가족구조 변화와 주택시장에서 수요행태 변화를 동반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한 주택공급과 관리정책이 필요
 - 저출산 경향과 주요국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 규모나 속도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래에는 평균 가구원수가 2.0~2.5명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정책과 주택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주택 재고수

가. 개념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제2조)
 - 주택은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을 가진 건물로 정의 가능
- ‘주택 재고수’는 주거서비스의 양적지표로서 한 나라의 총 주택수(빈 집 포함)를 의미하며, 주택보급률 등을 측정할 때 사용

나. 국가별 주택 재고수 추이

- 우리나라의 총 주택 재고는 2010년 현재 약 1,467만호로 2005년 1,322만호에 비해 145.5만호(11.0%) 증가
 -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공급, 1990년대 중반 300만호 공급 등 꾸준한 주택 공급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재고가 빠르게 증가
- 미국의 주택 재고는 2010년 현재 우리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1억 3,170만호로 2000년 1억 1,590호에 비해 1,580만호 증가
 - 영국의 총 주택 재고는 우리의 약 두 배 규모로 2,726만호, 일본은 5,758만호 특히 일본의 경우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도 70만호 내외 주택을 매년 공급

〈표 11-3〉 주택 재고수

(단위 : 호)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7,160,386	9,570,395	11,472,401	13,222,641	14,677,419
미국	102,263,678	-	115,904,641	-	131,704,730
영국	23,550,000 (’91)	24,339,000	25,281,000	26,197,000	27,264,000
일본	42,007,000 (’88)	45,879,000 (’93)	50,246,000 (’98)	53,891,000 (’03)	57,586,000 (’08)
스웨덴	4,044,768	4,233,719	-	4,404,059	4,508,373
핀란드	2,210,000	-	2,512,000	2,667,000	2,808,000

주 :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빈집 포함, 영국 빈집포함(united Kingdom 기준)

자료 : 미국 통계청(www.census.gov), 영국 지방정부재정통계(www.communities.gov.uk), 일본 통계청(www.stat.go.jp), 스웨덴 통계청(www.scb.se), 핀란드 통계청(www.stat.fi)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주택 재고의 증가는 신규 건설을 통한 주택의 질 향상 등 주거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유지 및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따라서 이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소득감소 등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함에도 일정량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결과 공가 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4. 공가율

가. 개념

- ‘공가율’은 총 주택재고에서 가구가 살고 있지 않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 빈집이라는 용어로 사용됨. 빈집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에서는 빈집을 필요공가율(주택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의 비율), 상시공가, 일시적 공가 등을 고려해 3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2009년 주거 실태조사)

나. 국가별 공가율 추이

- 도시화의 빠른 진전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 주택보급의 확대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집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등으로의 인구집중에 따라 공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5년 3.8%에서 2010년 5.4%로 증가. 외국의 경우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가 10% 이상의 높은 공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9%대의 공가율을 유지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공가율이 10%를 초과하여 2008년 현재에서 13.1%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도 1990년 8.9%에서 2010년 11.4%로 2.5%p 증가

〈표 11-4〉 공가율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	3.8	4.5	5.5	5.4
미국	8.9('90)	9.1('95)	9.0('00)	-	11.4('10)
영국	2.5	2.0	3.6('00)	3.4('02)	-
독일	-	7.5('98)	7.0('01)	8.0('06)	-
프랑스	-	-	6.9('99)	6.3('06)	-
일본	9.4('88)	9.8('93)	11.5('98)	12.2('03)	13.1('08)
스웨덴	1.0	-	-	-	-
아르헨티나	-	-	16.0('01)	-	-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KB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주택도시통계편람(2008,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인용; 미국 통계청(www.census.gov), 영국 지방정부재정통계(www.communities.gov.uk), 독일 연방통계청(www.destatis.de), 일본 통계청(www.stat.go.jp)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인구 감소, 주택의 빠른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공가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고 주택의 유지관리 혹은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공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

5. 1천명당 주택수

가. 개념

- ‘1천명당 주택수’는 주택의 양적지표로서 국가간 인구대비 주택수를 비교할 수 있음
 - 1천명당 주택수는 총주택재고수를 ‘총인구 ÷ 1천명’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 측정

- 1천명당 주택수는 주택보급률 지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주택공급 규모와 총재고주택수 등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주택보급률의 경우 주택수를 가구 수로 나누어 도출. 주택과 가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보급률 자체가 달라져 국가간 비교에는 적절치 못한 면이 있음.

나. 국가별 주택수 현황과 추이

- 우리나라의 1천명당 주택수는 그 간의 꾸준한 주택공급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국 기준 2010년 363.8호(거처 구분 기준). 2005년 330.4호에 비해 33.4호 증가
- 거처구분을 하지 않은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전국 기준 2000년 249호(수도권 222호)에서 2010년 302호(수도권 275호)로 증가
- 미국과 일본의 경우 2000년을 전후하여 1천명당 주택수가 400호를 상회하기 시작한 반면, 영국, 프랑스 등은 1990년 이전시기부터 이미 1천명당 주택수가 400호를 상회
 -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라 1천명당 주택수가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주택공급 증가로 1천명당 주택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

〈표 11-5〉 1천명당 주택수

(단위 : 호)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169.5	214.5	248.7	330.4	363.8
미국	402.7('91)	399.6('95)	406.7('01)	401.3('03)	410
영국	409.4('91)	420.6('95)	429.6('00)	436.6('05)	439.0('09)
독일	-	-	-	482.1('06)	-
프랑스	458.5('90)	473.7('95)	487.6('00)	499.7('05)	-
일본	342.2('88)	367.2('93)	397.3('98)	422.0('03)	451('08)
스웨덴	-	-	-	490.3('06)	-
핀란드	-	-	-	509.7('06)	-
그리스	-	-	-	501.0('06)	-

주 : 주택수는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2005~2010), 다가구 구분거처 미반영시 인구 천인당 주택수(1990~2000)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KB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주택도시통계편람(2008,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인용;
Youngman Lee(2005), 'Housing Service and Housing Indicators in the U.S.A'.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 보고서. pp.83~84. 국토연구원; 영국 지방정부재정통계(www.communities.gov.uk), 일본 통계청(www.stat.go.jp),
경제협력개발기구(www.oecd.org)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비록 인구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국의 경우 모두 1천명당 주택수가 400호를 초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400호 이상 수준으로 1천명당 주택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정규모의 신규주택 주택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6. 자기점유율

가. 개념

□ 자기점유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전월세 형태로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기점유율에 해당되지 않음.

- ‘자가점유율’은 총가구수에서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나. 국가별 자가점유율 현황과 추이

-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55.6%에 달했으나, 2010년 54.2%로 소폭 낮아짐.
 - 이는 자녀교육,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한데 원인이 있음.
- 임대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는 독일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자가점유율이 60%를 상회하고 있고, 핀란드도 60% 수준에 근접
 - 1990년 이후 조사국의 자가점유율은 대부분 정체되고 있는 상황

〈표 11-6〉 자가 점유율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49.9	53.3	54.2	55.6	54.2
미국	64.2('90)	64.5('95)	66.2('01)	69.1('05)	65.1('10)
영국	66.6('91)	67.5('95)	69.2('00)	69.2('05)	65.5('10)
독일	-	40.9('98)	42.6('02)	41.6('06)	45.7('10)
일본	61.3('88)	59.8('93)	60.3('98)	61.2('03)	61.1('08)
핀란드	66.8('90)	-	58.0('00)	58.3('05)	59.2('10)

자료 : 미국 통계청(www.census.gov), 영국 지방정부제정통계(www.communities.gov.uk), 독일 연방통계청(www.destatis.de), 일본 통계청(www.stat.go.jp), 핀란드 통계청(<http://www.stat.fi/>)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자가 소유나 점유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자녀들의 교육수준이나 정서적 안정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많음.
 - 선진국의 경우 주택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등 주택소유에 따른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주거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자가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선진국 수준으로 자가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 수요 행태변화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7. 자가소유율

가. 개념

- ‘자가소유율’은 총가구수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

나. 국가별 자가소유율 추이

- 우리나라의 자가소유율은 전국 기준으로 2005년 60.3%에서 2010년 61.3%로 소폭 증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55.9%에서 55.9%로 변화가 없었으나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59.0%에서 61.7%, 67.5%에서 69.1%로 증가
-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60%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자가소유율이 증가하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2005년 68.9%에서 2010년 66.9%로 2%p 하락

〈표 11-7〉 자가 소유율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	-	-	60.3	61.3
미국	63.9	64.7	67.4	68.9	66.9
독일	-	-	43.0('01)	-	-
프랑스	-	-	55.0('99)	-	-
일본 ³⁶⁾	61.1('88)	59.6('93)	60.0('98)	60.9('03)	60.9('08)
핀란드	-	-	64.0	-	-

주 : 외국의 경우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자가비율을 산출

자료 : 미국 통계청(www.census.gov), 일본 통계청(www.stat.go.jp), 세계은행(www.worldbank.org)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미국 등은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정책들을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시켜 왔으나 주택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많은 자가소유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는 역기능을 초래한 바 있음.
- 무리하게 자가소유율을 상승시키기 보다는 단계별 즉 구입이전 단계 → 구입단계 → 보유단계에 맞춘 정책지원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하고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

8. 멸실주택수

가. 개념

- ‘멸실주택수’는 주택의 노후화, 자연재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해체되는 주택의 수를 의미

36) 지가세대수(持家世帶率) : (자기집에 거주하는 주요 세대수 ÷ 보통 가구 수) × 100

나. 국가별 멸실주택수 추이

- 최근 5년간(2006~2010) 우리나라의 멸실주택수는 약 55만호로 나타남. 최근의 감소세는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 멸실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지난 1991~1995년 기간 동안 142만 여건의 주택멸실이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최근 4년간(2006~2009)에는 51만여건으로 크게 감소
 - 스웨덴은 지난 1996~2000년의 기간 동안 1만7천여건의 주택이 멸실된 이후 계속 감소해 2006~2010년의 기간에는 약 4,700채의 주택이 멸실. 영국의 경우 2006~2010년의 기간 동안 7만5천여건의 주택이 멸실

〈표 11-8〉 멸실 주택수

(단위 : 호)

구분	91~95	96~00	01~05	06~10
한국	1,323,168	936,756	971,760	549,841
영국	-	-	-	75,710
일본	1,427,828(91~95)	1,188,270(96~00)	823,343(01~05)	513,398(06~09)
스웨덴	5,993(91~95)	17,444(96~00)	10,541(01~05)	4,694(06~10)

주 : 한국의 멸실주택수는 5년단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각 조사년도로부터 건축년도가 5년이하인 주택은 멸실되지 않았다고 가정

자료 : 영국 지방정부재정통계(www.communities.gov.uk), 일본 통계청(www.stat.go.jp), 스웨덴 통계청(www.scb.se)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건축기술의 발달 등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200만호 사업으로 지어진 주택 외에 지난 1980~1990년대에 지어진 노후주택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멸실주택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처럼 장수명주택의 건설이 일반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멸실주택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9. 주택건설호수

가. 개념

- ‘주택건설호수’는 건설되는 주택의 수를 의미. 건설주택은 허가기준, 착공기준, 준공기준 등으로 구분. 여기서는 허가기준 통계를 제시

나. 국가별 주택건설호수 추이

- 최근 5년간(2006~2010) 우리나라의 주택건설호수는 약 216만호로 연평균 43만호를 건설. 과거 주택 200만호와 주택 300만호가 건설되었던 1991~1995년의 기간에는 총 312만호, 연평균 62만 5천호가 건설
- 미국은 2001~2005년의 기간 동안 950만호로 근래 20년간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2006~2010)에는 190년대 초반수준과 비슷한 533만호로 크게 감소(43.9% 감소)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연평균 146만호에서 최근에는 100만호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영국과 핀란드에서도 주택건설호수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

〈표 11-9〉 주택건설호수

(단위 : 호)

구분	91~95	96~00	01~05	06~10
한국	3,125,805	2,332,801	2,709,218	2,164,909
미국	5,946,900	7,734,800	9,499,000	5,330,300
영국 ³⁷⁾	-	379,630('98~00)	1,013,030	897,450
일본 ³⁸⁾	7,317,788	6,590,625	3,492,372(01~03)	2,942,636(07~08)
핀란드 ³⁹⁾	-	-	150,703	148,065

자료 : 미국 통계청(www.census.gov), 영국 지방정부채정통계(www.communities.gov.uk), 일본 통계청(www.stat.go.jp), 핀란드 통계청(<http://www.stat.fi/>)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절대적인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된 선진국에서는 주택건설호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절대적인 주택부족 문제가 점차 해소되면서 주택수요가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택건설호수도 감소할 전망
 - 주택건설산업계에서는 주택건설생산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장래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주택정책의 지방이양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37) 영국의 경우 착공(Start) 기준 자료

38) 일본의 경우 착공(Start) 기준 자료

39) 핀란드의 경우 착공자료 없음. 준공(Compleat) 기준 자료

10. 주택가격지수

가. 개념

- ‘주택가격지수’는 주택매매가격을 지수화한 것
 - 현재는 국가승인통계인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격지수 산정을 위해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며 지수추정에서 지역별 주택 유형별 주택재고 구성비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있음⁴⁰⁾.
 - 2013년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한국주택가격지수(KHPI)를 생성하여 발표할 예정임.

나. 국가별 주택가격지수 추이

-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주택가격지수는 2000년에 비해 63.9% 상승. 과거 1990년대 중반 토지공개념 제도도입과 주택 300만호 공급 등으로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고, 1998년 외환위기 시기 등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지수는 1990년 73.2에서 2000년 63.1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여 2005년 86.9, 그리고 2010년 12월에는 103.4를 기록
- 미국의 경우 1990년 71.8에서 2010년에는 188.4로 162%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
 - 독일은 2000년 대비 2004년에는 주택가격이 약 4.6% 하락하였으나 1990년보다는 15% 상승. 일본의 경우도 2010년의 주택가격이 2000년보다 32.3%나 하락
 - 영국은 2000년 대비 2004년에는 주택가격이 62.5% 상승하였으며, 1990년에 비해서는 150% 상승. 프랑스의 2010년의 주택가격지수는 204.9로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104.9%나 주택가격이 상승

40)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 / 시세 통계 / 통계자료 참조

〈표 11-10〉 주택가격지수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2011.6=100)		65.8	60.2	56.7	78.1	95.9
미국 (2000=100)		71.8	79.1	100	186.6('04)	188.4
영국 (2000=100)		64.9	62.4	100	162.5('04)	-
독일 (2000=100)		82.6	103	100	95.0('04)	-
프랑스 (2000=100)		-	-	100	173.4	204.9
일본 (2000=100)		-	-	100	77.4	67.7
스웨덴 (2000=100)		-	-	100	145.7	204.1
핀란드 (2000=100)		96	64	100	122('04)	-
그리스 ⁴¹⁾	도시 (1997=100)	76.1('94)	82.6('95)	137.7('00)	214.5('05)	238.9('10)
	기타도시(아테네 이외의 지역) (1993=100)	100('93)	114.3('95)	171.3('00)	269.1('05)	293.4('10)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2011). '미국 주택가격의 현황 및 전망'(2010년 수치 자료 출처); 지규현 외(2006), OECD 국가의 기초경제여건과 주택가격 변화, 주택도시연구원; 핀란드 통계청(<http://www.stat.fi/>), 그리스 은행(www.bankofgreece.gr), 경제협력개발기구(www.oecd.org)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주택건설업계의 제한된 주택공급 능력과 주택건설과 입주에 따른 공급시차 등을 감안하지 않은 자가소유촉진책과 저금리의 금융상품 지원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시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

41) 그리스의 도시지역은 그리스 은행이 신용기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아테네와 기타 도시지역의 경우 2005년까지는 모든 주택의 주택재고량을 가지고 주택가격지수를 구하였음(2006년부터는 아파트만 해당). 그리스의 기타 도시의 경우 그리스 은행이 주로 부동산기관 각 지점에 의해 취합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경제연구부서에서 기타 도시(지방) 주택가격지수 분석을 처리함.

11. 임대료지수

가. 개념

- ‘임대료지수’는 임대료를 지수화한 것
 - 우리나라의 임대료지수는 전세가격지수이며, 임대차시장의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등 모든 임대차유형을 포괄하는 지수는 아님. 최근에 월세지수가 작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임대료 동향을 살펴볼 때 전세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민은행의 전세가격지수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격지수 산정을 위해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며 지수추정에서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구성비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있음⁴²⁾.
 - 다른 나라의 임대료지수는 전세라는 임대차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지수라고 할 수 있음.
 - 2013년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한국주택가격지수(KHPI)를 생성하여 발표할 예정임.

나. 국가별 임대료지수 추이

- 우리나라의 전세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2010년 현재 2000년에 비해 52.2% 상승.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고, 주택재고가 부족하였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전세가격지수는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가짐.
 - 우리나라의 전세가격지수는 1990년 44.4에서 2000년 75.6, 2010년에는 93.4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1995~2000년 사이에 임대료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임대료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4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 / 시세 통계 / 통계자료 참조

- 미국의 경우 1990년 102.9에서 2004년에는 118.8로 15.5% 상승
- 영국은 2000년 대비 2004년에는 임대료가 10.1% 상승하였으며, 1990년에 비해서는 16.5% 상승. 독일의 2004년의 임대료지수는 123.4로 1990년 대비 56.8% 상승하였고, 2000년 대비 23.4% 상승
- 프랑스의 2004년 임대료지수는 126.3으로 2000년 대비 26.3% 상승하였고, 1990년 대비 74.2% 상승

〈표 11-11〉 임대료 지수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2011.6=100)	44.4	54.0	61.4	75.6	93.4
미국(2000=100)	102.9	108.8	100	118.8('04)	
영국(2000=100)	94.5	100.8	100	110.1('04)	
독일(2000=100)	78.7	112.5	100	123.4('04)	
프랑스(2000=100)	72.5	87.2	100	126.3('04)	
일본(1997=100)	63.0	99.4	96.8	88.3('04)	86.3
스웨덴(1999=100)	106.0	109.7	98.5	128.4('04)	
핀란드(1997=100)	67.9	87.1	98.7	161.2('04)	

주 : 한국의 임대료는 전세가격을 의미

자료 : 하수정, 이수욱(2011): 주택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토연구원; 지규현 외(2006), OECD 국가의 기초경제여건과 주택가격 변화, 주택도시연구원.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임대료는 정책에 대한 영향도 받지만,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임대료의 상승은 서민층의 주거비부담이 높아져 주거불안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 시행할 필요가 있음.

12. PIR(Price to Income Ratio)

가. 개념

- PIR은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준 값(단위: 배)으로 주택지불능력(Affordability) 향상 측정에 사용
 - 가구소득수준을 반영해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지수로, PIR이 10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

나. 국가별 PIR 현황과 추이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PIR은 5.56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우리나라의 PIR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05년 3.96에서 2010년 5.56으로 크게 증가
-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도 2000년대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PIR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미국의 경우 1999년에 2.3에서 2007년 4.0으로 상승하였고, 영국은 2002년 3.8에서 2008년 4.1로 상승

〈표 11-1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 Price to Income Ratio)

(단위 : 배)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3.96	5.56
미국	2.3('89)	2.3('95)	2.3('99)	2.7('03)	4.0('07)
영국			3.8('02)	3.4('03)	4.1('08)
독일		5.1('97)	6.0('02)		
프랑스		6.5('94)	5.1('99)		
일본		6.8('95)	5.8('02)	5.7('05)	5.9('08)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KB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주택도시통계편람(2008,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인용; Youngman Lee(2005), 'Housing Service and Housing Indicators in the U.S.A'.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 보고서. pp.83~84. 국토연구원; 하수정, 이수욱(2011): 주택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토연구원.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PIR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학계에서 적정수준으로 판단하는 4.0 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PIR은 높은 수준
-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양상이나, 세계경기 침체로 소득도 상승하지 않는 상황으로 PIR의 높은 수준은 지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13. 평균주택면적

가. 개념

- 평균 주택면적은 주택당 사용면적을 의미하며, 이로서 주거밀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지표
 - 전용면적이란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함.

나. 국가별 평균주택면적 추이

-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평균 주택면적은 68.71㎡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편임.
- 생활수준과 소득이 높아지면 평균 주택면적은 증가하기 마련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균 주택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99년에 160.7㎡에서 2003년 163.1㎡로 증가하였고, 독일도 1998년 88.6㎡에서 2008년 91.7㎡로 증가
 - 일본은 최근에 평균 주택면적인 감소하였지만, 장기추세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표 11-13〉 평균 주택 면적

(단위 : m²)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68.71 m ²
미국	156.8('89)	160.9('95)	160.7('99)	163.1('03)	
독일			88.6('98)	91.6('03)	91.7('08)
일본	89.3('88)	91.9('93)	92.4('98)	94.9('03)	94.1('08)
핀란드	74.0('90)	-	77.0('00)	78.0('05)	80.0('10)

자료 : Youngman Lee(2005), 'Housing Service and Housing Indicators in the U.S.A'.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 보고서. pp.83~84. 국토연구원. 독일 연방통계청(www.destatis.de), 일본 통계청(www.stat.go.jp), 핀란드 통계청(<http://www.stat.fi>)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 평균 주택면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편임.
-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주택의 다운사이징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평균 주택면적이 증가할 수 있는 동인이 크게 약화됨.
- 하지만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지속되면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보다 여유로운 주거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평균 주택면적은 다른 국가와 같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

14. 1인당 주거면적

가. 개념

- 1인당 주거면적은 개인의 주거소비량을 의미하며, 주거밀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지표

나. 국가별 주거면적 추이

-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990년 13.8㎡에서 2010년 28.5㎡로 크게 증가
- 미국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은 1989년 61.3㎡에서 2003년 68.2㎡로 증가
 - 일본은 2008년 현재 35.5㎡로 나타남
 - 핀란드는 1990년 31.4㎡에서 2010년 39.1㎡로 증가

〈표 11-14〉 1인당 주거면적

(단위 : m²)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13.8	17.2	20.2m ²	24.8m ²	28.5m ²
미국	61.3('89)	64.5('95)	66.3('99)	68.2('03)	
일본					35.5('08)
핀란드	31.4('90)	-	35.3('00)	37.5('05)	39.1('10)

자료 : Juhyun Yoon(2005), 'Housing Service in Korea and housing Policy Implications'.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 보고서, 17쪽. 국토연구원; Youngman Lee(2005), 'Housing Service and Housing Indicators in the U.S.A'.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 보고서, pp.83~84. 국토연구원(*Square Meter of Person); 허수정, 이수옥(2011), 주택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토연구원; 핀란드 통계청(<http://www.stat.fi/>)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구원수가 감소하는 가구의 소형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주택에 대한 선호 증가 등으로 1인당 주거면적은 증가하나 30㎡ 내외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

15.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가. 개념

-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는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음
 -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를 의미하나, 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를 포함하기도 함

나. 국가별 장기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추이

- 우리나라 2010년 현재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수는 5.5%(805,841호)로 나타남. 이는 미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 유럽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정책이 잘 구비된 국가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영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5%로 매우 높은 편임. 영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공공의 재정적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였기 때문
 - 프랑스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7.0%(2005년), 일본은 24.2%(2008년), 스웨덴은 20.0%로 나타남.

〈표 11-15〉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3					5.5
미국	1.0									
영국	20	19.7	19.1	18.7	19.2	18.0	17.7	17.5	17.5	17.5
독일					6.0					
프랑스					17.0					
일본	-	-	6.6	-	-	-	-	24.2	-	-
스웨덴	23.0				20.0					

주 : 미국과 스웨덴의 2001년 통계는 2000년 자료임.

자료 :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stat.mltm.go.kr>), 영국 지방정부재정통계(www.communities.gov.uk)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
- 영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는 재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고 확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16. 임대료 보조 가구 비율

가. 개념

- 임대료 보조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계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 주는 제도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

부정책 중 현금보조정책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거비 지원 형태로는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지원(1990),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지원(1994), 국민기초생활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주거급여(2000),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2006) 등이 있음(이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임대료보조에 한정).

나. 국가별 임대료보조 현황과 추이

- 영국의 경우 2010년 현재 주거비를 보조받고 있는 가구는 479.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8.8%를 차지. 지난 10년 동안 임대료보조를 받은 수혜가구는 약 23.0% 증가
 - 이는 지역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LHA)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보조가 증가한 영향
- 미국은 전체가구(1억 1261만 가구)의 약 1.9%에 해당하는 210만 가구 가량이 임대료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비보조(주택바우처)를 받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임대료보조를 위한 재정운용 방식이 다른 나라의 수급권 보장방식과는 달리 예산할당방식을 취하고 있어 연도별 주거비보조 수혜대상은 200만 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

〈표 11-16〉 임대료보조 가구 비율

(단위 : 만가구)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미국	-	-	-	201('07)	210
영국	-	-	390.1	397.5	479.8
독일	-	-	-	81.1	60.6('07)

주 : 영국의 경우 각 년도 11월 기준

자료 : 미국(HUD(portal.hud.gov), VMS Data / Reports(Voucher Management Systemt, 박은철;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77 재인용)영국(노동연금부 DWP;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홈페이지 research.dwp.gov.uk), 독일(Statistisches Bundesamt, Social statistics)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주요국가의 임대료보조 제도 도입은 주택부족 문제 완화나 임대료 통제폐지 등을 계기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시켜 거주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또한 임대료보조 제도를 도입한 시기도 대부분의 국가가 임대주택 재고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중이 5.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지속적인 임대주택 보급 정책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시차에 따른 수혜대상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시행할 필요
- 임대료보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지불 능력 향상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임대료보조 시범사업의 연차적 시행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가. 개념

-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 주택의 구조설비 및 환경요소 등에 대한 규정한 최저 기준을 의미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총가구 대비 미달 가구 비율을 의미
 - － 일본의 경우 1973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자, 1976년 시행된 ‘제3기 주택건설 5개년계획’에서 모든 세대가 확보해야 할 ‘최저주거면적 수준’을 도입
 - － 영국 최저주거기준은 1985년 주택법(The Housing Act of 1985) 입법을

통해 도입된 후 2004년 최저주거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HHSRS: Housing and Health and Society Rating System)을 도입. HHSRS는 4가지 기준 즉, ① 주택법에 지정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② 적정 수준의 개보수가 이루어진 주택 ③ 적정 수준의 현대식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 ④ 적정 수준의 난방을 제공할 수 있는 주택 등을 모두 만족 시킬 경우 우량주택으로 정의

○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침실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 개정)

— 최저주거기준 측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주거면적·구조·설비, 일본은 주거면적 그리고 영국의 경우 주택상태 등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국별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음.

나. 국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추이

-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총가구(1,734만가구) 중 10.6%(184만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268.5(16.6%)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
- 일본의 경우 1998년 총가구 대비 5.1% 수준이었던 최저주거면적 수준 미달가구가 꾸준한 주택공급과 개량 등으로 2008년 현재 총가구 대비 4.3%로 감소

〈표 11-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⁴³⁾	-	-	-	16.6('06)	10.6
영국	-	-	-	35.0('06)	-
일본	9.5('88)	7.9('93)	5.1('98)	4.2('03)	4.3('08)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2011.6, pp52; 영국(국토해양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 연구’ 2010, pp48 재인용)
; 일본 The Building Center of Japan, ‘A quick look at housing in Japan’

4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개정된 기준('11.5.27)을 적용하여 분석한 추정치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합의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 성장과 주거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빠르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을 전후하여 총 가구 대비 5%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
- 일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1973년 이후 5년간인 1978년까지 최저주거면적 수준 미달가구가 30.4%에서 14.8%로 빠르게 감소한 바 있음.
 - 우리의 경우 전국의 경우는 2008년부터 (신)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현재까지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음.
- 지속적인 서민주택공급과 주택개량사업 활성화 등을 시행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제12장 자발적 민간사회복지부문

1.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가. 개념

-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Expenditure, VPSE)은 정부의 재정부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을 이용하여 지출되므로 민간부문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복지지출임(고경환 외, 2011:49).
-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대표적인 주체는 종교단체, 복지시설 및 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모금기관 등임(고경환 외, 2011:49).
- 우리나라에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은 복지시설, 모금기관, 기부금품 수집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나. 국가별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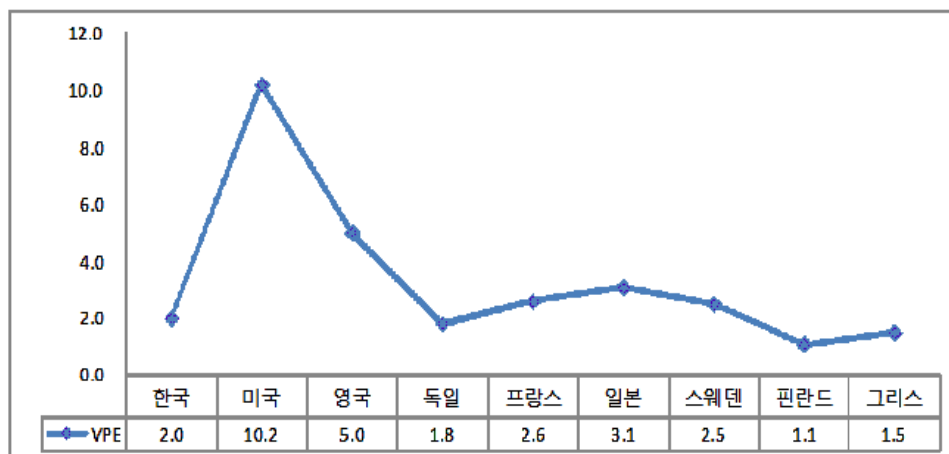
1) 최근 현황

- 2007년 기준 주요 국가의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은 자유주의형 국가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남.

- 미국은 경상 GDP 대비 10.2%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영국은 이보다 낮으나 역시 5.0%로 높은 편임.
- 이 외의 국가는 복지레짐에 관계없이 나타남.
 - 서로 다른 복지레짐인 일본과 프랑스, 스웨덴에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은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핀란드와 독일은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은 독일, 핀란드, 그리스보다 높은 편

〈표 12-1〉 주요 국가의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현황 비교(2007년 기준)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2012. 3. 19 추출)

2) 추이

- 지난 30여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별 격차가 있음.
- 미국과 영국을 포함하는 자유주의형 국가에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높음.
 - 특히 미국의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이 높은 것은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잔여적으로 설계된 것과 관련 있음.

- 또한 미국은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RNOVA(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 and Voluntary Action)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기부문화 관련 자료와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축적된 연구기관(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에서는 fund raising school을 운영함.
- 자유주의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복지레짐에 관계없이 일본, 프랑스, 스웨덴이 높게 나타남.
- 특이한 것은 유교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에서 자발적인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임.

〈표 12-2〉 주요 국가의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1980-2007)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한국	-	-	0.1	2.0	2.0	1.8	1.9	2.0
미국	4.2	5.9	7.1	7.8	8.7	9.7	9.9	10.2
영국	3.3	4.4	4.7	6.0	6.8	5.3	5.3	5.0
독일	1.1	1.3	1.4	1.5	1.6	1.8	1.8	1.8
프랑스	0.6	0.7	1.7	2.0	2.3	2.7	2.6	2.6
일본	-	-	-	0.0	3.0	2.5	2.4	3.1
스웨덴	1.1	1.1	1.2	2.1	2.1	2.5	2.4	2.5
핀란드	0.8	1.0	1.1	1.3	1.2	1.1	1.1	1.1
아르헨티나								
그리스	-	0.0	2.1	1.9	2.1	1.7	1.6	1.5

자료 : OECD SOCX 홈페이지(2012. 3. 19 추출)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낮은 국가에서는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수준 또한 높지 않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실제적 역할과 영향에 비해 현재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는 다소 낮은 편임.
- 종교집단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체계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미국의 Giving USA(<http://www.givingusa.org>)는 개인 기부와 기부기관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모금액과 배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음.

2.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가. 개념

- 이혼 및 미혼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빈곤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의무화함.
- 선진국은 자녀양육비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양육비전담기관을 구축함. 양육비 전담기관은 비양육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징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복지급여와 함께 혹은 분리하여 양육비를 제공하며, 비양육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대지급(advance maintenance payments)과 구상권 행사를 대행하고 있음.⁴⁴⁾

44) 정부의 대지급은 일반조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기보다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징수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된다.

나. 국가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현황과 추이

1) 최근 현황

□ 선진국의 자녀양육이행시스템은 몇 가지 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음.

- 영국과 같이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자녀양육이행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국가들
 - 영국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공공기관의 자녀양육이행체계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즉 공공기관에서 자녀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규제의 기능까지 갖게 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칙과 확고한 산정식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음.
- 핀란드, 미국 등 공식적인 자녀양육이행체계가 있으나 그 역할이 지방마다 차이가 있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국가들
 - 자녀양육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에 있어 법원의 권한은 약한 반면 아동복지 기관이나 복지사무소와 같은 복지관련 공공기관이 개입함.
 - 핀란드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합의할 경우 사회복지위원회에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구속력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공공지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함.
- 법원을 통해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 자녀양육 및 양육비 지급이 지극히 사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법원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 분쟁으로 인식
 - 이러한 과정과는 별개로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며, 아동에 대한 책임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대 책임이므로 이와 별도로 공공부조를 통해 충분한 급여를 제공

-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공식적인 자녀양육이행체계는 필요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이행제도 역시 형식적으로는 이들 국가군에 속함.

〈표 12-3〉 자녀양육비이행제도 현황

구분	자녀양육결정의 개입			양육비 결정책임	양육비 결정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제도	양육비 지급제한 자녀연령	대지급
	부모	법원	기관						
한국	○ (법원 승인)	○	×	부모들의 합의, 안되면 법원	고정된 규칙이나 방식 없음	법원	×	부모합의, 혹은 20세 미만	×
핀란드	○ (사회복지 위원회 중재 혹은 확인)	○	○ 사회복지 위원회	부모, 사회 복지위원회, 부모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	대부분 재량권- 비공식적 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 위원회	×	18세	○
프랑스	○ (법원 승인)	○	×	법원	대부분 재량권,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 없음	법원과 사회보장 위원회	×	18세	○
독일	○	○	×	부모, 부모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	대부분 재량권 양육비 산정표 이용	법원	○	18세	○
스웨덴	○ (복지 위원회 확인)	○	×	법원	대부분 재량권, 비공식적인 지침	이행서비 스	×	18세	○
영국	○ (법원 승인)	○ (제한적 역할)	○ 아동 양육 기관 (CSA)	부모, 합의가 안될 경우 CSA, 수급자는 PWC	규칙/ 엄격한 산정식	법원과 아동지원 기관	×	16세, 혹은 전일제 학생의 경우 19세	○
미국	○ (법원 승인)	○	○ 아동양육 기관 (주별 상이)	법원	공식적인 지침	법원과 아동지원 기관	×	주별 상이 (16세- 25세)	×

주: 2010년 7월 1일 최종 업데이트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1.5)를 발췌하여 번역함.

2) 추이

- 자녀양육비를 받는 비사별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2004년 평균 50%미만으로 나타남.
-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에서는 한부모가족의 35% 내외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로부터 현금이전을 받고 있음.
 -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비동거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1994년 55.9%에서 2000년 46.3%로 감소
 - 영국과 미국은 최근 자녀양육이행기관의 효율성 강화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증가
 - 스웨덴에서는 비사별 한부모가족의 80% 이상이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음.

〈표 12-4〉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 비율

구분	한부모가족의 비율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		
	1994	2000	2004	1994	2000	2004
한국	7.4	7.9	8.6(2005)	-	-	-
핀란드	12.7	14.9	13.0	74.2	72.7	83.4
프랑스	10.0	12.6	n.a.	55.9	46.3	n.a.
독일	8.0	13.9	n.a.	n.a.	30.1	n.a.
그리스	3.4	3.1	n.a.	17.2	24.5	n.a.
스웨덴	24.1	21.2	21.9	85.4	92.6	100.0
영국	21.2	22.9	24.6	20.2	21.9	22.8
미국	28.0	20.1	21.5	28.8	34.1	33.7

주 : 비사별 한부모가족에 관한 것이므로 이혼과 미혼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만 포함.

1) 첫 번째 칸은 1994년경, 두 번째 칸은 2000년경, 세 번째 칸은 2004년경에 작성된 것임. 각국 자료의 정확한 년도는 OECD Family database를 참조.

자료 : Calculation on basis of the Luxembourg Income Study data; 한국은 이와 관련한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고 있음.

다. 우리나라에 주는 합의

-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의 부재로 인해 아동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급증하고 있음.
 -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불용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용률이 낮은 편임.
 - 양육비 이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상의 문제와 양육비 소송 후에도 양육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음.
- 상당수의 한부모가족이 빈곤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 전락하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를 둔 지원을 받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자녀양육비를 이행하는 법적·행정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절감하고 아동이 빈곤에 처할 위험을 제거하며, 비동거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임.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2012). **국민연금법령집**.
- 국민연금공단(2012). **2011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월별통계**.
- 국민연금연구원(2008). **공적연금의 이해**.
- 국민연금연구원(2010). **OECD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국민연금연구원.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 김미곤 외(2006). **최저생계비 계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마크브레이(2010). **세계 여러 나라의 사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손영우(2010).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과 퇴직연령 연장.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10월호**, pp. 13~21.
- 이용하(2007).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양승엽(2011). 프랑스의 2010년 연금개혁의 원인과 사후 경과.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2월호**, pp. 93~100.
- 양재진(2011). 스웨덴 연금제도의 이해와 쟁점 분석. **사회과학논집, 42(1)**, pp. 105-129.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덕란 외(2010).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전창환(2012). 2011년 미국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의 딜레마. **동향과 전망, 84호 2월**.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후생노동성(2010). **후생연금보험국민연금사업의 개요**.

후생노동성(2010). **일본연금기구의 주요통계(평성22년도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2011).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공적연금제도 연구**.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 OECD Indicators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 OECD Social Indicators.

OECD(2011). **OECD Factbook 2011–2012**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0).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
Europe - Germany*.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1). *The 2011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to the
Social Security Bulletin*, 2011, SSA Publication No. 13-1170, February,
2012 Released.

The Board of Trustees(2011). *The 2011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OASDI*.

UNPD(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http://statistics.dwp.gov.uk>

<http://stats.oecd.org/index.aspx>

<http://www.bis.org>

<http://www.direct.gov.uk/en/Pensionsandretirementplanning>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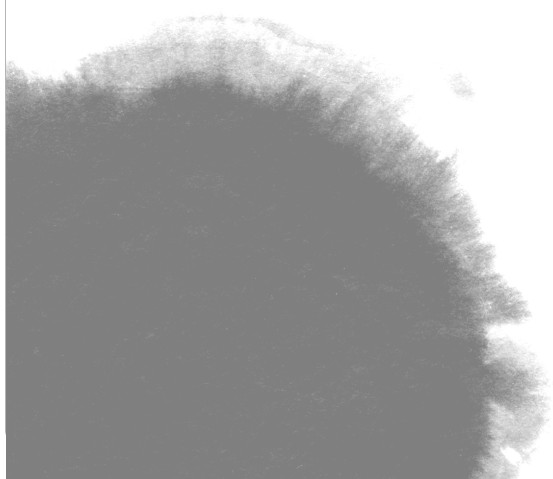
<http://www.mhlw.go.jp>

<http://www.sia.go.jp>

<http://www.ssa.gov>

<http://www.stat.go.jp>

2017



부록

1. 해외 주요국의 복지현황 조사표

최근 한국의 복지제도가 성장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앞으로 성숙단계를 준비하고자 선진국의 복지제도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귀국의 복지현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작성은 2010년 기준이며,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로 표기해 주십시오.

모든 자료에는 데이터의 출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조사기관 : 기획재정부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복지투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1) 귀국에서 OECD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여 제공하는 기관과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작성기관 :	
- 담 당 자 :	
- 이 메 일 :	

2) 귀국의 예산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얼마입니까?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복지지출 (A)									
총지출 (B)									
A/B (%)									

3) 귀국에서 저소득층의 기준은 무엇이며, 저소득층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3-1) 저소득층 기준 ()

3-2) 저소득층 규모 ()

4) 귀국에서 베이비부머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며, 몇 명이나 됩니까? 또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4-1) 기준 ()

4-2) 규모 ()

4-3) 지원정책 ()

2. 보육(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 본 문항은 만 3-5세 아동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10년 말 기준으로 귀국에는 자녀 출산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혹은 의료적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출산 지원 정책	제도 내용
출산 축하금	· 1인당 지원금액 : ()
출산전 검사비	· 지원 횟수 : 1인당 ()회 · 지원 금액 : 1인당 \$ ()
출산 후 예방 접종비	· 지원 횟수 : 1인당 ()회 · 지원 금액 : 1인당 \$ ()
기타	

2) 2010년말 기준 귀국의 전체 영유아 보육 시설은 총 몇 개소입니까? 이중에
서 공공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 시설의 수는 각각 몇 개소입니까?

		N개소
전체		
- 공공		
- 민간		
① 영리		
② 비영리		

3) 다음은 귀국의 직장 보육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2010년말 기준 귀국에서 기업이 직장 내 설치한 보육 시설 수는 몇 개소입니까? () 개소

②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① 예(현금지원) ② 예(현금+현물지원) ③ 아니요

4) 2010년 기준 귀국의 만 5세 이하 아동의 보육형태별 비율을 작성해주십시오.

	주된(primary or favorable)이용방법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교육시설)	부모 직접	조부모 · 이웃	베이비 시터	기타
이용아동수(명)						
비율(%)						

3. 교육(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 응답은 2010년 기준이며, 해당자료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해당연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1) 다음은 무상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① 귀국에서는 몇 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② 귀국에서는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소득기준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소득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a) 있다 (내용기술:)

b) 없다 ()

③ 귀국에서는 어느 학교급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학교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무상교육 지원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기타 등 해당하는 범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기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⑤ 무상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모 지원	학교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 다음은 사교육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등록금과 학교급식비를 제외하고 귀국의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연 평균 얼마나 됩니까?

② 귀국의 연간 사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③ 귀국의 연간 사교육비는 GDP 대비 얼마나 됩니까?

3) 다음은 무상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초·중·고등학교의 한 끼당 급식비는 평균 얼마입니까?

②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③ 귀국에서는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소득기준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소득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있다 (내용기술.)
- ② 없다 ()

④ 귀국에서는 어느 학교급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학교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년				

⑤ 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현금 지원	학교에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보건·의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1) 귀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 ① 사회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 1-1)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②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 → 3)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③ 민간보험방식(Private Health Insurance) → 2)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 National Health Insurance(NHI)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 의료서비스 이용시 일부를 보험금으로 제공해주는 방식이고, National Health Service(NHS)은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국유화된 의료기관을 통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을 경우 Private Health Insurance 선택

① 귀국이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총 진료비 대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몇 %입니까? () %

② 2010년의 건강보험 수지는 얼마이며, 2010년 말 기준 누적수지는 얼마입니까?

	2010년 연간 건강보험 수지	2010년 말 기준 누적수지
\$		

③ 2010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에 투입된 연간 정부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 ()

④ 지난 10년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지출 추이를 제시해주세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출액(\$)										

2) 2010년 기준 공공 또는 민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몇 %입니까?

() %

3) 2010년을 기준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와 암에 걸렸을 때 평균적으로 환자 본인의 부담률은 각각 몇 %입니까? 또한 평균 지출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

	본인부담률(%)	평균지출비용(\$)
감기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4) 2010년 기준 귀국 병원의 의료수가는 얼마입니까? 다음 항목별로 대답해주시고, 병원별로 가격이 다를 경우 그 범위를 써주세요(예: 50달러~200달러)

항목	의료수가(\$)	
	공공	민간
초진료		
위내시경		
MRI 촬영		
CT 촬영		
엑스레이 촬영		
관상동맥 우회술		
맹장수술		

- * 의료수가란 건강보험공단, 민간보험회사, 환자가 병원에 내는 비용의 합을 의미
- * 평일 낮 기준
- *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수가가 다른 경우 각각 기입

5) 귀국에서 환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 혹은 방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 한국의 경우, 병원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고,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나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1차 의료기관은 작은 의원, 2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은 대형 대학병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환자가 생기면 먼저 주로 동네의 작은 의원에 방문합니다. 물론 응급환자의 경우 대학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6) 귀국에서는 약사가 없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 7)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① 있다면, 어떤 종류가 구매 가능합니까?

()

예)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은 모두 구매가능, 소화제와 진통제만 구매가능 등

7) 2010년 기준 총 의약품 처방건수 중 항생제 처방률은 몇 %입니까?

() %

8) 2010년 기준 의약품 처방건수 당 약 품목수는 몇 개입니까?

() 개

5.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제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하에 공비 부담으로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와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공공부조를 실시하고 있음.

1) 다음은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귀국에서는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Program)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까?

④ 있다 () ⑤ 없다 () → 2)번 문항으로 가주세요

②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 부양의무자 기준: 빈곤한 사람을 부양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친족의 기준.

* 한국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임

2) 귀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반드시 금전에 한정되지는 않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 한국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출산)급여, 장제(葬祭)급여, 자활(自活)급여로 분류됨.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급여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비용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급여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의 비용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급여

3) 2010년 기준 소득이하이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은 기준소득의 몇 %입니까?

	급여수준(%)	기준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 기준소득의 예 : 가구규모별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

4) 대상자 선정의 결정 주체는 누구입니까?

()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위탁받은 민간 등

5)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어떠한 주기(매월, 매주, 2주 등)로 지급합니까?

()

* 급여종류별로 주기가 다를 경우 각각 표기

6)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됩니까?

지급주체	지급방식
㉠ 지방정부	㉠ 현금수령
㉡ 국세청	㉡ 계좌이체
㉢ 보건복지관련 중앙부서	㉢ 우편환
㉣ 우체국	㉣ 기타()
㉤ 기타()	

7) 수급자가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예) 수급자의 근로 소득에 비례하는 추가적인 금전지원 등
* 한국은 자활소득공제가 있음

6. 장애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1) 2010년을 기준으로 귀 국가의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 산출 기준은 무엇입니까?

1-1)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 () %

1-2) 장애인구 산출 기준 또는 근거* ()

* 한국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록 및 등급심사

2) 귀 국가의 장애 관련 무기여 현금급여는 무엇이며, 급여의 수급 기준이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현금급여의 종류를 기재하고 해당되는 기준에 모두 √하여 주십시오)

	현금급여 종류*		급여 수급 조건			
			의학적 기준	근로능력 유무	소득 기준	기타
1	<input type="checkbox"/> 기여 <input type="checkbox"/> 무기여					
2	<input type="checkbox"/> 기여 <input type="checkbox"/> 무기여					
3	<input type="checkbox"/> 기여 <input type="checkbox"/> 무기여					
4	<input type="checkbox"/> 기여 <input type="checkbox"/> 무기여					
5	<input type="checkbox"/> 기여 <input type="checkbox"/> 무기여					
6	<input type="checkbox"/> 기여 <input type="checkbox"/> 무기여					

3) 최근 10년간 귀 국가의 근로가능연령대(16-64세) 장애인의 고용율을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장애인 고용률										
비장애인 고용률										
상대적 고용률*										

* 상대적 고용율은 비장애인 고용률 대비 장애인의 고용률을 의미
(장애인고용율/비장애인고용률)*100

4) 최근 10년간 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얼마입니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률(%)										

5) 최근 10년간 귀 국가의 기여에 기반을 둔 소득보전급여(현금급여)로서 평균소득대체율은 얼마입니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득대체율 (%)										

7. 노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1) 귀 국에서는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몇 세입니까? () 세

* 한국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음.

2) 귀 국은 고령자*의 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 있습니까?

㉠ 있다(대표적인 정책내용 :)

㉡ 없다

* 55세 또는 60세 이상

3) 귀 국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향상을 위해 고령자만 고용될 수 있는 직종이나 공공기관(또는 민간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비율 등의 정책이 있습니까?

㉠ 있다(의무고용비율 : %)

㉡ 없다

4) 법정 은퇴 연령이 있다면 몇 세입니까? () 세

5) 귀 국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 외에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수당)가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의 표를 작성해주십시오

	수당종류	1인당 급여액	연간정부총지출액	수급조건
1	예) 기초노령연금			
2				
3				

* 한국의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6) 귀 국의 노인들이 장기간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귀 국의 장기요양(Long-term care) 정책의 대상자 규모(노인대비 비율),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재원(조세 또는 보험금), 정부의 년 소요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① 대상자 규모(65세 이상 노인인구대비 비율) : () %

② 서비스의 종류 : ()

③ 정부의 년 소요예산 : \$ ()

8. 아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1) 2010년 기준 귀국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종류별로 몇 개이며 각각의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은 몇 명입니까?

	아동복지시설 종류	개소	보호아동 수
1			
2			
3			
4			

*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 상담소,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습니다.

2) 귀국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아동 수당 제도가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9. 여성(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1) 최근 10년간 여성과 남성의 산전후 및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산전후휴가 이용자수	계										
	여성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수	계										
	여성										
	남성										
아버지휴가 이용자수	남성										

10. 국민연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화연)

* 해당 국가에서 다층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주시시오.
 * 1층은 기초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이고 2층은 강제가입인 소득비례연금제도, 3층은 적립형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또는 고령자를 위한 추가연금제도 등을 뜻함.
 - 1층(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Minimum Pension, Guaranteed Pension 등)
 - 2층(Income-related Pension or Additional Pension 등)
 - 3층(Premium Pension, Advanced Old-age Pension 등)

1) 귀국에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납부액의 몇 퍼센트나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① 도입여부

② 예 ③ 아니오

④ 지원 비율 및 지원 대상

	정부지원(%)	지원대상*
1층		
2층		
3층		

* 한국은 농업·농업 및 축산업 경영자와 종사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
 * 지원대상의 예: 농어업민, 모든 근로자, 특정 근로자(저소득근로자, 산전후휴직자, 구직급여 수급자 등) 등

2) 귀국에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납부액의 몇 퍼센트나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2-1) 도입여부

① 예 ② 아니오

2-2) 지원 비율 및 지원 대상

	사용자지원(%)	지원대상*
1층		
2층		
3층		

* 예: 모든 근로자, 특정 근로자(저소득근로자, 산전후휴직자, 구직급여 수급자 등) 추가지원 등

3) 귀국에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층	2층	3층
최소가입기간(개월)			

* 한국에서는 만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연금형태로 수급할 수 있음

4) 귀국의 2010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을 작성해주십시오

		1층	2층	3층
전체 65세이상 노인인구				
수급자수 (명)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부분노령연금			
노령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				

* 한국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 60세가 되면 “완전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60세 이전에 조기은퇴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감소할 때 본인 신청에 따라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부분노령연금”은 노령연금액 전부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일부는 받고 일부는 연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임.

11. 주택(국토연구원 이수욱)

1) 공공임대주택

① 귀 국에서 공공임대 주택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며, 유형별 수는 얼마나 되고, 각 유형별 주요 특성은 무엇입니까?

유형	N	주요특성

* 주요특성으로 입주대상, 자금지원 방식, 건축주체, 최장임대기간 등

② 최근 20년간 귀 국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수는 얼마입니까?

	1990	1995	2000	2005	2010
대기자수					

③ 최근 10년간 귀 국의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수와 공급 관련 정부예산은 얼마입니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장기(10년이상) 공공임대주택수										
예산액(\$)										

④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을 내는지 여부와 낸다면 보증금은 얼마입

니까?

- ⑤ 임대주택 입주자가 동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2) 주거자금지원 정책

- ① 최근 20년간 귀 국의 임차가구 주거자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대상 가구수와 관련 정부예산은 얼마입니까?

	1990	1995	2000	2005	2010
수혜대상 가구수					
정부예산(\$)					

- ② 최근 20년간 귀 국의 자가가구 주거자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 가구수와 관련 정부예산은 얼마입니까?

	1990	1995	2000	2005	2010
수혜대상 가구수					
정부예산(\$)					

12. 기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 1) 귀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입니까?